

축 사



민주정책연구원 부설 「청년정책연구소」의 발족과 「청년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그리고 복지정책의 방향」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청년들의 고단한 삶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간에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도 널리 회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왜 아파야만 하는지, 다 함께 아프지 않고 행복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이제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청년들은 등록금 1천만 원 시대에 88만원 비정규직 일자리를 전전하는 서글픈 세대로 전락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의미의 삼포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비명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작도 해보기 전에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공감이나 단편적인 위로가 아닐 것입니다. 청년은 대한민국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취업대란을 비롯한 청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발족하는 청년정책연구소가 청년들이 겪는 현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함으로써, 대한민국 모든 청년이 안녕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오늘 개최되는 토론회에서도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과 청년 복지 정책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정책연구소가 설립되기까지 애쓰신 이언주 소장님과 자문단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토론회에 발제를 해주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병유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이정봉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을 비롯해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 2. 25

민주당 대표 김대중

축 사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원내대표 전병헌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 11조원을 일자리 만들기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럼에도 청년 고용률은 사상 처음으로 3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30%대 청년 고용률은 정부가 2017년까지 목표로 한 47.7%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국내 청년 실업자 수가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취업준비생도 60만 명에 이르고 20, 30대는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주위에서 청년 실업자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을 정도이며 전망이 좋은 대기업과 안정된 정규직에 들어가기 위해 취업 재수는 기본이고 졸업까지 늦추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일할 곳을 찾지 못하는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일을 함으로써 경제적인 자립은 물론 자존감과 삶의 질이 높아질 것입니다. 청년들이 실업의 고통에서 헤어나 희망찬 생활을 설계하도록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일자리 정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최선의 청년 대책인 동시에 복지 정책인 것입니다.

오늘 민주정책연구원 부설 청년정책연구소 발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현안에 대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연주 소장님을 비롯한 ‘청년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그리고 복지정책의 방향’토론회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2. 25

민주당 원내대표 전 병 헌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변재일입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민주정책연구원 부설 청년정책연구소 발족식 및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지속적인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당의 중장기전략과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민주정책연구원’ 산하에 ‘청년정책연구소’를 설립하여 오늘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발족식과 함께 준비한 ‘청년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그리고 복지정책의 방향’ 토론회는 청년관련 주요 정책 현안과 이슈를 점검하고 바람직한 대안과 연구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준비한 자리입니다. 청년 관련 정책개발을 위한 토론의 자리인 만큼 기탄없이 의견을 주셔서 청년을 위하여 정말로 실효성 있는 종합적인 정책을 개발하는데 밑거름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IMF 경제위기 등을 겪으면서 고용없는 성장과 장기적인 실업이 사회문제화 되어 왔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미진한 상황에서 청년층은 졸업연기와 취업준비 장기화, 주거와 등록금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지속적으로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하지 않아 작년 청년층(15~29세)은 지난해 가장 극심한 취업난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청년 고용률이 최악인데도 인력난에 시달리는 기업도 있습니다.

일자리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등 더욱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청년고용 확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자리 문제 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근로빈곤, 청년층 1인가구 증가로 인한 주거문제, 대출 받은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사회생활의 제약 등 미래세대인 청년에게 희망을 빼앗아 가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청년정책연구소’ 발족을 통하여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민주당’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민주당이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청년정책연구소 소장을 맡아 주신 이언주 의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2. 25

민주정책연구원장 변 재 일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부설 청년정책연구소 소장 이언주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오늘 “청년정책연구소 발족식 및 정책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해 12월 고려대 한 학생의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로 시작된 ‘안녕들’ 열풍은 대학가를 넘어 대한민국 곳곳에 퍼져 나간 것을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처음에는 정부에 대한 막연한 비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학자금 연체, 졸업연기와 취업준비 장기화로 가구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청년들의 고통을 정치권이 제대로 덜어주지 못하면서 발생한 측면이 크다는 것을 통감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의 고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돕기 위해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청년정책연구소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청년정책연구소는 청년층 맞춤형 정책개발로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 설계하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청년층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청년계층의 욕구에 부합되는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및 청년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거, 의료, 학자금 등 지원방안 연구할 것입니다. 더불어 조기 은퇴한 부모세대와의 세대 갈등·일자리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통합, 사회연대 정책연구를 지속해 건강한 세대연대를 꾀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청년세대와 직접 소통할 것입니다. 전국단위 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정기적인 타운홀 미팅을 통해 청년들을 대변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과 정책의 실질적인 접점을 위해 민간연구소,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정책세미나, 토론회 등 다양한 공동연구 및 정책개발을 할 것입니다.

오늘 발족식과 함께 ‘청년실업해소, 일자리 창출 그리고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함께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설계를 위해 자리해주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태완 박사님, 한신대 전병유 교수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정봉 연구원님, 청년유니온 정준영 정책국장님,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년정책연구소 소장으로써 대한민국 청년들이 안녕할 때 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가 청년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소중한 발판이 되길 기원하며 참석해주신 모든 분과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 2. 25

청년정책연구소 소장 이 언 주



CONTENTS

■ 축 사

김한길 민주당 대표	i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ii

■ 인사말

변재일 민주정책연구원장	iii
이언주 청년정책연구소장	v

■ 토론회

발제1. 청년근로빈곤 현황과 복지지원 방안-----	1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2. 청년 고용의 현황과 정책 개선 방안-----	9
전병유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발제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13
이정봉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발제4. 청년의 노동환경 실태와 개선 과제-----	4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발제5. 청년이 희망인 나라, 청년을 최우선시하는 나라를 향해-----	75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청년근로빈곤 현황과 복지지원 방안

김 태 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청년근로빈곤 현황과 복지지원 방안

김 태 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 들어가며

- 빈곤계층을 논하는데 있어 주요 쟁점화되지 않는 계층이 청년층이라 할 수 있음. 국내의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청년층의 경우 노인 다음으로 높은 빈곤율을 보여주고 있지만, 정부정책의 주요 관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¹⁾
- 청년층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점은 현세대 청년층이 경험하고 있는 청년실업과 빈곤의 문제임
 - 청년실업과 관련해서는 오랜 기간 많은 연구들을 통해 그 현상과 정책방안들에 논의가 진행되어 왔지만 여전히 높은 실업률을 경험하고 있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개선되는 효과는 낮은 것으로 보임
 - 청년실업 현상과 대비하여 청년빈곤층이 경험하고 있는 빈곤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특히 청년층의 실업기간이 지속되면서 소득활동 부족으로 인한 빈곤과 비정형적 취업으로 인한 낮은 임금소득은 청년층의 근로빈곤의 문제를 심화시키는 원인이라 할 수 있음
- 여기서는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빈곤의 현황 특히 근로빈곤의 문제를 살펴보고 청년층이 경험하고 있는 실업과 빈곤의 관계,
 - 실업과 빈곤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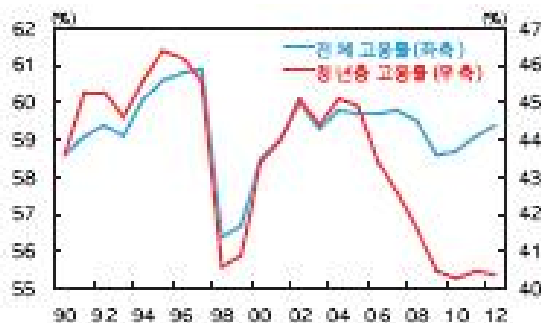
1) 김수정(2010), 청년층의 빈곤과 이행의 곤란, 사회보장연구 26권 3호, 한국사회보장학회. 김태완 외(2012), 청년층 근로빈곤 실태 및 지원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Iacovou, M.(2009), Crossing-national comparative research with longitudinal data: research into youth poverty, 21st Century Society, Vol.4, No.2, pp149~160.

II. 청년층 근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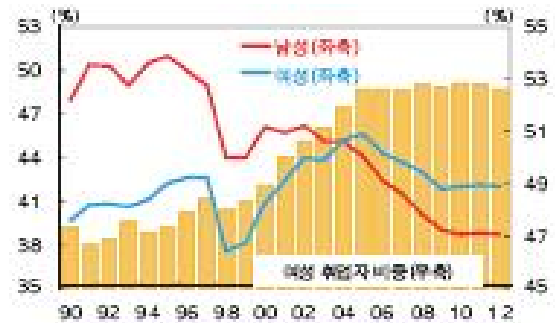
□ 통계청 자료를 통해 청년층의 고용률 추이를 보면 전체 고용률과 비교시 2000년대 중반까지는 비슷한 양상으로 보이다 2000년대 중반이후 전체고용률과는 큰 편차를 보여주고 있음

- 청년층의 고용률을 성별로 구분시 2000년대 중반이전에는 남성 청년층의 고용률이 여성들에 비해 높았지만 이후에는 오히려 여성들의 고용률이 남성에 비해 높아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1] 전체 및 청년층 고용률 추이



[그림 2] 청년층 성별 고용률



자료: 나승호·조승호 외(2013), 청년층 고용현황 및 시사점, BOK 경제리뷰 2013-15, 한국은행, 재인용

□ 실업률 추이를 통해 장년층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30~59세의 장년층과 비교시 청년들의 고용상황이 개선되는 효과는 크게 나타나고 있지 못함.

- 2000년대 초반에 비해 그 격차가 증가하여 2011년 기준으로 3배 이상의 실업률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표 1〉 청년층 실업률 추이 및 장년층과의 실업률 차이

(단위: %, 배)

구 분	청년층(A)	장년층(B)	A/B	장년층(C)	A/C
2000	8.1	3.3	2.45	3.5	2.31
2001	7.9	2.8	2.82	3.0	2.63
2002	7.0	2.2	3.18	2.4	2.92
2003	8.0	2.3	3.48	2.5	3.20
2004	8.3	2.4	3.46	2.6	3.19
2005	8.0	2.6	3.08	2.8	2.86
2006	7.9	2.4	3.29	2.5	3.16
2007	7.2	2.3	3.13	2.5	2.88

구 분	청년층(A)	장년층(B)	A/B	장년층(C)	A/C
2008	7.2	2.3	3.13	2.4	3.00
2009	8.1	2.7	3.00	2.9	2.79
2010	8.0	2.8	2.86	2.8	2.86
2011	7.6	2.6	2.92	2.5	3.04

주: 1) 청년층은 15~29세, 장년층(B)은 30세 이상, 장년층(C)은 30~59세를 의미(실업률은 구직기간 4주 기준임)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KOSIS), 각년도

□ 우리나라 청년들의 낮은 고용률과 높은 실업률 문제는 한국에만 국한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대 들어 전세계적으로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임

- ILO자료에 의하면 2000년들어 감소하던 청년실업률은 2009년의 유럽재정위기를 경험하면서 급격하게 상승하여 2013년 예측치 기준으로 12.6%(73.4백만명)의 청년들이 실업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전세계 청년층 실업규모 및 실업률 추이



자료: ILO(2013), Global Employment Trends for Youth 2013: A generation at risk. 재인용

□ 청년층의 비경제활동 상태에 가장 많은 비중을 점유하는 것은 학교교육으로 2012년 기준 390만명으로 그 추이가 증가

-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아무런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NEET족은 2005년 약 57.7만명에서 2012년에는 72.4만명으로 약 15만명 가량 증가함

〈표 2〉 비경제활동 상태별 청년층 변화 추이

(단위: 만명)

구 분	2005(A)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B)	B-A
육아·가사	57.1	52.1	50.1	47.6	46.6	43.1	39.7	36.0	-21.0
정규교육기관 통학	348.9	366.9	382.5	391.4	393.9	392.1	390.8	393.4	44.5
학원 통학	26.4	25.6	24.7	26.2	25.0	26.1	24.3	22.1	-4.3
취업준비	17.6	23.2	24.4	27.4	25.6	25.9	24.7	26.9	9.3
진학준비	12.2	12.1	13.0	11.9	13.9	17.3	16.7	13.8	1.5
쉬었음	27.8	25.8	24.5	24.9	29.7	27.4	30.9	31.7	3.9
기 타	18.3	15.2	13.4	13.0	12.9	13.2	11.8	12.2	-6.1
NEET ¹	57.7	61.1	61.8	64.2	69.2	70.7	72.3	72.4	14.8
합 계	508.3	520.9	532.5	542.3	547.7	545.1	539.0	536.1	27.7

주: 1) 취업준비, 진학준비, 쉬었음 등 포함

자료: 나승호·조승호 외(2013), 청년층 고용현황 및 시사점, BOK 경제리뷰 2013-15, 한국은행, 재인용

III. 청년근로빈곤 실태

- 빈곤율은 전체인구의 빈곤율과 전체인구 중 청년층²⁾(15~34세), 근로층(15~64세, 취업자), 청년근로층(15~34세, 취업자)의 빈곤율로 구분하여 비교
- 전국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09년에 전체빈곤율(13.0%)과 근로빈곤율(6.9%)이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2008년 미국금융시장에서 비롯된 금융위기 사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2008년 말 정점에 다다르며 청년근로층의 빈곤율도 높게 나타남.
 - 청년근로빈곤율은 2003년(4.8%)부터 2005년(6.2%)까지 증가하다 2006년(5.0%)부터 2008년(4.4%)까지는 정체하는 듯 보였으나 2009년 4.9%의 높은 수치를 나타낸 뒤 감소하여 2011년에는 4.2%로 다소 낮은 빈곤율을 보여주고 있음.

〈표 3〉 상대적 빈곤율(전국기준)

(단위: %)

구분	빈곤율	청년빈곤율	근로빈곤율	청년근로빈곤율
2003	11.4	8.1	6.0	4.8
2004	12.1	8.3	6.6	4.7
2005	12.8	9.4	6.9	6.2

2) OECD 정의에 따르면 청년은 15~24세의 젊은층을 지칭하지만 청년에 대한 현실적인 정의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우리나라의 경우 군복무 등으로 인해 통계청은 15~29세까지 확대적용하고 있으며, 김수정의 연구(2010)와 동일하게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을 15~34세까지로 확대 정의하고 있다.

구분	빈곤율	청년빈곤율	근로빈곤율	청년근로빈곤율
2006	12.7	9.0	6.3	5.0
2007	12.9	8.9	6.5	4.4
2008	12.9	9.9	6.5	4.4
2009	13.0	10.0	6.9	4.9
2010	12.5	9.1	6.3	4.6
2011	12.3	8.8	5.9	4.2
2006 ²⁾	13.8	8.9	6.3	4.9
2007 ²⁾	14.4	9.0	6.7	4.2
2008 ²⁾	14.6	9.6	6.7	3.9
2009 ²⁾	14.8	10.2	7.0	4.8
2010 ²⁾	14.3	9.0	6.5	4.4
2011 ²⁾	14.3	8.7	6.1	3.9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2) 1인가구 포함,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 가구빈곤율은 가구주를 기준으로 가구주가 청년(15~34세), 근로자(15~64세, 취업자), 청년근로자(15~34세, 취업자)인 경우로 분석하였으며 개인빈곤율과 유사하게 세계적인 금융위기인 2008년, 2009년의 빈곤율이 높게 나타났음
- 청년근로빈곤율을 보면 1인가구를 제외한 경우, 2003년 6.5%에서 2004년, 2005년 다소 증가했으나 다시 감소. 또한 2008년 금융위기에도 여전히 감소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5.2%로 나타남.
 - 1인가구를 포함한 전체가구를 보면 2008년 3.2%로 가장 낮은 빈곤율을 보였으나 2011년 4.3%로 증가

〈표 4〉 상대적 가구빈곤율(전국기준)

(단위: %)

구분	빈곤율	청년빈곤율	근로빈곤율	청년근로빈곤율
2003	12.8	8.3	7.5	6.5
2004	13.4	9.4	8.7	7.3
2005	14.1	9.4	9.3	7.3
2006	14.2	8.7	8.4	6.3
2007	14.4	8.4	9.0	6.4
2008	14.6	8.2	8.8	5.6
2009	14.8	8.5	8.8	5.5
2010	14.3	10.7	8.4	5.9
2011	14.1	8.1	8.1	5.2

구분	빈곤율	청년빈곤율	근로빈곤율	청년근로빈곤율
2006 ²⁾	16.8	9.1	8.0	5.1
2007 ²⁾	17.6	8.8	8.9	5.0
2008 ²⁾	18.2	7.3	8.6	3.2
2009 ²⁾	19.0	10.5	8.6	4.5
2010 ²⁾	18.7	12.8	8.8	4.3
2011 ²⁾	18.7	9.0	8.4	4.3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2) 1인가구 포함,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15~24세, 25~34세로 구분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15~24세 청년근로자의 빈곤율이 25~34세의 청년근로자의 빈곤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2011년으로 갈수록 그 차이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15~24세의 경우 2005년 7.4%로 높은 값을 보이며, 2009년 이후 빈곤율이 급격히 높아지며 2011년에는 7.7%로 최고치에 달함. 반면 25~34세의 경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비슷한 비율로 유지하다 2011년에는 감소.
 - 또한 금융위기인 2009년의 빈곤율을 제외하면 15~24세의 청년근로빈곤율은 2011년까지 증가하고 있는 반면 25~34세의 청년근로빈곤율은 꾸준히 감소하였다. 즉, 같은 청년층의 경우에도 연령이 낮을수록 근로빈곤율이 높게 나타난다(표5 참조).
 - 청년가구의 연령별 상대적 빈곤율을 보면 15~24세의 경우가 25~34세의 경우보다 빈곤율이 높게 나타남.
 - 이는 25세 이상이 되면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고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또한 15~24세의 빈곤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나는 경우는 자료상 가구주의 수가 적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표 5〉 청년근로층 연령별 상대적 빈곤율(전국기준)

(단위: %)

구분	개인		가구	
	15~24세	25~34세	15~24세	25~34세
2003	4.4	4.9	10.8	6.3
2004	4.2	4.8	15.7	6.9
2005	7.4	5.8	15.2	6.9
2006	4.6	5.2	16.1	5.7
2007	5.1	4.2	32.7	5.2
2008	5.4	4.2	15.3	5.3
2009	7.2	4.3	15.7	5.3
2010	6.4	4.1	10.1	5.9

구분	개인		가구	
	15~24세	25~34세	15~24세	25~34세
2011	7.7	3.3	18.2	5.0
2006 ²⁾	4.8	4.9	10.3	4.6
2007 ²⁾	5.4	3.9	17.0	4.1
2008 ²⁾	5.6	3.6	9.1	2.9
2009 ²⁾	6.8	4.3	11.5	4.2
2010 ²⁾	6.3	3.9	6.3	4.2
2011 ²⁾	7.5	3.0	13.0	4.0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2) 1인가구 포함,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 청년가구주의 성별을 비교해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높은 빈곤율을 보임. 개인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는 여성의 근로빈곤율이 남성보다 낮았으나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는 여성의 빈곤율이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그 이유는 여성가구주의 경우 남성가구주의 비해 노동시장에서 불리하고 그 결과 소득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표 6〉 청년근로층 성별 상대적 빈곤율(전국기준)

(단위: %)

구분	개인		가구	
	남	여	남	여
2003	5.7	3.7	5.6	12.6
2004	5.4	3.9	6.2	14.0
2005	5.6	6.7	6.5	11.6
2006	5.2	4.9	5.2	12.1
2007	4.2	4.6	4.5	15.8
2008	5.5	3.3	4.8	9.8
2009	5.2	4.6	4.5	11.8
2010	4.6	4.7	4.2	16.2
2011	3.9	4.6	4.3	10.3
2006 ²⁾	4.8	4.9	4.0	9.4
2007 ²⁾	4.1	4.3	3.8	8.8
2008 ²⁾	4.7	3.1	3.0	3.8
2009 ²⁾	5.0	4.6	3.5	8.3
2010 ²⁾	4.1	4.7	2.6	10.3
2011 ²⁾	3.7	4.2	3.7	6.5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2) 1인가구 포함,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 학력이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고졸이하와 대학이상의 학력으로 구분하여 청년근로층의 상대적빈곤율을 비교

- 고졸이하의 청년근로층의 빈곤율이 대학이상 청년근로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금융위기인 2009년에는 그 차이가 확연히 크게 나타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음.
- 청년가구주의 경우 고졸이하, 대학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빈곤율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음. 대졸이상이 고졸이하보다 현저히 낮은 이유는 노동시장에서 고졸이하보다 대학이상인 경우 상용직일 가능성이 높고, 안정된 소득은 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임.

〈표 7〉 청년근로층 학력별 상대적 빈곤율

(단위: %)

구분	개인		가구	
	고졸이하	대학이상	고졸이하	대학이상
2003	5.5	2.9	9.8	3.7
2004	5.4	2.8	12.0	3.6
2005	7.3	3.4	12.5	3.8
2006	5.7	3.5	10.0	3.7
2007	4.9	3.2	9.3	4.6
2008	4.9	3.5	8.9	4.2
2009	8.6	3.7	11.0	3.6
2010	7.7	3.6	10.7	4.3
2011	6.9	3.5	8.0	4.2
2006 ²⁾	5.6	3.3	8.2	3.1
2007 ²⁾	4.6	3.2	7.0	3.8
2008 ²⁾	4.5	2.9	6.9	1.7
2009 ²⁾	8.9	3.5	9.4	2.7
2010 ²⁾	7.4	3.4	8.2	2.8
2011 ²⁾	6.6	3.2	7.7	3.1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2) 1인가구 포함,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 다음은 패널자료의 특성을 이용하여 청년근로빈곤층의 빈곤형태 추이를 분석. 청년근로 빈곤층 동태적인 변화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 활용함

□ 먼저 2005년부터 2011년의 자료를 2005~2007년, 2008년~2011년의 두 기간으로 나누어 전후의 빈곤형태를 비교하였으며³⁾, 빈곤의 동태적 형태는 4가지로 구분.

3) 두 시기로 구분한 이유는 2008년은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한 시점이며, 이로 인해 노동시장에 많은 영향을

- 지속빈곤은 3개년 이상 빈곤이 지속된 경우, 반복빈곤은 2개년이 빈곤상태인 경우, 일시빈곤은 동기간에 한번만 빈곤이 존재한 경우, 마지막으로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를 비빈곤으로 정의하였다(OECD, 2008).

□ <표 8>을 통해 보면 지속빈곤의 경우는 높지 않았으며, 양 기간에도 감소하고 있다. 반복빈곤의 경우에는 전기에 1.66%에서 다음기에는 1.76%로 소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일시빈곤은 전기 8.36%, 다음기 7.83%로 지속 및 반복빈곤에 비해 높았으며, 비율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표 8〉 2005~2007년과 2008~2011년 빈곤형태 비교

(단위: %)

빈곤형태	2005~2007년 3년간	2008~2011년 4년간
지속빈곤	0.55	0.37
반복빈곤	1.66	1.76
일시빈곤	8.36	7.83
비빈곤	89.43	90.05
계	100.00	10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1차(2005년)~7차(2011년), 원자료

□ 총 7차까지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빈곤형태를 살펴보고자 함. 빈곤형태는 앞의 분석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하였으며, 그 기준은 다소 다르게 적용.

- 2005년부터 2011년의 기간 동안 4번 연속 빈곤이 존재할 경우를 지속빈곤, 1번의 빈곤이 나타난 경우는 일시빈곤, 빈곤을 한번도 경험하지 않은 경우는 비빈곤, 이 외 나머지의 사례는 반복빈곤으로 정의

□ 지속빈곤은 0.24%로 낮은 반면에 반복빈곤 및 일시빈곤의 비율은 다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음. 한번이라도 빈곤을 경험한 일시빈곤 형태의 비율이 10.08%, 반복빈곤 형태의 비율이 3.57%로 나타나 청년 10명 중 한 명 이상이 근로빈곤을 경험했으며, 일부는 지속 또는 반복적으로 빈곤을 경험하고 있었음.

미치게 된다. 이미 유럽의 자료들에서도 동 시기에 청년층이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두 시기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표 9〉 2005~2011년 7년간 빈곤형태

(단위: %)

빈곤형태	2005~2011년 7년간
지속빈곤	0.24
반복빈곤	3.57
일시빈곤	10.08
비빈곤	86.11
계	10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1차(2005년)~7차(2011년), 원자료

□ 지난 7년간 2번 또는 3번의 빈곤경험을 한 반복빈곤집단의 경우 여성보다는 남성의 비율이 59.72%로 높았으며 한 번의 빈곤경험을 한 일시빈곤집단은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59.81%로 높게 나타났다.

- 가계동향조사를 통한 청년 근로빈곤에 대한 횡단면 분석에서도 남녀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음.
- 학력수준별 빈곤형태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보면 반복빈곤집단의 경우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인 경우가 42.31%로 가장 높았으며 일시빈곤집단의 경우 대학교 이상의 학력인 경우가 37.09%로 가장 높았음.
- － 반복빈곤과 일시빈곤 모두 전문 대학교 이상의 학력으로 분석시 빈곤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고학력임에도 불구하고 빈곤경험을 한 청년층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10〉 빈곤형태별 특성별 비율

(단위: %)

구분		반복빈곤	일시빈곤
성별	남	59.72	40.19
	여	40.28	59.81
학력별	초등학교졸	0.23	—
	중학교졸	2.40	2.38
	고등학교졸	42.31	34.33
	전문대학졸	21.09	26.21
	대학교졸 이상	33.96	37.0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1차(2005년)~7차(2011년), 원자료

□ 다음으로 청년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상태별로 빈곤의 동태적 변화를 살펴보면 반복빈곤과 일시빈곤을 경험한 청년층 모두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1〉 빈곤형태별 경제활동상태 비율

(단위: %)

구분	반복빈곤	일시빈곤
상용직 임금근로자	27.47	35.85
임시직 임금근로자	21.48	34.20
일용직 임금근로자	25.24	15.57
자활근로, 공공근로	1.03	0.47
고용주	—	0.61
자영업자	7.96	5.55
무급가족종사자	6.02	3.09
실업자	10.80	4.6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1차(2005년)~7차(2011년), 원자료

□ 상용직 임금근로자⁴⁾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지만 반복 및 일시빈곤을 경험한 청년들이 많이 있다는 점임.

- 반복빈곤집단의 경우 상용직(27.47%)과 임시(21.48%)·일용직(25.24%)의 비율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특히 일시빈곤집단에 비해 실업자의 비율이 10.8%로 높게 나타났음.
- 즉, 임시·일용직일수록 반복빈곤을 경험할 확률이 높으며, 상용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7년간 한번은 빈곤을 경험할 확률이 나타남
- 실업자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반복빈곤 또는 일시빈곤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안정적 일자리로 보내기 위한 방안들도 함께 마련

4) 현재 상용직에 있어도 청년층이 직업적으로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즉 2011년 기준 상용직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7년 기간 동안 반복빈곤과 일시빈곤을 경험한 확률이 높게 나타나는 상용직의 직종에 대해 살펴보았다. 반복빈곤을 경험한 청년근로빈곤자 중 사무 종사자가 40.66%로 이 직종에는 행정사무원, 금융 및 보험관련 사무 종사자가 포함되며, 31.22%의 단순노무 종사자에는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또한 일시빈곤을 경험한 청년근로자들의 상용직 임금근로자들의 직종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31.83%로 가장 높았으며 여기에는 간호사, 학교교사, 유치원교사가 포함되며, 27.51%인 사무 종사자 중에는 회계 및 경리사무원, 경영관련 사무원이 포함된다. 12.83%인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에는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주조 및 금속 가공관련 기계조작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부록표 1>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빈곤형태별 직종 비율

(단위: %)

구분	반복빈곤	일시빈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2.36	31.83
사무 종사자	40.66	27.51
서비스 종사자	—	8.87
판매 종사자	—	9.8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6.22	7.4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54	12.83
단순노무 종사자	31.22	1.7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1차(2005년)~7차(2011년), 원자료

될 필요가 있음.

- 근로빈곤청년층을 직종별 비율을 살펴보면 반복빈곤집단의 경우 단순노무 종사자가 39.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시빈곤집단의 경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경우 27.94%로 높게 나타남.
 - 관리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종의 청년근로자의 경우 빈곤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12〉 빈곤형태별 직종 비율

(단위: %)

구분	반복빈곤	일시빈곤
관리자	0.54	0.2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1.31	27.94
사무 종사자	18.94	18.81
서비스 종사자	7.07	12.04
판매 종사자	7.60	14.11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22	0.5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9.81	3.91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3.09	7.85
단순노무 종사자	39.42	14.5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1차(2005년)~7차(2011년), 원자료

- 전반적으로 청년근로빈곤층의 사각지대 비율이 청년빈곤층의 사각지대 비율보다 항상 높게 나타났으며 2008년에 그 차이가 가장 적었음.
 - 이는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여러 지원정책들이 대두되면서 동 정책들이 청년근로자 뿐만 아니라 청년층에까지 사각지대 축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짐.

〈표 13〉 중위 50% 미만 빈곤집단에 대한 연도별 사각지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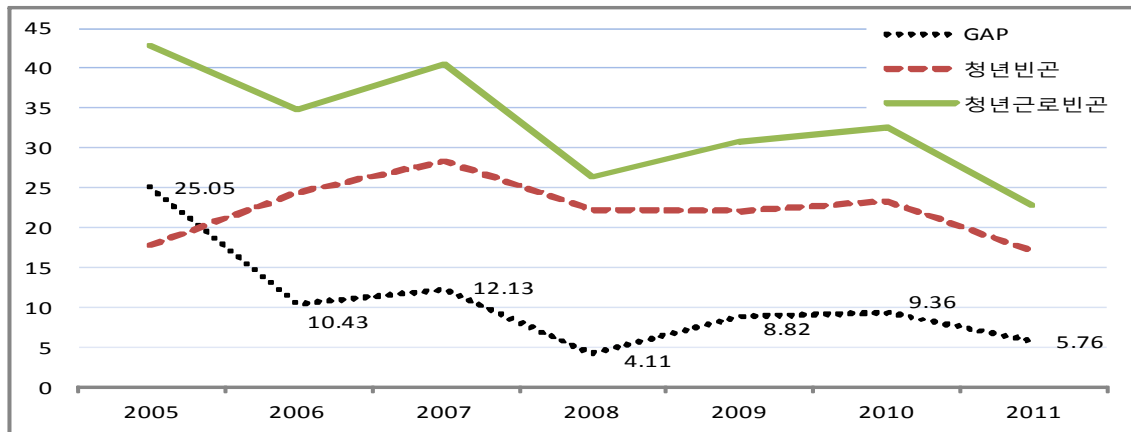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청년빈곤	17.75	24.30	28.25	22.15	21.94	23.20	16.96
청년근로빈곤	42.80	34.73	40.38	26.26	30.76	32.56	22.7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1차(2005년)~7차(2011년), 원자료

- 다음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2005년을 제외한 2006년부터 청년빈곤층의 사각지대 비율은 비슷한 수치를 보이는 반면 청년근로빈곤층의 사각지대 비율은 높았다 낮았다는 반복하면서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그림 4] 중위 50% 미만 빈곤집단에 대한 연도별 사각지대 비율 차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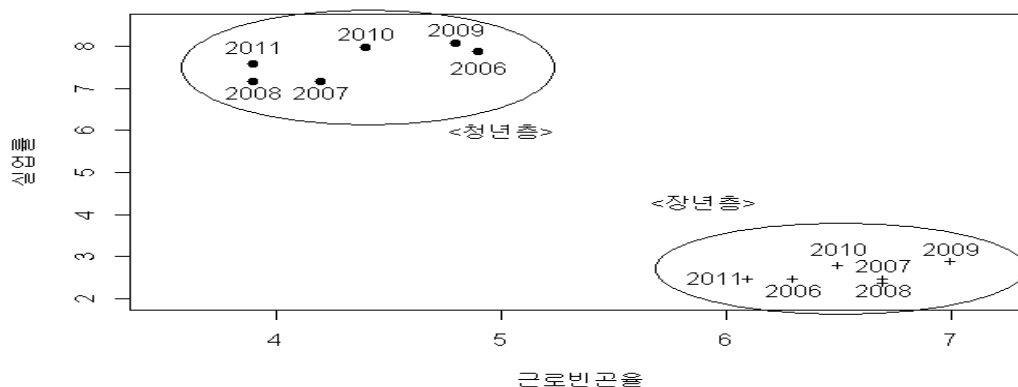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1차(2005년)~7차(2011년), 원자료

IV. 청년 근로빈곤 복지지원방안⁵⁾

- 청년층 및 장년층의 실업률 및 빈곤율을 함께 보면 청년층은 실업의 문제가 장년층은 빈곤의 문제가 우선시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음. 하지만 여기서의 논점은 청년빈곤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청년층의 빈곤문제는 일자리 문제와 비정형적인 노동시장 참여에 따른 낮은 소득으로 나타나는 것과, 두 번째로 소득이외에 청년시기에 경험하게 되는 주거, 학업문제 등의 비소득적 요소들로 인한 빈곤의 문제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그림 5] 청년층 및 장년층의 실업률 및 근로빈곤율 비교



자료: 청년층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장년층 - 통계청, 홈페이지(KOSIS), 각연도

5) 정책방안의 주요 내용들은 김태완 외(2012)의 주요내용을 기초로 정리한 것이다.

□ 근로빈곤에 대한 소득측면의 지원방안

- 첫 번째 청년층에 대한 최저임금의 적용과 상시적 모니터링 제도 운영
 - 청년들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가 매년 고시되고 있는 최저임금을 충분히 급여로서 지급하고 있는지는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모니터링 운영. 만약 이를 위반하거나 임금 등을 체불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조치들을 수행
- 두 번째는 조기에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경우 학교에서 충분한 기술을 익히거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기본적인 정보(구직방법, 임금수준, 체불임금에 대한 신고 등)를 제대로 획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음
 -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 학교를 통해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진학이 아닌 취업을 선택한 학생들을 위한 직업정보나 지원 방안은 매우 미미한 실정.
 -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이후 졸업생들이 안정적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직업선택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 구축이 요구됨.
 - 가능한 15세~24세 이하의 청년층이 취업을 하기 이전에 학교에서 충분한 직업교육과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그 정보취득 방법을 익힌 상태에서 취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세 번째로 청년층이 빈곤을 경험한 경우 이를 벗어나 더 나은 상황으로의 이전이 쉽지 않다는 점. 빈곤을 경험한 청년층이 빠른 시간에 직업능력을 갖추고 노동시장에 참여함으로써 빈곤을 벗어나고 빈곤의 상흔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청년층중 빈곤을 경험한 계층에게는 정부의 조기개입을 통해 빈곤경험층을 발굴하는 모니터링 체계가 갖추어져 하며, 이를 통해 발굴된 청년들은 정부의 각종 복지지원과 더불어 기업이 함께 연계된 직업훈련, 인턴십 제도 등을 통해 새로운 기업에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 구축
- 네 번째로 농어촌 거주 청년들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의 참여수당과 같은 수당제도를 도입
 - 현재 농어촌은 심각한 고령화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청년층의 도시유입이 가속화됨으로써 심화되고 있음. 많은 청년들은 농어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기업 및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농가소득의 정체현상으로 인해 도시로 이동하고 있음
 - 청년층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농어촌에 남아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청년들에 대해 일정기간(취업준비, 영농기술 습득 등의 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수당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초기 농어촌 정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근로빈곤에 대한 비소득측면의 지원방안

- 먼저 청년층은 특히 취업실패와 가구의 소득 부족으로 인해 청년층이 겪게 되는 위험은 신용실패임. 청년들은 학교에 다니며 납부한 대학등록금 대출로 인한 부담으로 인해 신용불량의 늪에 빠지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음.
 - 학자금 대출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의 든든학자금의 이자를 4~5%수준에서 운영하고 있어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이 경우 동 대출금을 상환하기에도 버거움
 -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위기에 놓인 청년들을 위해 대출금의 원금 또는 이자 등을 일정기간 유예해주거나 취업이후 이를 기간별로 나누어 대출금을 갚도록 하는 방안들이 함께 만들어져야 함.
 - 일을 하며 학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청년근로빈곤층이 안심하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리 근로자 학자금 대출(연 1\$%), 농어촌 대학생 무이자 학자금대출과 같은 이자가 없거나 매우 낮은 형태의 학자금 대출제도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지원
- 타지역에서 학업,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지원이 필요함
 - 청년들의 경우 생활거주지와 다른 지역에서 학교생활을 영유하거나 조기결혼(혹은 미혼모 등)으로 부모세대와 분리되어 생활을 하거나 취업이후 주거지와 떨어진 곳에서 주거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발생함.
 - 최근 전월세 급등 현상으로 인해 많은 청년빈곤층들은 소득문제와 더불어 주택 측면에서 안정적인 주거 확보가 어려움.
 - 청년빈곤층으로서 다른 지역에 거주하게 되는 주거빈곤계층에 대해 임대아파트, 전월세 지원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특히 올해 맞춤형급여체계 전환시 주거바우처가 도입될 예정이므로 동 제도를 통해 청년빈곤층이 월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확대가 필요

□ 청년층을 위한 장기적 검토방안으로 다문화가족의 확대에 의한 그 자녀들의 양육, 교육 및 취업에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됨. 외국인 자녀들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약 17만 명, 도시지역은 82.9%, 농어촌지역이 17.0%가 거주하고 있음.

- 프랑스나 영국은 외국인 2세나 3세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로 인해 자국 청년에 비해 높은 실업률을 겪고 있어 이로 인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음⁶⁾.

6) 영국은 2011년 8월 높은 청년실업과 이민자 및 소수자 차별에 항의하는 폭동이 런던에서 시작되어 버밍엄,

-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국인 자녀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정서적 현황은 물론 학교생활, 사회생활에서 잘 적응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청년층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이들 외국인 자녀들의 국내적응을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되어야 함.

리버풀 등으로 확산되는 큰 경험을 하였다(경향신문, 2011. 8. 8). 프랑스는 2012년 8월 7년만에 아미앵에서 이민자 청년 100여명이 높은 실업률과 생활고를 항의하는 폭력사태가 발생하였다(조선일보, 2012. 8.16 일자).

청년 고용의 현황과 정책 개선 방안

전 병 유(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청년 고용의 현황과 정책 개선 방안

2014. 02. 25

전병유(한신대)

1. 문제 제기

- 청년고용실업문제는 모든 국가들이 직면한 문제이고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로 창조적이고 광범위한 정책적 해법이 요구됨.
 - 개도국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 부족, 선진국의 경우 장기실업
※ ILO(2013), Global Employment Trends for Youth 2013: A Generation at Risk
- 청년 고용실업 문제는 경제산업구조와 교육시스템의 변화에 기인하는 구조적인 문제
- 청년층의 장기적-구조적인 고용 위험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 초래
 - 인적자본손실, 기업인력구조의 왜곡,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압박

2. 청년층 고용 실업 문제의 현황

- 청년 고용 문제의 현상
 - 청년층의 낮은 고용률과 높은 유휴화율
 - 좋은 일자리로의 진입의 어려움과 잦은 노동이동
 -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동의 어려움
 - 과잉교육과 하향취업에 따른 수급불일치

2. 청년층 고용 실업 문제의 현황

청년 고용의 양과 질의 축소

- 청년고용률 : 2005년 44.9% → 2010년 40.3% → 2013년 39.7%
 - ※ 통계청(2013) : 인구효과를 통제할 경우 청년층 고용은 더 감소
- 2011년 15-24세 OECD 평균 고용률은 37.8%, 우리나라의 경우 23.1%
- 청년실업률 : 2005년 8.0% → 2010년 8.0% → 2013년 8.0%
- 300인 이상 대규모사업체에서의 청년층 비중
 - 1993년 39.3% → 2004년 27.8% → 2011년 23.5%
- 공공행정 부문에서의 청년층 비중
 - 1993년 26.5% → 2004년 13.9% → 2011년 9.1%

2. 청년층 고용 실업 문제의 현황

- 첫취업평균소요기간: 2005년 10개월 → 2010년 10개월 → 2013년 11개월
- 첫취업평균근속기간: 2005년 17개월 → 2010년 16개월 → 2013년 15개월
- 졸업중퇴자 취업무경험자 비중: 2005년 8.3% → 2010년 10.2% → 2013년 12.6%
- 대졸자 휴학경험비중: 2007년 36.3% → 2010년 39.7 % → 2013년 42.9%
- 직업훈련경험자 비중: 2005년 17.2% → 2010년 15.8 % → 2013년 14.2%

2. 청년층 고용 실업 문제의 현황과 원인

-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의 문제
 - 졸업 후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진입과 정착이 매우 어렵고
일자리 진입 이후에도 입직과 이직을 반복하는 잦은 노동이동의 문제
 - 우리나라 청년층의 정상적인 일자리로의 이행기간은 11-12개월 정도
 - 그러나, 반복적인 노동이동, 높은 진입연령, 하향취업률의 문제
 - 과잉교육과 하향취업에 따른 수급불일치의 문제

2. 청년층 고용 실업 문제의 현황

- 청년층의 고용 위험: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와 부실한 통합

- 배제된 청년층(youth left behind)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교육훈련을 받지 않고 있는 청년층

OECD 11%, 한국 16.6%

- 부실하게 통합된 신규취업자(poorly-integrated new entrants)

비정규직이나 임시일용직,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 등 취업자.

OECD 20-30%, 한국 33.6%

2. 청년층 고용 실업 문제의 현황

청년 노동력의 노동시장 통합과 배제 현황 지표(2011년)

			수	비중
청년 노동력인구			9,589	100.0
취업자		A	3,879	40.5
	상용직	B	2,321	24.2
	임시직	C	1,708	17.8
	일용직	D	705	7.4
	고용주	E	47	0.5
	자영자	F	195	2.0
	무급종사자	G	120	1.3
실업자		H	285	3.0
비경제활동		I	5,425	56.6
	교육훈련	J	4,160	43.4
	교육훈련을 받지 않는 계층	K	1,265	13.2
배제된 ¹⁾ 계층		H+K	1,551	16.2
불안정 ²⁾ 계층		B*0.212+C+D+F+G	3,220	33.6
합계			4,771	49.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배제된 계층=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자를 제외한 숫자

불안정계층=상용직 중 비정규직(비율 21.2%)+임시직+일용직+자영자+무급종사자

3. OECD 청년 고용정책 평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OECD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① 민간부문 보조금 일자리
 - ②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 ③ 교육훈련
 - ④ 공공부문 직접적 일자리 창출
- 구직활동지원 : 가장 효과적. 상호책임원칙에 따른 강제성
- 보조금일자리 : 정규직으로의 이동과 실업기간 단축에 효과적
- 교육훈련 : 단기적으로 효과적이지 못함, 그러나 장기적으로 평가해야 함
- “청년고용보조금 + OJT + 기술습득과 경력형성이 가능한 인턴, 직장체험”

3. OECD 청년 고용정책 평가: 실직 시 소득 보장 정책

- OECD 국가 중 11개 국가가 청년신규실직자에 실업급여나 실업부조 제공
- 활성화 조치와 연계, 상호의무의 원칙, 가족이나 부모소득을 고려
- 경제위기 대응
 - 일시적으로 실업급여 자격 완화
 - 청년채용 또는 훈련기회 제공 기업에 사회보험료 감면
 - 저숙련인턴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일시적 보조금

OECD 국가들의 청년에 대한 실업급여 현황

국가	최대급여수준		연령	수급기간 (개월)	다른급여비용		비고
	종류	평균임금 대비비율		제한없음	사회부조	주거급여	
호주	UA	17	16-20	제한없음	○	○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 감액, 학생의 경우 24세까지 연장
벨기에	UI	12	30세미만	제한없음	○		나이에 따라 급여가 다르고 5-10개월의 대기기간
덴마크	UI	43		18	감액	○	교육 종료 후 즉시 실업보험 가입
핀란드	UA	18		제한없음	○	○	생애 첫 노동시장 진입하는 경우,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60%
독일	UA	10		제한없음	-	○	
그리스	UA	4	20-29	5	-	○	
아일랜드	UA	27			×	×	
룩셈부르크	UI	29			×	×	6개월 대기기간, 최저임금의 70%
뉴질랜드	UA	21			-	○	
스웨덴	UA	26		14	○	○	학생의 첫 노동시장 진입 시 4개월 대기기간
영국	UA	8	18-24	제한없음	○	○	수급기간이 6개월이며 강제로 뉴딜프로그램에 참여

OECD, 2007, Jobs for Youth.

OECD와 ILO 청년고용정책 평가

- 1) 보조금 일자리 정책은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존재하지만, 불황기에는 사중손실 효과가 크지 않아 순고용창출효과가 클 수 있다. 사중손실 등의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제도 설계가 가능할 경우 임금보조금은 공공근로보다 상대적으로 효과성이 높은 정책 수단이다.
- 2) 개별적 프로그램보다는 청년실업자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상담, 정보제공, 구직알선, 훈련 기회 제공 등)를 통합하여 포괄적(comprehensive)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보다 성공적이다.
- 3) 청년고용정책에서 가장 비용효율적인 정책 수단은 고용지원서비스이다. 청년노동시장의 특수성은 수급불일치가 매우 크기 때문일 것이다.
- 4) 프로그램의 목표 집단을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1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25~29세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특히 학교에서 조기에 이탈한(early school leaver) 청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졸 청년층을 목표로 한 별도의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 5) 훈련프로그램은 지역 노동시장 또는 전국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영계 또는 지역의 대표성 있는 조직을 동원하고 연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로 하여금 산업계의 숙련 수요와 지역 노동시장의 요구를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프로그램 설계에서 빠져서는 안 될 부분이다.

OECD와 ILO 청년고용정책 평가

- 6) 아주 잘 작동하는 프로그램에서조차 취약 청년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취약청년층의 경우 실업상태가 길어지기 전에 가능한 빨리 식별되어야 하며, 이들에게 초점을 맞춘 개별화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조기 개입(early action)은 청년층에게 특히 중요하다.
- 7) 일반적으로 청년층의 임금을 낮추는 것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수단은 아니다.
- 8) 청년층 대상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경우 고비용을 유발한다는 것이 주된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된다. 예를 들어 실업의 감소가 '숨겨진' 또는 '위장된' 실업의 증가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한다. 다시 말해 비생산적이거나 지나치게 긴 교육훈련에 참여함으로써 실업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근로자로 하여금 실업에서 조기에 탈출하도록 구직노력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선진국의 경향이다.
- 9) 정책 및 프로그램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신의, 그리고 정확한 노동시장정보(LMI)가 전제되어야 한다.
- 10) 프로그램의 설계 단계부터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monitoring)과 평가(evaluation)를 고려하여야 한다.
- 11) 사회적 파트너들의 적극적인 관여가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인다.

4. 우리나라의 기존 청년고용정책 평가

- 청년고용대책(2003년 이후): 직접일자리제공, 직업훈련, 취업지원, 현장연수(직장체험), 인프라확충
- 훈련과 직접일자리제공(인턴) 중심, 고용서비스와 소득보전 취약

사 업 명	2012	
계	519,284	100.0
일반회계	218,317	42.0
청년직장체험 프로그램	12,232	2.4
글로벌취업지원	17,828	3.4
중소기업청년 취업인턴제	149,973	28.9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지원	26,443	5.1
대학청년 고용센터운영	3,178	0.6
잡월드	6,900	1.3
취업사관학교운영지원	1,763	0.3
고용보험기금	300,967	58.0
중소기업청년 취업인턴제	67,860	13.1
청년취업진로지원	3,274	0.6
국가기간, 전략직종훈련	178,020	34.3
기술기능인력양성	51,813	10.0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4. 우리나라의 기존 청년고용정책

- 직접일자리 제공(청년 인턴)
- 노동시장 이행 촉진 지원 정책
 - 직장이나 직업 체험을 통한 이행 촉진 정책
 - 취업지원관제, 대학청년고용센터 등 취업지원서비스
 - 산학협력의 강화를 통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촉진: 취업아카데미, LINK 사업
- 고졸자 취업 촉진: 열린고용정책
- 취약청년층의 노동시장 통합 정책
 - 취약계층을 타겟으로 한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정책
2006년의 YES(Youth Employment Service)
2008년의 심층상담전담제
2009년 취약계층 취업패키지사업, 뉴스타트(New Start Program)

5. 청년고용정책 개선 방안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청년의 접근성 강화와 대기업-공공부문의 청년고용책임강화

- 대기업의 청년고용 공시제
- 공공부문의 조달정책과 경영평가에 청년채용 비율 반영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5조의 공공부문 청년채용의무제 비율 상향 조정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청년인턴제)의 재편

- 청년인턴제를 단기적 일자리사업이 아닌 이행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재편

5. 청년고용정책 개선 방안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촉진 정책의 개선 방향

- 타겟그룹별 접근
대졸취: 산학협력이나 대학의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
고졸자: 산업현장과 연동된 교육훈련 정책과 고졸자에게 적합한 일자리 발굴과
일자리 질 개선 정책 등과 연계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들의 연계를 강화하는 패키지형-맞춤형-통합형 접근
취업수당 + 직업훈련 + 취업알선
- 취약청년층에 대해서는 공급 측면의 정책뿐만 아니라 수요측면의 정책도 결합
최저임금 적용 강화 + 영세중소기업들의 부담은 사회보험료 면제(또는 지원) 정책

5. 청년고용정책 개선 방안

청년 고용안전망의 구축

- 청년층은 실업부조가 부재한 상태에서,
신규실업, 잦은 직장이동, 자발적 이직 등으로 인해 1차 안전망의 사각지대 형성
- 임시적, 한시적 대응의 한계 : 청년층 고용문제는 매우 구조적이기 때문
 - 1) 실업부조(구직촉진수당) 도입
 - 2) 기존 실업보험의 개선 : 피보험기간 단축, 자발적 이직 실업급여 지급
 - 3) 한국형 실업부조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수당을 결합한 모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이 정 봉(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이 정 봉(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1. 사회적 경제 의의와 제도화

- 제3섹터 또는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가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제로 주목받고 있음.
 - － 협동조합은 경제·사회발전, 빈곤 및 사회적 배제의 방지, 양질의 일자리와 비공식경제 종사 노동자들의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그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음(황선자·최영미, 2013)
 - － 사회적 기업이 각국에서 주되게 수행해 왔던 역할은 차이가 있지만,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서비스 제공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노동에서 배제된 집단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주요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기 있기 때문임(이정봉·김성기, 2012).
- 우리나라도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관심이 나타났음¹⁾.
 - － 1997년 경제위기 이전부터 생산공동체 같은 사회적 기업의 전형으로 평가될 수 있는 조직들이 실업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출현했었고(신명호, 2004),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창출된 일자리를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기업 형태로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구상하였음(노동부, 2004). 2006년 9월 정부가 관계부처합동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을 발표했을 때, 노동부는 사회적 기업 육성의 필요성을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에 제시하였음.
 - － 협동조합은 기존 8개의 개별법을 바탕으로 존재해 왔으나, 해당 개별법에 포괄되지 못하거나 「상법」에 의한 회사설립이 어려운 경우 생산자 또는 소비자 중심의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경제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었음. 「협동조합기본법」

1)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2006년 12월에 제정되고,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고, 「협동조합기본법」은 2012년 1월 26일에 제정되고,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제정을 통해 새로운 법인격이 도입되면서 경제적으로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와 경제위기 시 경제안정,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서비스 제공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였음(기획재정부, 2012).

2. 사회적기업 주요 현황과 특징²⁾

-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은 2013년 11월 기준 950개이고, 예비사회적기업은 1,537개이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기업수, 고용인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총 고용인원은 21,574명이고, 이중 취약계층은 13,108명임. 평균 고용인원은 22.7명으로 2007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음.

<표 1> 사회적기업 현황

	예비사회적 기업수	사회적기업			
		기업수	취약계층	총고용	평균고용 인원
2007년	396	50	1,403	2,539	50.8
2008년	602	208	4,832	8,329	40.0
2009년	646	285	6,467	11,150	39.1
2010년	961	501	8,227	13,443	26.8
2011년	1,260	644	10,018	16,319	25.3
2012년	1,852	744	11,443	18,689	25.1
2013년	1,537	950	13,108	21,574	22.7

주: 2013년 11월 말 기준이고, 2013년 말 사회적기업은 1,012개임.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13) 재구성

- 사회적기업의 고용 및 임금실태의 특징을 정리하면,
- 첫째, 사회적기업은 유급노동자 중 여성의 비율이 높음. 2011년 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우리나라 여성 임금노동자의 비율은 42.7%인데 반해, 2011년 말 인증 사회적기업의 여성노동자 비율은 65.5%로 나타남.
- 둘째,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고용을 주요 기능으로 가짐. 2011년 말 사회적기업 내 취약계층은 9,488명으로 유급노동자의 59.3%를 차지함.

2) '사회적기업 주요 현황과 특징'은 이정봉·김성기(2012)의 연구 중 제3장 '사회적기업 고용·재무실태 및 의사결정구조'를 요약한 내용임.

- 셋째, 사회적기업의 고용창출력은 낮아지고 있음. 2007년에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평균 유급노동자가 54명인데 반해 2010년과 2011년 인증 사회적기업은 평균 고용인원에 못 미침.
- 넷째, 사회적기업의 평균임금은 상승하였지만, 여성 대비 남성, 관리직 대비 비관리직 간 격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사회적기업의 재무실태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됨.

- 첫째, 사회적기업은 보호된 시장에서 일정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은 공공시장에 대한 매출이 2008년 19.7%에서 2011년 35.6%로 증가하였고, 금액으로는 1,853억 원에 달함.
- 둘째, 사회적기업의 전반적인 영업실적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2011년 말 기준 영업이익에서 플러스(+)를 기록한 기업은 89개(14%)에 불과하고, 평균 영업이익률과 평균 매출액순이익률 모두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음.
- 셋째, 사회적기업은 정부지원과 같은 영업외 이익의 비중이 높고, 이를 통해서 기업의 적자를 면하고 있음.

○ 의사결정구조를 살펴보면, 사회적기업은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로 이사회를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사회적기업 내 노사협의회 구성율은 14%이고,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를 갖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가 구성된 비율은 37.4%에 불과함.

○ 인증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전반적으로 기업의 영업활동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인건비 중심의 지원 방식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고(김혜원, 2011; 문보경, 2011), <표 2>와 같이 2011년 사회적일자리 확충사업 재원의 67%는 인건비에 사용되고 있음. 정부 역시 사회적기업 설립 초기 인건비 지원 중심의 지원제도로 인한 자생력 기반이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고용노동부 인력정책수급관, 2012).
- 2012년 4월 말 기준 정부로부터 인건비지원이 종료된 101개 사회적기업 중 98개 기업이 사업을 지속하고 있고, 인건비 지원이 종료된 2,734명 중 898명이 기존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하는 정도임³⁾. 특히 영업이익에서 플러스(+)를 나타낸 기업은 전체의 14%(89개)

3)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기업 내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문제와 연결된다.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은 기존 인건비 지원을 받았던 수준으로 고용을 유지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종료된 인원들 중 실업 상태에 있는 인원은 39.2%에 이르고, 이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용정책에 중요한 고민을 던지고 있다. 이 집단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겠지만, 2011년 말 기준 사회적기업 총 고용인원은 16,319명 중 취약계층은 10,018명으로 전체 고용인원의 61.4%를 차지하는데, 정부는 사회적

에 불과한데,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일정 기간 동안의 인건비 지원이 종료될 경우 기업 자체적으로 고용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됨.

<표 2> 2011년 사회적일자리 확충사업 재원배분

내역	지원인원(명)	결산액(백만원)	비율
인건비	10,570	90,792	67.0%
◦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인건비	10,260	86,110	63.6%
- 예비사회적기업	6,639	55,713	41.1%
- 사회적기업	3,621	30,397	22.4%
◦ 전문인력 인건비	310	4,682	3.5%
운영비 등 기타	-	44,629	33.0%
합계	-	135,421	10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2: 228)

<표 3> 사회적기업 지원종료 인원 고용 현황

지원종료 인원	고용유지	이직		
		소계	재취업	실업
2,734명	898명	1,836명	764명	1,072명
100%	32.8%	67.2%	28.0%	39.2%

출처: 고용노동부 인력정책수급관(2012)

○ 사회적기업의 양적 성장은 계속되고 있지만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끊이지 않고 있음.

- 많은 사회적기업이 정부 지원에 유인되어 인증 제도에 편입되고 정부에 의존적인 경향을 보이는 등 사회적기업의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발견됨(이영환 외, 2009; 장원봉, 2009).
- 또한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은 여전히 영세한 상태이고 사업수행의 기초 인프라가 부족한 조건에 처해 있지만(곽선화, 2010), 사회적기업의 자금동원 경로는 상당히 제약되어 있음. 더불어 사회적기업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의 경험과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지적임.

기업에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취약계층에게 지원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즉 정부는 취약계층의 일 자리를 만들기 위해 수익창출을 이루지 못하는 하나의 사회적기업을 포기하고 새로운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모순에 빠질 수 있다(이정봉, 2010).

3.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 사회적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지원제도 개선 및 강화와 생태계 조정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음.
-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기업 법인격 부여, 설립과 지원 분리, 칸막이 행정 극복, 사회적 경제 친화적 공공시장의 조성,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 강화, 사회적경제를 위한 기금 및 금융기관 설치 등이 주되게 강조되어 왔음(문보경, 2011;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2012).
-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공약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국정과제에서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로 따뜻한 성장 도모’를 설정하였음.
 - 현 정부 국정과제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축으로 하여 △협동조합법 개정 및 정책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기준 일자리, 복지정책과 협동조합과의 연계성을 제고 하는 정책과제 발굴 및 기본계획 수립 △누구나 쉽게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강화 △사회적기업 역할 확대 및 자생력 제고 △청년△고령자의 사회적 기업 취업·창업 지원 강화를 세부추진계획을 제출하고 있음.
- 현 정부의 국정과제 기조에 따라 2013년 정부 부처의 주요 사업계획에 ‘사회적 경제 생태계 활성화’가 강조되고 있음.
 -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2013년 6월)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겠다는 목표 속에서 △사회적기업 활동 범위 확대 △대상별 맞춤형 취·창업 지원 강화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제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음.
 -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활성화 추진계획」(2013년 7월) 에서도 △사회적기업을 통한 고용확대 △사회적 경제 생태계 활성화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지원 제도 개편을 통해 일자리 창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증대, 따뜻한 공생문화 확산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표 4>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활성화 추진계획’

구분	과제	세부과제
사회적기업을 통한 고용 확대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 창출	·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 창조적 일자리 모델 발굴
	청년·고령자·여성 등을 위한 일자리 제공	· 청년: 단계별 사회적기업가 성프로젝트 시행 · 은퇴자·고령자 등의 경험과 지식 활용한 창업·취업

구분	과제	세부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대 · 돌봄·가사·간병·환경 등 여성친화적 사회적기업 적극 육성
	사회적기업을 통한 사회서비스 분야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을 통한 사회서비스 분야·안정적 일자리 확대 · 재정지원일자리, 정부위탁사업 등 사회적기업 참여 활성화
사회적 경제 생태계 활성화	사회적기업 지원체계 전면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육성법 확대 개편 · 유사사업간 기능적 연계 강화 · 통합조정기구 운영
	부처협업을 통한 전달체계 효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사업간 효율적 지원체계 운영 · 지원기관의 역량 및 인프라 강화 · 사회적 경제 조직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 평가기반 마련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지원제도 등 개편	인건비 직접지원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지원방식 개선 · 기업 및 근로자 특성 고려한 맞춤형 지원
	자생구조 마련을 위한 간접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개발비 지원의 효율성 제고 · 선도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 ·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경로 확대 · 사회적기업 친화적 조달제도 도입 검토 · 사회적기업 지식재산 경쟁력제고 · 민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 지원
	민간과 지역 연계·협력 생태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의 인적·물적자원을 연계한 지원 확산 · 지역사회와 사회적기업 연계성 강화
	지속경영을 위한 제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인증과 지원 분리 ·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차등지원

- 사회적기업 지원 방향 및 정책은 시간이 경과되면서 계속해서 보완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주목받는 모델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되거나 검토되고 있음.
- － 대표적으로 사회적기업의 특성 상 재무적 지표와 산업 경제적 성과평가에 기초한 기존 자금조달시장에 편입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금융지원을 위한 대출, 투자, 신용보증 등 다양한 자금조달 경로가 확충되었음에도 이용률이 낮음(양동수, 2014), 이에 따라 최근 사회적 가치 투자, 클라우드 펀딩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⁴⁾.

4) 신계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665호)로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있고, 문재인의원실은 ‘사회적 가치 기본법’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적 경제를 위한 공공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음.

-
- 우리나라보다 제3섹터의 경험과 규모(조직수, 고용규모 등)가 많은 영국의 경우에도 사회적 기업의 초기와 지속성에 가장 큰 장애로 자원조달 어려움을 꼽고 있음⁵⁾.

4. 사회적경제 관련 청년고용 사업

-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주요 목적으로 고용이 제시되고 있음.
 - 정부는 사회적 경제 영역의 고용규모를 2012년 0.4%로 추정하는 가운데 2017년 2%(50만 명)로 확대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음(고용노동부, 2013).
 -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는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의 사회적 경제 분야 일자리 활성화’를 제시하며, △소셜벤처 창업지원 강화 △소셜벤처 미니 클러스터 구축 △전문가 양성 및 산업분류 개선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음(청년위원회·관계부처, 2013).
 - 고용노동부는 청년 일자리 영역 중 하나로 사회적기업을 상정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청년 사회적 기업가 양성을 과제로 제출하고 있음(고용노동부, 2014)
- 사회적 경제를 매개로 한 청년고용 확대는 두 가지 축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청년층의 직접적인 창업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경제 성장 과정에서 고용유발로 요약할 수 있음.
 - 사회적 경제의 성장에 따른 고용유발은 사회적기업과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이 제공하는 일자리에 청년층이 취업하는 것이고, 이때 일자리는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일자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⁶⁾.
 - 전자는 사회적기업가 양성 영역에 해당하고, 후자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제도와 연동됨.

5) Social Enterprise UK가 조사한 2013년 영국 사회적기업 실태에서 사회적 기업이 초기에 겪는 어려움으로 자금과 펀딩 부족 및 접근의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4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유동성 문제가 25%, 마케팅 부족이 21%, 시간압박이 20%의 순서를 보임. 더불어 지속성과 성장에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자금과 펀딩 부족 및 접근의 어려움이 39%, 경제적 환경 및 경기침체가 32%, 공공서비스 조달의 제한이 18% 등으로 나타남(Social Enterprise UK, 2013).

6) 2011년 기준 인증 사회적기업 631개의 유급근로자 평균임금은 112.3만원으로서, 2011년 8월 기준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 132만원인 점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기업은 저임금 사업장으로 평가할 수 있음. 특히 취약계층의 임금은 100만 6천원으로 2011년 최저임금 90만 2천 880원(209시간 기준)보다 10만원 정도 많은 정도에 불과함.

- 사회적기업가 양성은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소셜벤처 경영대회,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으로 분류됨.
-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는 일반인부터 예비창업자까지 대상별로 다른 교육을 구성되고 있어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부터 심화과정까지 다양하게 다루어지고 있음. 하지만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기관별로 교육내용의 편차가 크고, 강사진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이의교 외, 2011).

<표 5>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교육과정

교육과정		교육대상	주요내용
사회적기업 창업전문과정		창업예비자	- 대상별·업종별 특화창업교육(사업계획서 작성 및 비즈니스 모델 정립 등)
사회적기업 대표자교육과정		사회적기업 대표	- 사회적기업 대표 등에 의한 당사자 교육
맞춤형 아카데미	공통과정	일반인	- 사회적기업의 기본이해와 관련한 교육
	실무역량강화 과정	사회적기업 실무자	- 경영실무(금융, 회계, 마케팅) 및 업종별 특성화 교육
전문인력 양성과정		사회적기업 지원인력	- 사회적기업을 지원과 관련한 분야별 전문 교육
사회적기업 캠프		대학(원)생/청년	- 비즈니스모델을 통하여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대학생 캠프
사회적기업 리더과정		대학원생/ 사회적기업가	- 사회적기업 강의와 국내외 인턴ships을 연계한 심화교육
사이버교육과정		일반인	-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사회적기업 실무자	- 인사노무, 회계·세무, 마케팅 기초과정(3개 과정)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사회적기업가로서의 자질이 있고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자”를 모집하고, 선정된 창업팀에 창업공간 제공, 창업비용 지급, 멘토링 서비스 제공, 네트워크 지원을 통해서 창업(취업포함)을 유도하는 사업임.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전국에 18개의 위탁운영기관이 창업·경영 멘토링, 네트워크 지원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임. 하지만 사업의 방향성, 멘토의 전문성, 프로그램 내용, 위탁기관의 자원은 기관마다 다르고 이로 인해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나타남.

[그림 1]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 업무체계도



출처: 이의교 외(2011)

5. 과제

-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청년 고용이 증가할 수 있는 경로는 현재 존재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발전하거나 사회적 경제 조직 신규설립(창업)이 늘어나는 경우임.
 - 단기적으로 투입된 재원에 비례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만큼 사회적 경제를 통한 고용창출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양적·질적 성장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의 핵심 요소로 재원(금융), 교육, 조직 간의 협동을 고려할 때, 현재의 지원제도에서 교육과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협동을 위한 제도도 다각도로 모색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청년 고용이 늘어나기 위한 기본방향으로 첫째는 사회적 경제와 청년층 간의 접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둘째는 사회적기업가 양성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중간지원기관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임.

□ 사회적 경제와 청년층 간의 접점 넓히기

- 현재 우리나라 청년층 고용에서 창업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 상황인데(<표> 참조),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는 창업보다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과 경험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청년층이 사회적 경제 조직에 유입되는 흐름을 만들 수 있음.

- 2014년부터 사회적기업진흥원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위탁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사회적기업 체험을 원하는 청년과 사회적기업을 연결하도록 추진될 예정임.
- 서울시가 청년뉴딜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청년혁신일자리사업’은 서울시가 공공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 발굴을 연계,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선발하여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른 활동과 일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임. 서울시는 만18세~만39세 이하 서울시 거주 청년실업자,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및 선발 과정을 거쳐 근로계약을 맺고, 서울시에 소재하는 비영리기관(단체), 협동조합, NGO단체, 사회적 기업 등 공공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업체(협력사업장)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함⁷⁾.

<표 6> 2013년 전국 창업경진대회 현황

구분	주체기관	주관기관 /대회수	분야	
			전산업	특정분야
정부부처	8	14	11	3
지방자치단체	8	10	8	2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17	17	11	6
계	33	41	30	11

자료: 청년위원회(2013), 「전국 창업경진대회 현황」 재구성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에 대한 교육이 공식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
- 노동부 2013년 사회적기업 활성화 추진계획에서 사회적기업 관련 내용과 가치를 교과서에 반영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중간지원 기관 강화

- 사회적기업의 생태계에서 중간지원기관이 역할은 매우 중요함에도 각종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간지원기관에 투입되는 예산은 ‘간접적 경비’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음.
- 현재 사회적기업가 양성사업의 예산을 살펴보면, 창업팀 1팀당 3천만원의 예산이 배정되는 가운데, 위탁운영기관의 사업비는 팀당 사업비의 10%로 책정됨. 사회적기업가 양성사업에서 창업팀에 대한 실질적인 컨설팅을 지원하는 중간기관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배정이 되지 않고 있음.

7) 참여자의 인건비는 근로계약을 맺은 서울시가 지급하며 참여자의 복무관리·교육훈련·일자리후속연계 등의 세부 사업은 운영기관인 청년일자리허브와 협력사업장의 업무협약에 따라 공동 추진됨.

- 이러한 방식은 위탁운영기관의 자체 재원이 투입될 여지가 있을 경우 컨설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한정된 자원에서 컨설팅을 수행하게 되고 결국 위탁운영기관별로 사회적기업가 양성에 편차를 발생키는 문제를 야기하게 됨.

<표 7> 사회적기업가 양성사업 예산안

구분	2012년 예산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
창업팀 사업비	9,600,000	9,600,000	10,500,000
위탁운영기관 사업비		960,000	1,050,000
사업운영비	1,600,000	640,000	
사후관리프로그램			125,000
기타사업비			640,000
계	11,200,000	11,200,000	12,315,000

자료: 고용노동부, 각년도, 「예산항목 명세서」.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관(2012), 「사회적기업, 현황과 정책과제」(2012. 5. 30).
- 고용노동부(2013), 「사회적기업 활성화 추진계획」(2013.7)
- 고용노동부(2014), 「2014년도 업무추진 계획」.
- 곽선화(2010), 「사회적기업 3주년 성과분석」, 고용노동부.
- 기획재정부(2012), 『2012 협동조합 심포지엄 자료집』.
- 김혜원, 2011, “한국의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일자리창출 중심의 지원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제18집 제1호, pp. 209-238, 한국사회정책학회.
- 노동부, 2004, 「2004년 주요업무 계획」(2004.3.4).
- 문보경, 2011, “사회적기업의 현주소와 개선과제”, 『사회적기업 성과와 개선과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 신명호(2004) “사회적 기업: 한국적 실업의 역사와 교훈”, 『도시와 빈곤』 통권 70호, 한국도시연구소.
- 양동수(2014),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법안 도입 방안: 이슈를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기본법 도입의 의미와 전망』 자료집.
- 이영환·김성기·김종진·이정봉, 2009, 『사회적기업 종사자 노동실태 연구』, 함께일하는재단.
- 이의교 외(2011), 『사회적 기업가의 인력양성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정봉·김성기(2012), 『사회적기업 노사관계 연구: 노사관계 특징과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

-
- 노총 중앙연구원.
- 장원봉, 2009, “한국 사회적 기업의 실태와 전망”, 『동향과 전망』 제75호, pp. 47-73, 한국사회과학연구소.
- 청년위원회·관계부처(2013),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2012), 「2012 대선 매니페스토」.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13), 『사회적기업 개요집』.
- 황선자·최영미(2013), 『노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ICA·the co-operative college·ILO(2004), *Promoting Co-operatives: A guide to ILO Recommendation 193*.
- MacPherson, Ian(2012), “Cooperatives’ Concern for the Community: From Members Towards Local Communities’ Interests”, paper presented at the Euricse Conference in Venice.
- Social Enterprise UK(2013), *State of Social Enterprise Survey 2013*.

#별첨.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현황

지원제도·사업		지원내용
예비 사회 적 기 업	인건비 (일반인력)	■(예비)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시 신규채용근로자에 대해 최대 5년간 지급 * 연차별 차등지원: 예비 1년 100%, 2년 90%, 인증 1년 90%, 2년 70%, 3년 50%(’13년)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운영	■인증 업무 지원 및 지역특화 모델 발굴, 상담 및 모니터링 수행 등 사회적기업 운 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 *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통합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브랜드·기술개발 등 R&D, 홍보·마케팅 등 지원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추도록 지원 * 사회적기업은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은 5천만원 한도
	경영컨설팅	■사회적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조직으로써 자립할 수 있도록 경영지원(’13년 각 40억원) * 사회적기업: 연간 2천만원, 5년간 5천만원한도 * 예비사회적기업: 3년간 5백만원 한도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사회적기업의 자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비전과 자질, 혁신적 아이디어, 경영능력을 갖춘 사회적기업가 양성
	모태펀드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자펀드)을 결성하고자 정부가 모태펀드에 출자(’13년도 25억원)
사 회 적 기 업	인건비 (전문인력)	■(예비)사회적기업이 초기 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문인력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예비사회적기업(근로자 10인이상 기업)은 1명을 한도로 최대 2년간, 사회적기업은 3명을 한도로 최대 3년간 인건비 일부 지원 * 월 200만원 한도 * 자부담 비율: 1년(20%), 2년(30%), 3년(50%)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적기업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의 일부 지원 *지원내용: 4년간 근로자 1인당 월 91천원
	판로개척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운영 *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우선구매 계획 및 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고용부에 통보, 고용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4월말까지 공고 ■온라인 사회적기업 상품소개사이트와 오프라인 사회적기업 제품 공동판매장 구축· 운영 추진(’13년 37억원)
	세제지원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50% 감면(5년간) ■사회적기업에 취득세·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일반법인·개인·연계기업에 그 기부금을 소득의 10% 범위에서 손금산입 처리
	시설비 등 지원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 유지 임대 등 지원 *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시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창 업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를 공모·선정하여 사회적기업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13년, 320개 창업팀, 112억원)
	소셜벤처 경연대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소년·일반인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아이디어 발굴(’13 년 7억원)

자료: 고용노동부(2013), 「사회적기업 활성화 추진계획」.

청년의 노동환경 실태와 개선 과제

정 준 영(청년유니온
정책국장)



청년의 노동환경 실태와 개선 과제

정 준 영(청년유니온 정책국장)

1. 통계로 확인하는 청년의 노동환경 실태

[표1] 청년세대의 연령대별 임시적 노동 현황

(단위 : 명)

구분	10대	20대	30대	29세 이하	39세 이하	전체
임금노동자	187,124	3,253,772	4,727,767	3,440,896	8,168,663	17,743,388
일반임시직	22,464	578,664	506,815	601,128	1,107,943	2,618,092
임시파트	102,461	270,100	146,692	372,561	519,253	1,209,488
호출근로	11,071	36,691	64,537	47,762	112,299	711,714
합계	135,996	885,455	718,044	1,021,451	1,739,495	4,539,294
전체 중 비율	72.7%	27.2%	15.2%	29.7%	21.3%	25.6%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2013년 3월 원자료

- 2013년 3월 기준으로 청년세대의 연령대별 고용형태를 분석해보면, 임금노동자 대비 임시적 노동(일반임시직, 임시파트, 호출근로)의 비율이 전체 평균(25.6%)에 비해 29세 이하의 연령대에서 더 높게 나타남.
- 단기간·단시간·임시적 노동의 다양한 고용형태들을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라는 표현으로 통칭하는데, 청년노동의 기본 문제는 그 영역에서 발생함. 이러한 청년노동의 실태는 사용자와의 종속근로관계에서의 취약한 지위를 특성으로 하며, 그에 따라 청년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기본적인 노동법적 보호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음.
- 29세 이하의 청년들이 ‘아르바이트’의 형식으로 일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영세한 중소기업의 업체들이 많아 생산성이 떨어지며, 청년들이 고용되는 직무 또한 숙련노동을 요구하지 않는 단순노무직인 경우가 많음. 문제는 그러한 일자리들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면서 청년노동이 심각한 저임금 상태에 있다는 것임.

[표2] 청년노동자 저임금(월급 120만원 미만) 실태

(단위 : 천명)

구분	노동자수	저임금 노동자수	비율(%)
전체	17,734	4,391	24.8
19세 이하	257	212	82.6
20-24세	1,156	519	44.9
25-29세	2,173	322	14.8
29세 이하	3,586	1,053	29.4

※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2013년 보고서에서 재인용.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2012년 8월 원자료.

- 단시간 노동의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29세 이하의 저임금 비율이 전체노동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임금노동을 하고 있는 30세 미만 청년 360만 명 중 월급이 120만원도 안 되는 저임금 노동자가 105만 명으로 무려 30%에 달함. 심지어 법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청년은 38만 명으로, 전체의 10%를 넘어섬.

[표3] 청년노동자 최저임금 미만 실태

(단위 : 천명)

구분	노동자수	미만자수	발생비율(%)
전체	17,734	1,699	9.6
19세 이하	257	113	44.0
20-24세	1,156	186	16.1
25-29세	2,173	80	3.7
29세 이하	3,586	379	10.6

※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2013년 보고서에서 재인용.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2012년 8월 원자료.

- 청년노동에 대한 노동법 적용의 확대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청년들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을 현실화하여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

2. 최저임금과 청년노동

- 2014년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급 5,210원으로 2013년도에 비해 금액으로는 350원, 비율로

는 7.2% 인상된 금액.

- 지난 정부들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연도별로 분석하면, 임기 첫해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임기 전체의 평균인상률을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임. ‘7.2%’ 인상률은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중간정도 수준임.

[표4] 최근 20년 간 정부별·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

정부	심의년도	인상률	임기 내 평균 인상률
이명박 정부	'12	6.1	5.21 (5.825*)
	'11	6	
	'10	5.1	
	'09	2.75	
	'08	6.1	
노무현 정부	'07	8.3	10.64
	'06	12.3	
	'05	9.2	
	'04	13.1	
	'03	10.3	
김대중 정부	'02	8.3	9.02
	'01	12.6	
	'00	16.6	
	'99	4.9	
	'98	2.7	
김영삼 정부	'97	6.1	8.126
	'96	9.8	
	'95	8.97	
	'94	7.8	
	'93	7.96	

※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 국제적인 경제위기 상황이었던 '09년도 심의 인상률을 제외하고 계산한 평균 인상률

- 문제는 그 결과가 노동계가 제시한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50%’에 근거를 두고 산정된 5,910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 법정 최저임금은 불안정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의 전반적인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문제. 따라서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은 청년을 비롯한 저임금노동자의 ‘임금단체 협상’과 같은 의미를 지님.

-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임. 국제사회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임금주도 성장론’을 이론적 바탕으로 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들에게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고자 함.

‘최저임금 인상→임금주도 경제성장론’이 청년들에게 주는 경제적 효과(1)

- ① 저임금·비정규직·취약계층 노동자인 청년들의 소득증가와 생활안정. “아래의 [표5]와 같이 20대 청년층의 일자리는 임금이 낮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임금증가 속도도 느렸으며,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도 다른 연령대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¹⁾

[표5] 20대 청년층 일자리의 특성²⁾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월평균임금 (단위: 만원)	127.3	132.2	138.1	146.8	144.1	150.6	155.4	160.4
정규직 (단위: 천명)	1,629	1,660	1,740	1,725	1,632	1,653	1,711	1,592
비정규직 (단위: 천명)	2,142	2,029	1,930	1,822	1,837	1,761	1,716	1,738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중	56.8%	55.0%	52.6%	51.4%	53.0%	51.6%	50.1%	52.2%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 각 연도 8월 자료 이용 추산

- ② 고등교육 과정에서 높은 교육비, 주거비, 각종 생활비 등을 감당해야 하는 청년들이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시간제 일자리의 단시간 노동임. 시간급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며 법정 최저임금이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곧바로 시간제로 일하는 청년들의 임금소득 증가로 이어짐. 그러나 이와 동시에 20대 청년층을 주로 고용하고 비숙련 노동을 수요로 하는 시간제 일자리의 고용인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 가능함. (물론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있음.)
- ③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구직과정 중의 청년들에게도 효과가 있을 것. 고질적인 청년고용문제, 즉 좋은 일자리의 부족으로 청년층의 구직기간이 점차 길어지면서 생활문제가 발생함.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시간제 노동의 임금증가가 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구직과정에 임

1) 김수현(2013) “청년일자리 현황과 과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2) 김수현(2013) “청년일자리 현황과 과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일정 수준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 (물론, 이 목표만으로 볼 땐, ‘취업촉진수당’처럼 구직 중인 청년들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가 훨씬 효과적일 것.)

‘최저임금 인상→임금주도 경제성장론’이 청년들에게 주는 경제적 효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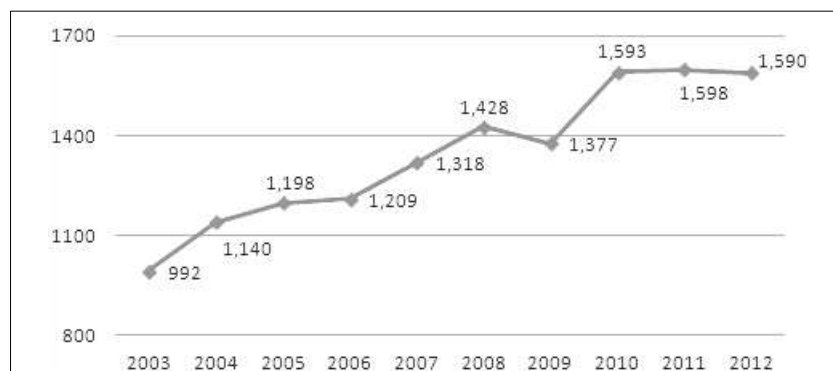
- 청년들은 시간제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한편, 더 안정적이고 근로조건이 좋고 임금 수준이 높은 일자리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구직자’이기도 함. 그런 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층을 주된 수요로 하는 중소기업의 신규채용을 축소시킬 것이라는 재계의 주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위협적인 반대 논리가 됨. **“최저임금이 오르면,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줄 것이다.”** 이 논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여기서 중소기업 일자리의 특성에 대해 더 살펴보고자 함.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기업 개수로는 전체의 99.9%를 차지하고, 종사자수로는 전체의 89.1%를 책임지고 있음. 양적으로만 보면, 90%에 가까운 일자리가 중소기업에서 창출되고 있는 것. 그런데 문제는 중소기업이 만들어내는 일자리의 질이 매우 낮으며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격차가 점차 심해지고 있다는 점.

[표6] 기업규모별 일자리 특성 (2013년 8월 기준)³⁾

구분	5인 미만	5인 이상 10인 미만	10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월평균 임금 (단위: 만원)	125.9	167.6	203.3	235.9	259.8	341.9
비정규직 비중	81.6%	60.9%	46.8%	35.2%	24.8%	15.3%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 2012년 8월 자료 이용 추산

<그림>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추이 (상용직 월 임금총액 기준, 단위: 천원)



3) 김수현(2013) “청년일자리 현황과 과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
- 중소기업 일자리의 현실이 이렇게 열악하니 청년구직자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것은 당연함. 구직과정을 계속 연장하더라도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 더 높은 스펙을 쌓는 것이 개인에게는 합리적인 선택임.
 - 중소기업 전체가 90%의 고용을 책임지지만 일자리의 질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정작 청년층에 대해 수요가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은 구인란을 겪고(노동수요의 측면), 청년구직자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구직란을 겪음(노동공급의 측면). 이른 바 노동시장 내에서 노동수요와 노동공급 간의 ‘미스매치’ 문제가 발생하여 청년고용문제를 심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 결국 청년일자리문제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의 문제이고, 그것은 ‘중소기업 일자리’의 문제! 그런 점에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중소기업의 고용이 감소한다는 주장은 그것을 실증할 수 있느냐를 떠나서 청년층에게는 현실적인 설득력이 없음. ‘어떤 일자리’가 늘어나고 줄어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감소하는 일자리는 애초에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가 아닌 것. 물론 ‘총고용량’의 문제가 있겠지만, 청년일자리문제는 사회서비스·공공부문 등 새로운 영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과 더불어 기존의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 핵심과제임.
 - 그런 점에서 적극적이고 단계적인 최저임금 인상정책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른 정책들과 함께 실행된다면, 중소기업 일자리 전반의 질(임금수준)을 점진적으로 개선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을 끌어올리는 것. 그것은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줄여나감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구직자들의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낳을 것이며, 미스매치 해소를 통해 청년일자리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음. 이것은 중소기업의 입장에서조차 장기적인 발전 전략으로서 충분히 의미 있음.
 - 현실적인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당장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분명 존재할 것이라는 점. 이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중소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보전 방안으로 정부가 기업의 재정상황을 확인해 단기적으로 임금부족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가능할 것.⁴⁾
 - 더 근본적으로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꾸는 ‘경제민주화’의 정책과제들이 최저임금 인상정책과 반드시 결합돼야 함. 대기업을 규제하여 불공정한 원·하청관계나 거래관행을 근절하도록 강제하고 이윤배분구조를 개선해 ‘중소기업 노동시장’의 임금총량 자체

4) “좋은 일자리로 바꾸고, 만들자”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2012)

를 계속 증가시켜 나가야 함.

- 실제 없는 ‘창조경제’, 양질의 일자리 없는 ‘고용률 70%’, 최저임금 인상 없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모두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답이 될 수 없음. 청년층, 보다 정확히 청년 ‘노동자’와 ‘구직자’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굉장히 절박한 삶의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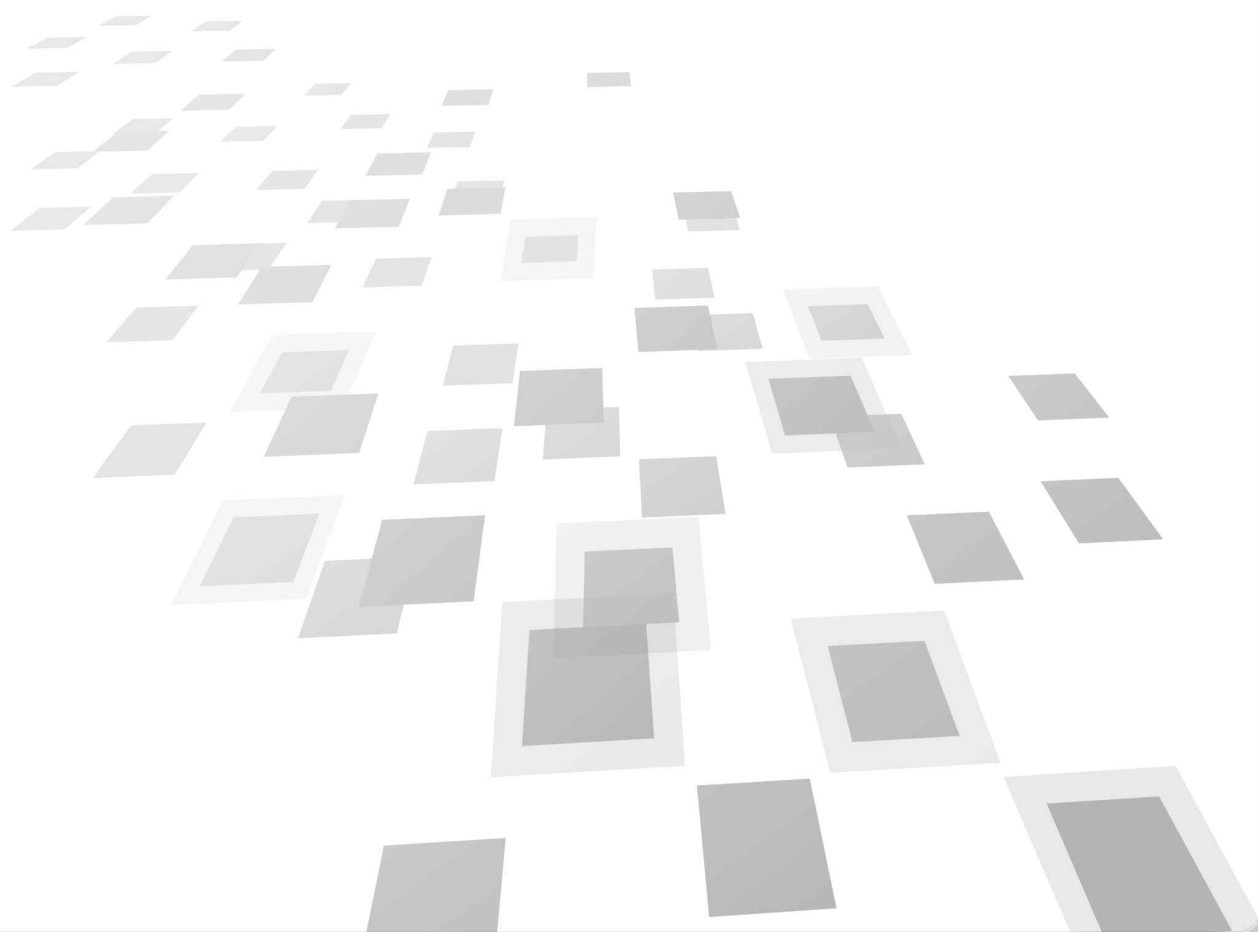
3. 개선 과제의 도출에 대한 제언

- 청년노동의 기본적인 문제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음. 채용과정과 근로계약의 체결, 근로조건과 노동환경, 해고와 퇴직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위법적인 실태들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여기서 업종별·직종별로 나타나는 노동시장의 특성에 따른 접근이 필요함.
- 청년들이 처해있는 저임금 노동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최저임금 인상이 관건적임. 그런데 최저임금의 심의가 정부 주도의 노사정 사회적 협의모델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부가 가진 경제·산업·노동정책의 큰 방향성이 중요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청년들의 임금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노력과 함께, 최저임금 위반 실태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수반해야 함. 고용노동부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감독관의 수가 수많은 업체들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현황에서,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위반 시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확충과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서울시 노원구·성북구에서 2013년도부터 시행한 ‘생활임금제도’를 확대하는 정책을 구상할 수 있음. 지방정부 산하기관에 직접 고용된 인원뿐만 아니라, 하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까지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한다거나 민간으로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는 제도 설계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함. 지방선거의 노동의제로 제기하는 방법이 가능함.
- 본 발제에서 주되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한편으로 청년들을 고용과 실업의 쳇바퀴에 가두는 불안정 노동의 문제가 심각함. 청년아르바이트와는 구분되는 청년노동의 한 형태로써 ‘계약직 노동’의 문제를 별도로 심도 있게 연구해볼 필요가 있음. 청년들이 처음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단계에서 첫 일자리가 계약직인 경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
- 실제로 2014년 1월 13일에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뒤 첫 일자리가 1년 이하 계약직이었던 청년(만 15~29세)은 82만 9000명으로 전체의 21.2% 달했음. 다섯 명 중 한 명꼴로 고용불안정이 심각한 계약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것. 이는 전년(80만 2000명) 대비 3.4%, 2008년(50만 5000명) 대비 64.2%가 증가한 수치.
 - 정규직의 업무를 대체하는 상시적 직무의 일자리의 경우에도 계약직 고용을 통해 청년들을 채용하는 것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함. 계약직 사용의 사유를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청년이 희망인 나라, 청년을 최우선시하는 나라를 향해

안 진 결(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청년이 희망인 나라, 청년을 최우선시하는 나라를 향해

- 교육, 주거, 통신, 일자리 분야에서 청년 대책을 중심으로
- 박근혜 정부의 청년 관련 공약의 이행 정도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안 진 결(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반값등록금국민본부 공동집행위원장)¹⁾

1. 청년 의제

- 최근 청년 실업률이 최악이고, 삼포 세대라는 말까지 나오는 등 청년층의 상황이 최악 또는 그 즈음이라는 데 많은 분들이 동감하고 있음. 또 청년·대학생 층의 사회적 좌절과 분노, 상실감도 상당한 상황에서 청년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이슈 파이팅이 필요한 상황임.
- 그런 상황에서 청년정책연구소의 출범은 매우 큰 의미가 있고, 오늘 토론회에서처럼 청년 노동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한 것도 청년 층의 실업 문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매우 적절한 접근이라고 할 것임.
- 아래 기술한 것처럼 포괄적인 청년 이슈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지만, 청년·대학생들과 공감,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서는, 알바, 최저임금, 등록금, 국가장학금, 반값 기숙사, 반값 통신비, 토익시험 문제, 재벌·대기업의 청년고용 확대 촉구 등 구체적인 의제의 제시와 각각의 구체적인 이슈 파이팅, 정책 실현을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할 것임.

2. 최근 시민사회의 청년 이슈 파이팅 현황

1) 최저임금 문제와 알바 권리 찾기

- 최저임금은 청년임금, 청년유니온
- 최저임금 인상 투쟁
- 알바 권리 찾기, 알바연대, 알바노조

1) 청년 일자리, 청년노동 문제는 다른 발제자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이야기해주셨기에 저는 다른 부분을 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723-5303, 019-279-4251, ngo8518@pspd.org

2) 토익, 토익 관련 학원 등에 대한 집중적인 문제제기

-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민변의 공정위 신고와 이슈 파이팅
- 토익 시험 자체에 대한 신고와 관련 학원들의 허위 과장 광고까지 신고
- 자세한 내용은 별첨

3) 반값등록금 투쟁

- 등록금넷, 반값등록금국민본부
- 반값등록금 공약 파기와 국가장학금 제도의 문제점(별첨)

4) 청년 주거권 운동

- 청년 공공임대 확충, 반값 기숙사비 운동, 직영기숙사 확충
- 대학생 주거권 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등

5) 청년 부채 탕감 이슈

- 청년 부채, 청년 금융 문제도 심각
- 금융정의연대, 토닥토닥협동조합 활동 등

3. 우리 청년들에겐 반값등록금과 반값통신비, 그리고 반값 기숙사가 절실합니다.

한 때 ‘반값’이라는 말이 유행이었고, 지금도 심심치 않게 ‘반값’이라는 말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최근 이야기하고 있는 ‘반값’은 상술로서의 ‘반값’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영역에서, 국가와 사회가 공공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주어야 할 영역에서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과도한 고통과 부담을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반값’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국민들이 길거리의 튀김 값을 ‘반값’으로 해달라고 하거나, 슈퍼에서 파는 ‘사이다’ 가격의 원가를 공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피할 수 있는 것, 선택의 문제인 것, 공공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사적인 영역’에 가까운 것들을 기업의 영역, 시장의 원리에 일부 맡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즉, 주거·교육·의료·통신 등 국가와 사회의 근간이 되는 공공 서비스의 영역, 국민들의 ‘생존’과 ‘삶의 기초’가 되는 영역에서만은 ‘공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주거·교육·의료·통신 서비스는 무엇보다도 공공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국가와 사회의 의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반값 등록금, 반값 통신비 이슈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전월세 문제 해결 이슈 등이 우리 국민들에게 큰 지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사람의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과 영역이 바로 ‘교육’이고, 교육 중에서도 개개인의 사회 구성원의 자기실현과 사회 발전의 동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고등교육’일 것입니다. 그런데, OECD 꼴지 수준의 고등교육 예산과 함께 대부분의 고등교육을 민간에만 떠넘긴 결과, 사립대학들의 비리나 부조리가 터져 나오거나, 대학이 나날이 시장화되는 모순이 대학사회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러한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에 대한 무책임과 직무 유기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반기를 든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2011년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반값등록금” 투쟁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국민적 봉기’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반값등록금 투쟁을 전후해서 대학가에는 많은 제도적 변화가 발생한 것입니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든든학자금 제도), 학자금대출이자 2.9%로 하향, 국가장학금 제도, 등록금의 적립금 전환 원칙적 금지, 서울시립대의 전격적인 반값등록금 실현 등이 이루어졌고, 이는 대학생들의 삶에 실제로 큰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매 학기마다 ‘서울시립대식의 반값 등록금’을 부러워하면서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든든학자금을 이용하는 것은 거의 모든 대학생들의 일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이나 든든 학자금은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이 아니라는 점에서 결정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 형 반값등록금”(모든 대학생들의 고지서에서 등록금 절반 경감-현재 서울시립대 인문사회계열 등록금 102만원)에다가 추가로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는 국가장학금이 지급되고, 그 상태에서도 학자금이 부담스러운 이들에게는 무이자로 학자금과 생활비를 충분히 대출 받아서 나중에 졸업해서 돈 벌어서 갚게 하는 것으로 든든 학자금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훌륭한 대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위와 같은 대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작년 박근혜 정부의 첫 예산안(2014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됐는데, 반값등록금 관련 국가장학금 예산이 교육부 증액 요구분 1.6조 원에서 무려 1.2조 원이 삭감된 0.4조원 증가에 그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대로 '2014년부터 대학 등록금에 대한 실질적 반값 정책'을 완성하려면 내년 국가장학금 예산은 올해보다 1.2조원이 더 늘어난 4조원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단 0.4조원만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국회의 노력으로 0.55조로 최종 통과) 이는 또 하나의 중대한 공약 파기라 할 것입니다. 또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 중에서 성적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작금 우리 국민들의 또 하나의 근심이 바로 통신비 부담입니다.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5,400만명이 넘었고,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통 집집마다 통신비로만 30~40만원 정도를 지출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통계청은 2012년 소비지출 중 식료품은 27.8%, 교육비는 15.1%, 주거비는 12.7%, 교통비는 11.6%, 통신비는 7%, 의료비는 5.8%를 차지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가계에서 통신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들의 평균(2%대)보다 3~4배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신서비스는 다른 재화와 달리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통신사업자들에게 공평하고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국민들에 대하여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여 공공서비스로서의 성격을 가짐을 분명히 하고 있고, 따라서 이동통신서비스의 원가 관련 자료에 영업비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금의 원가 공개로 얻을 수 있는 투명하고 공공적인, 그리고 저렴한 이동통신요금의 책정이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므로 정부당국(미래부)은 이동통신서비스의 원가 관련 자료의 공개를 거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또 이동통신요금의 원가를 투명하고 공개하거나 반값통신비처럼 요금을 획기적으로 인하하는 일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대대수 국민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반값 기숙사도 절실합니다. 학교 안팎의 민자기숙사와 하숙비가 한달 50만원 안팎인 현실에서 학교 부근에서 생활하는 이들의 주거비 부담은 상상을 초월하고, 이는 인간 이하의 주거 기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수용율은 10%가 되지 않고, 기숙사 관련 박근혜 정부의 공약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민자기숙사와 학교 부근의 임대주들의 폭리, 담합, 횡포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정당, 시민사회단체, 청년 단체들이 힘을 모아 학교의 기숙사를 대폭 확충하고, 연합 공공기숙사를 대폭 늘리고, 기숙사비를 반값으로 하고, 청년 1-2인 세대들을 위한 공공원룸텔 등이 대폭 확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4. 토익 시험의 문제점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1) 영어능력평가시험 현황

최근 5년간 토익 응시자수는 아래와 같이 연간 약 200만명에 달하는 반면(증 제1호증 2012

년 토익 정기시험 성적분석 자료 참조), 다른 영어능력평가시험인 텡스(TEPS), 토플(TOEFL) 등의 응시자 수는 대략 4~50만명 정도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5년(2008. ~2012.) 토익 응시자 수]

년도	응시인원	시행회수
2008	1,896,972명	12회
2009	1,936,379명	12회
2010	2,084,687명	13회
2011	2,110,010명	14회
2012	2,085,874명	15회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하는데, 이를 판단할 때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고(법 제2조 제7호), 특정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52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참조)

그렇다면, 피신고인은 ‘영어능력평가시험’시장에서 무려 80% 이상의 시장점유율(2012년도 기준)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2) 피신고인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가. 과도한 응시료 인상

(1)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과도한 응시료 인상

1999년부터 2011년 사이 누적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46.7%에 그친 반면, 토익 응시료 상승률은 61. 5%까지 치솟았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누적 인상률
물가 상승률	0.8	2.3	4	2.8	3.5	3.6	2.8	2.2	2.5	4.7	2.8	3	4	46.7

※ 자료출처 : 통계청

[토익 응시료 인상률]

연도	1999	2000	2001	2003	2005	2007	2009	2012	누적 인상률
토익 가격	26000	28000	30000	32000	34000	37000	39000	42000	61.5

※ 자료출처 : (주)와이비엠 한국토익위원회

특히, 토익은 미국의 이티에스(ETS)사가 문제를 개발하고 피신고인이 국내에서 이 문제를 제공받아 연간 12회 내지 15회 정도 시행하는 ‘영어능력평가시험’입니다. 따라서 토익의 경우, 피신고인이 이티에스에 제공하는 문제 개발비 등 라이선스 비용은 일정한 반면, 토익 시험에 드는 응시자 1인당 경비- 문제지 인쇄비, 고사장 대여비 등-은 일반적인 소비재와 같이 응시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해서는 귀 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조사하시어 구체적인 비용내역을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익은 1982년 국내에 첫 도입된 이후 2001년 당시 20년간 누적 응시자 수가 400만명에 불과하였고, 응시료 또한 3만원에 불과하였습니다. 이후 토익 응시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위 최근 5년간 응시인원 수는 연간 200만명에 육박하고 5년 누적인원은 1,000만명에 이르렀습니다(증 제2호증 토익시험 연역(<http://exam.ybmsisa.com/toeic/info/history.asp>) 참조). 그렇다면 단순히 비교해보더라도 연간 100만명도 채 되지 않은 2001년 당시 1인당 응시자 경비가 2012년 현재 1인당 경비보다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간 토익응시자 수 추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토익 응시료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았을 때, 토익응시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경비가 절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고인은 물가상승률 보다 높은 비율로 과도하게 토익 응시료를 인상하였습니다. 즉 지금은 흔히들 말하는 ‘박리다매’가 충분히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2) 피신고인의 법위반

위와 같이 피신고인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 보다 높은 비율로 토익 응시료를 인상함으로써, ① 자기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인 응시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불이익 제공)를 하였고(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위반), ②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 물가 상승률 보다 높은 비율로 토익 응시료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의 가격을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는 남용행위를 하였고(법 제3조의2 제1항 위반), 이로 인해 동시에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행위를 하였습니다(법 제3조의 2 제5항 위반).

나. 값비싼 토익 성적 재발급 비용

(1) 토익 성적 재발급 비용

피신고인은 토익성적 재발급 비용으로 소비자에게 3,000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3,000원의 비용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토익 성적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증 제3호증 온라인 발급이용 안내(http://exam.ybmsisa.com/score/customer/online_info.asp) 참조). 토익 성적표는 1장으로 응시자 인적사항, 2개 분야(듣기와 읽기 이해도)의 점수 및 총점, 백분율등으로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영어능력평가시험인 토픽스의 경우, 토익과 유사한 성적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적 재발급 비용은 토익의 1/2인 1,500원에 불과합니다.

토익과 토픽스 모두 성적 재발급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드는 기본 비용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두 시험의 용도 역시 유사하다면, 응시자 1인당 성적 재발급 비율에서도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토픽스와 비교하여 토익 성적 재발급 비용이 2배나 높을 하등의 이유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2) 피신고인의 법위반

위와 같이 피신고인은, 과도하게 높은 비용을 받고 성적표를 재발급 해줌으로써, ① 자기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인 응시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불이익 제공)를 하였고(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위반), ②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를 하였습니다(법 제3조의 2 제5항 위반).

다.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환불 규정 및 특별접수기간 설정

(1) 피신고인의 토익에 대한 환불규정

피신고인은 본인의 '접수취소 및 환불에 관한 규정(TOEIC)' 제4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증 제4호증 접수취소 및 환불에 관한 규정 참조).

제4조(시험 취소 및 환불 금액)

시험취소를 신청한 접수자에게는 아래 신청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환불한다.

1. 접수기간 내 취소 : 응시료 전액 환불

※ 정기접수 마감일 기준 7일 이내 접수한 수험자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취소 시 응시료 전액(100%) 환불가능

2. 접수기간 이후 취소

가) 1차 취소 신청 기간 : 인터넷 정기접수 마감 이후부터 1주간

－ 응시료의 60%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 환불

나) 2차 취소 신청 기간 : 1차 신청기간 이후부터 1주간(2012년 1월 정г시시험부터 적용)

－ 응시료의 50%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 환불

다) 3차 취소 신청 기간 : 2차 신청기간 이후부터 시험 전일 낮 12시까지

－ 응시료의 40%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 환불

즉, 토익 응시자가 정기접수 기간 내 취소하면 전액(100%) 환불받고, 접수기간 이후 취소하면 정기접수 마감이후 1주간 60%, 그 이후 1주간은 50%, 그 이후부터 시험 전일 낮 12시까지는 40%를 환불 받게 됩니다.

(2) 피신고인의 토익에 대한 특별접수기간 설정

피신고인은 본인의 '일반시험관리규정(TOEIC)' 제2조 제1항에 따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기시험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구체적인 시험일, 성적발표일, 접수기간 등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본인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있습니다{증 제5호증 일반시험관리규정 (http://exam.ybmsisa.com/toEIC/guide/guide_rule_1.asp) 참조}.

[피신고인의 2013년 토익시험 일정]

구분	시험 일자	성적 발표일	2013년 TOEIC 정기시험 일정				전체 입수
			정기접수 기간	입수	특별접수 기간	입수	
1	01월 20 일(일)	02월 08 일(금)	2012년 11월 26 일(월)~12월 24 일(월)	29	12월 24 일(월)~2013년 01월 17 일(목)	25	54
2	02월 02 일(토)	02월 21 일(목)	2012년 12월 10 일(월)~01월 07 일(월)	29	2013년 01월 07 일(월)~01월 30 일(수)	24	53
3	02월 24 일(일)	03월 15 일(금)	12월 24 일(월)~2013년 01월 21 일(월)	29	01월 21 일(월)~02월 21 일(목)	32	61
4	03월 31 일(일)	04월 19 일(금)	01월 21 일(월)~02월 25 일(월)	36	02월 25 일(월)~03월 28 일(목)	32	68
5	04월 28 일(일)	05월 17 일(금)	02월 25 일(월)~04월 01 일(월)	36	04월 01 일(월)~04월 25 일(목)	25	61
6	05월 11 일(토)	05월 30 일(목)	03월 11 일(월)~04월 08 일(월)	29	04월 08 일(월)~05월 08 일(수)	31	60
7	05월 26 일(일)	06월 14 일(금)	04월 01 일(월)~04월 29 일(월)	29	04월 29 일(월)~05월 23 일(목)	25	54
8	06월 30 일(일)	07월 19 일(금)	04월 29 일(월)~05월 27 일(월)	29	05월 27 일(월)~06월 27 일(목)	32	61
9	07월 28 일(일)	08월 16 일(금)	05월 27 일(월)~07월 01 일(월)	36	07월 01 일(월)~07월 25 일(목)	25	61
10	08월 10 일(토)	08월 29 일(목)	06월 10 일(월)~07월 08 일(월)	29	07월 08 일(월)~08월 07 일(수)	31	60
11	08월 25 일(일)	09월 13 일(금)	07월 01 일(월)~07월 29 일(월)	29	07월 29 일(월)~08월 22 일(목)	25	54
12	09월 29 일(일)	10월 18 일(금)	07월 29 일(월)~08월 26 일(월)	29	08월 26 일(월)~09월 26 일(목)	32	61
13	10월 12 일(토)	10월 31 일(목)	08월 12 일(월)~09월 09 일(월)	29	09월 09 일(월)~10월 09 일(수)	31	60
14	10월 27 일(일)	11월 15 일(금)	08월 26 일(월)~09월 30 일(월)	36	09월 30 일(월)~10월 24 일(목)	25	61
15	11월 24 일(일)	12월 13 일(금)	09월 30 일(월)~10월 28 일(월)	29	10월 28 일(월)~11월 21 일(목)	25	54
16	12월 29 일(일)	01월 17 일(금)	10월 28 일(월)~11월 25 일(월)	29	11월 25 일(월)~12월 26 일(목)	32	61

특히, 피신고인은 정기접수기간 외에 정기접수기간 응시료 42,000원 보다 10% 비싼 46,200원의 응시료를 받고 별도의 특별추가접수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응시자들의 토익 응시 현실

피신청인이 분석한 2012년도 토익응시 목적에 따르더라도 응시자들은 취업(50%), 앞으로의 학습방향 설정(21%), 졸업 및 인증(18%), 승진(8%), 연수과정 성과측정(3%)등을 이유로 하여 토익에 응시하고 있습니다(증 제1호증 2012년 토익 정기시험 성적분석 자료 참조). 특히 응시자 중 76%는 취업(50%), 졸업 및 인증(18%), 승진(8%)과 같이 특정 점수이상을 취득할 목적으로 토익에 응시하고 있습니다. 응시자 1인 평균 토익 응시회수는 2.25회로(2012년도 기준), 특정점수를 획득할 필요가 없는 학습방향 설정, 연수과정 성과측정 등을 목적으로 일회적으

로 시험 본 사람을 제외하고 고려해 볼 때, 취업 등의 목적으로 시험을 보는 응시자는 필요한 토익점수를 획득하기 위해 최소한 연간 2회 이상 토익 시험을 치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토익 응시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환불규정 및 특별추가접수기간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토익 응시자의 대다수는 특정 점수를 획득할 때까지 계속해서 토익을 보는 반복 응시자들입니다. 토익점수는 토익시험일부터 약 19일 이후에 발표됩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반복 응시자들은 당해 토익점수에 따라 다음번 토익시험에 응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피신고인은 응시자의 이러한 현실을 교묘히 이용하여 응시자에게 불이익하게 환불 규정 및 특별추가 접수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환불규정과 관련하여서는**, 피신고인은 응시자들이 당해 토익점수가 발표나기 이전에 다음번 토익시험을 접수하도록 다음번 토익 정기접수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토익점수가 필요한 일반적인 반복 응시자들은 당해 토익점수를 확인하기도 전에 정기접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후 응시자가 당해 시험에서 자신이 원하는 토익점수를 얻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다음번 토익점수는 취소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결과 피신고인의 환불 규정 및 당해 토익시험 발표일과 다음번 토익 접수기간 일정으로 인해 아무리 많이 받아 봐야 단지 응시료의 40%밖에 환불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예시]

A응시자가 위 2013년 토익시험일정에 따라 2013. 2. 2. 자 토익시험에 응시하고 다음번 시험인 2013. 2. 24. 자 시험을 정기접수기간(2012. 12. 24. ~ 2013. 1. 21.)에 접수한 후, 당해시험 토익성적 발표일인 2013. 2. 21. 특정 토익점수를 획득하여 다음번 시험을 취소하려고 하면, 그 취소일이 정기접수기간 만료일인 2013. 1. 21. 부터 2주가 훨씬 지난 시점이어서 A응시자가 실제 환불 받을 수 있는 다음번 시험(2013. 2. 24. 자)에 대한 환불금액은 응시료의 40%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로, **특별 추가접수기간과 관련하여서는**, 피신고인은 정기접수기간과 별도로 정기접수가 마감된 후 곧바로 10% 인상된 응시료로 한 달 가량의 특별접수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토익점수가 필요한 반복 응시자가 당해 토익시험 후 19일이 지난 시점에 토익점수를 확인한 후에는, 이미 마감된 정기접수기간을 이용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10% 인상된 응시료를 부담하면서 피신고인 정한 특별추가 접수기간에 접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결국, 반복 응시자는 당해 토익 성적을 확인한 후 다음번 토익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특별추가접수기간에 10% 인상된 응시료를 내고 접수하여야 합니다.

[예시]

A응시자가 위 2013년 토익시험일정에 따라 2013. 2. 24. 자 토익시험에 응시하고 시험발표일인 2013. 3. 15. 성적을 확인한 후에 다음번 시험인 2013. 3. 31.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다음번 시험의 특별접수기간(2013. 2. 25. ~ 2013. 3. 28.)에 10% 인상된 응시료를 지급하고 토익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5) 피신고인의 법위반

위와 같이 피신고인은, 응시자의 반복적 응시 현실을 이용하여 시험발표기간, 환불규정, 특별추가접수기간 등을 응시자들에게 불리하게 정함으로써, ① 자기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인 응시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불이익 제공)를 하였고(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위반), ②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를 하였습니다(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위반).

청년 주거빈곤 보고서

권지웅 (민달팽이 유니온)

이은진 (민달팽이 유니온)

1. 들어가며

1) 한국 사회의 미래 동력은 무엇인가?

청년주거문제를 이야기하는 첫 머리에서 미래 동력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청년이 처한 현실이 한국 사회의 미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미래 동력과 관련 사회적경제, 창조경제, 녹색경제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물론 어떤 모델을 선택할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선택된 모델을 구현하고, 시행할 인적자원은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국가의 동력으로써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한국의 청년은 주거문제로 활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전국 청년의 14.7%, 서울 1인 청년의 36%가 주거빈곤 상태이다. 전국적으로 139만 명의 청년이 지하방, 고시원,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서 웅크리고 살고 있는 것이다.

주거빈곤 상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황이 좋지않다. 독립한 청년이 임대할 수 있는 원룸, 하숙, 고시원 등의 1인 주거시설의 평당 임대료는 10.9만원으로, 최저주거기준을 충족시키는 4평 남짓한 공간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주거비(임대료+냉난방비 등 기본 주거유지비)는 50만원이 넘는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이 주거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월 100시간 이상을 일해야 하며,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해도 전체 1인가구의 평균소득이 140만원임을 고려하면 1인가구 소득의 35%를 주거비로 지출해야 한다. 현재 청년들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주거비를 마련하는 것은 저축할 돈, 자기계발 시간, 여가 등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임차인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불안 혹은 부모님의 불안을 보며 집을 소유하기를 꿈꾸는 순간, 더 큰 좌절을 만나게 된다. 서울시 중간 분위의 집값은 4억 4천만 원으로 중간 분위 소득을 가진 5분위 가구의 연간 저축 가능액 587 만원을 고려하면, 집을 구입하는데 75년이 걸린다(표 1). 사실상 소득으로 집을 마련하기란 불가능한 것이 되어버린 것이다.

2) 너무나 잘 정리되고 연구된 정책 과제라서 민달팽이유니온 자료를 그대로 씁니다.

이처럼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집에 대한 청년들의 극심한 스트레스는 자기개발, 취미, 여가 등의 시간을 포기하게 할 뿐 아니라, 결혼·출산 등과 같이 생애주기에서 중요한 일들 까지도 포기하게 한다. 이로 인해 중요한 미래 동력인 청년의 에너지와 인구재생산 구조가 붕괴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초저출산 국가(2010년 합계출산률 1.29명)이자 OECD 자살률 1위(2011년 자살률 31.7명) 국가라는 사실은 이를 반영한다. 경제동력 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활력을 잃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현상이 모두 주거문제로부터 귀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한국의 주거문제는 청년에게 매우 절실하고 절박한 문제가 되었다. 임금 개선만으로 현재의 심각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주거권 확립을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별도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독립기 청년의 주거공간 마련이 생애주기적 과정상 어렵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된다면, 국가는 청년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는 65세이상 고령자를 주거지원 대상으로 두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사회는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미래 동력인 청년을 주거취약 세대로 인정하고 청년의 주거문제 해결에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주거문제로 발목잡혀 허덕이는 청년을 내버려둔 채 다른 동력을 찾아 헤맬 것인지,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표 1> 5분위별 평균 주택가격과 10분위별 가구의 연간 저축가능액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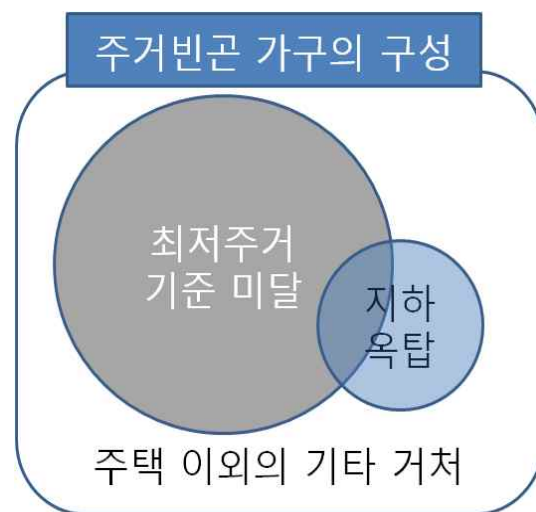
구분			평균 주택가격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2452.0	34127.0	44502.0	59723.0	12353.0
가구 저축가능액	1분위	-459.0	-48.9	-74.4	-97.0	-130.2	-223.1
	2분위	19.0	1197.0	1819.4	2372.6	3184.0	5456.7
	3분위	241.0	93.2	141.6	184.7	247.8	424.7
	4분위	557.0	40.3	61.2	79.8	107.1	183.6
	5분위	587.0	38.2	58.1	75.8	101.7	174.3
	6분위	968.0	23.2	35.2	46.0	61.7	105.7
	7분위	1202.0	18.7	28.4	37.0	49.7	85.2
	8분위	1361.0	16.5	25.1	32.7	43.9	75.2
	9분위	2054.0	10.9	16.6	21.7	29.1	49.8
	10분위	4061.0	5.5	8.4	11.0	14.7	25.2

자료: 국민은행, 통계청, 2012

2. 우리나라의 청년 주거빈곤 현황

1) 청년의 주거빈곤

본 연구에서 ‘청년’은 20~34세의 연령대로 정의된다. 20세 이상의 청년은 청소년기를 벗어나서 본인 스스로를 책임지는 성인 단계에 속하지만 학업, 취업준비기가 길어지면서 34세까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다. 청년 주거빈곤 개념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사는 청년, 지하 및 옥탑에 사는 청년, 비닐하우스·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기타 거처에 사는 청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그림 1).



<그림 1> 주거빈곤 가구의 구성
출처: 어린이재단, 2013.

2) 우리나라의 청년 주거빈곤 현황

우리나라의 청년 주거빈곤 현황을 살펴보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2010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112만 명의 청년(11.8%)들이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에 살고 있다(표 2). 이 수치와 지하 및 옥탑, 주택 이외의 기타 거처(오피스텔 제외)에 사는 인구를 합하여 주거빈곤 상태에 있는 청년의 수를 계산해보면, 총 139만 명(14.7%)이 된다. 청년 중 부모 혹은 친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청년, 즉, 1인 청년으로 한정하면, 주거빈곤 상태에 놓여있는 이들의 비율은 더욱 높아진다. 전국의 1인 청년 중 15.4%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살고 있으며 23.6%가 주거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 이는 전체 인구의 주거빈곤율인 13.0%의 2배에 달하며, 청년의 주거빈곤율인 14.7%보다도 월등히 높다.

전국과 서울 청년의 최저주거기준 미달률을 보면 서울이 16.2%로 전국과 4.8%p 차이를 보이는 반면, 전체 주거빈곤율은 전국과 서울이 각각 14.7%와 22.8%로 8.1%p 차이를 보여 그 격차가 더 크다. 이러한 비율의 차이는 지하·옥탑과 주택이외의 기타 거처에 살고 있는 청년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음을 말한다. 서울 1인 청년 주거빈곤율은 36.3%(12만 명)으로, 1인 청년 3명 중 1명이 주거빈곤 상태인데, 이는 다른 집단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수치이다.

<표 2> 우리나라 청년의 주거빈곤 규모(2010년)

(단위: 명, %)

구분	전국						서울					
	전체		청년		1인청년		전체		청년		1인청년	
전체 인구	46,070,318	100.0	9,457,826	100.0	1,189,820	100.0	9,344,608	100.0	2,294,494	100.0	340,817	100.0
계	4,997,913	10.8	1,117,629	11.8	183,310	15.4	1,367,777	14.6	372,747	16.2	64,057	18.8
최저 주거 기준 미달												
시설 미달	1,654,927	3.6	235,514	2.5	63,166	5.3	197,176	2.1	51,618	2.2	22,029	6.5
면적 미달	3,589,015	7.8	935,434	9.9	138,619	11.7	1,239,930	13.3	340,357	14.8	50,396	14.8
방수 미달	526,227	1.1	112,280	1.2	0	0.0	130,121	1.4	26,660	1.2	0	0.0
최저 주거 미달 이거나 지하 옥탑												
전체	5,790,514	12.6	1,319,442	14.0	239,600	20.1	1,812,022	19.4	494,631	21.6	100,947	29.6
주택이외의 기타 거처	207,442	0.5	68,478	0.7	41,711	3.5	59,585	0.6	29,238	1.3	22,644	6.6
주거빈곤	5,997,956	13.0	1,387,920	14.7	281,311	23.6	1,871,607	20.0	523,869	22.8	123,591	36.3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표 3> 시설 기준 미달의 구성 요소별 특성(2010년)

(단위: 명, %)

구분	전국						서울					
	전체		청년		1인청년		전체		청년		1인청년	
부엌	583,804	1.3	107,668	1.1	41,612	3.5	114,693	1.2	34,120	1.5	17,491	5.1
화장실	1,236,630	2.7	153,431	1.6	34,293	2.9	115,519	1.2	27,720	1.2	11,433	3.4
욕실	578,194	1.3	79,491	0.8	28,710	2.4	79,867	0.9	20,088	0.9	10,933	3.2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전국 1인 청년의 미달 비율이 시설은 5.3%(6만 명), 면적은 11.7%(13만 명)로 다른 비교군에 비해 높다. 부엌 미달 4.1만명(3.5%), 화장실 미달 3.4만명(2.9%), 욕실 미달 2.9만명(2.4%) 순으로, 부엌 미달 가구가 많은 편이다(표 3). 지하·옥탑 거주 비율은 6%(7만명)인데, 이는

전체 인구의 2.7%에 비해 3.3%p 가량 높은 것이다. 주택이외의 기타 거처 거주 비율은 3.5%(4.1만 명)인데, 이는 전체 인구의 0.5%에 비해 3%가량 높은 것으로 전체인구에 비해 7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 이는 주택이외의 거처인 고시원 등에 주로 학생, 무직, 저소득층 등이 살고 있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³⁾

한편 서울 1인 청년의 미달 비율은 시설은 6.5%(2만 명), 면적은 14.8%(5만 명)으로 전국의 1인 청년보다도 각각 1.3%p, 3.1%p 높다. 결국, 전국 전체 가구에 비해 1인 청년이, 전국 1인 청년에 비해 서울의 1인 청년의 주거빈곤률이 더 높다.

3. 서울의 청년 주거빈곤 현황

1) 서울의 청년 주거빈곤 현황

(1) 시도별

서울의 청년 주거빈곤율은 전국의 시도 중에서 가장 높다(표 4). 시도별 청년 주거빈곤율은 서울이 22.8%로 그 다음으로 높은 경기(13.8%), 인천(13.4%)과 큰 차이를 보인다. 뿐만 아니라, 서울 1인 청년의 주거빈곤율 역시 36.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대전의 25.1%, 경기의 24.0%와 10%p 이상 차이를 보인다. 이는 청년들의 주거빈곤 문제가 서울 지역에서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3) SDI 정책보고서. 1인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확대 방안. 이동훈. 2012.

<표 4> 시도별 청년 주거빈곤율(2010년)

(단위: 명, %)

구분	전체 인구			청년			1인 청년		
	인구	주거빈곤	비율	인구	주거빈곤	비율	인구	주거빈곤	비율
서울특별시	9,344,608	1,871,607	20.0	2,294,494	523,869	22.8	340,817	123,591	36.3
부산광역시	3,275,785	383,000	11.7	665,513	76,412	11.5	63,378	11,011	17.4
대구광역시	2,355,524	237,026	10.1	470,245	49,323	10.5	48,378	7,907	16.3
인천광역시	2,554,999	328,098	12.8	546,470	72,964	13.4	52,204	9,450	18.1
광주광역시	1,408,167	101,914	7.2	304,557	27,268	9.0	40,693	6,041	14.8
대전광역시	1,424,261	138,795	9.7	314,092	41,262	13.1	53,017	13,310	25.1
울산광역시	1,034,371	82,104	7.9	203,071	16,957	8.4	20,610	2,729	13.2
경기도	10,777,162	1,266,994	11.8	2,246,940	310,637	13.8	239,846	57,672	24.0
강원도	1,372,215	162,983	11.9	227,569	26,674	11.7	37,702	6,545	17.4
충청북도	1,418,469	139,644	9.8	268,651	27,797	10.3	43,524	6,160	14.2
충청남도	1,871,283	186,157	9.9	352,468	42,845	12.2	56,578	7,989	14.1
전라북도	1,670,255	158,711	9.5	285,135	29,264	10.3	35,064	5,869	16.7
전라남도	1,641,064	178,828	10.9	231,615	23,707	10.2	23,928	3,662	15.3
경상북도	2,431,786	364,721	15.0	420,656	52,009	12.4	67,366	8,433	12.5
경상남도	2,987,165	332,376	11.1	539,148	55,974	10.4	58,743	9,640	16.4
제주특별자치도	503,204	64,998	12.9	87,202	10,958	12.6	7,972	1,302	16.3
전체	46,070,318	5,997,956	13.0	9,457,826	1,387,920	14.7	1,189,820	281,311	23.6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2) 구별

주거빈곤율이 가장 높은 구를 살펴보면, 전체 인구는 중랑구(8.2%), 청년은 관악구(36.8%), 1인 청년은 동작구(55.8%)이다. 청년 주거빈곤율이 높은 4개 구는 관악구(36.8%), 광진구(32.3%), 금천구(29.7%), 동작구(29.6%)이고, 이 중 금천구를 제외한 상위 3개구는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위치해 있는 지역이라는 특징이 있다. 1인 청년의 경우도 동작구(55.8%), 관악구(51.3%), 금천구(38.5%), 광진구(43.6%)에서 주거빈곤율이 높다.

<표 5> 서울의 구별 주거빈곤율(2010년)

(단위: 명, %)

구분	전체 인구			청년			1인 청년		
	인구	주거빈곤	비율	인구	주거빈곤	비율	인구	주거빈곤	비율
종로구	143,064	30,301	21.2	34,119	7,674	22.5	7,182	2,038	28.4
중구	112,420	28,656	25.5	27,573	6,805	24.7	4,104	1,103	26.9
용산구	212,594	45,751	21.5	53,036	12,243	23.1	9,368	2,392	25.5
성동구	280,688	68,131	24.3	69,240	18,055	26.1	10,177	3,887	38.2
광진구	344,091	96,265	28.0	95,798	30,900	32.3	17,974	7,833	43.6
동대문구	327,058	77,413	23.7	83,663	22,545	26.9	16,196	6,354	39.2
중랑구	389,396	109,837	28.2	91,180	25,589	28.1	8,659	3,628	41.9
성북구	437,617	82,118	18.8	105,010	22,961	21.9	15,746	6,139	39.0
강북구	313,803	80,436	25.6	70,213	18,782	26.8	6,316	2,376	37.6
도봉구	338,196	50,010	14.8	71,754	10,837	15.1	4,696	1,253	26.7
노원구	567,020	70,908	12.5	117,077	17,062	14.6	8,119	1,317	16.2
은평구	432,489	84,596	19.6	95,199	18,604	19.5	7,739	2,201	28.4
서대문구	293,175	57,694	19.7	71,507	16,506	23.1	13,046	4,134	31.7
마포구	354,548	72,640	20.5	96,393	23,330	24.2	19,625	6,397	32.6
양천구	455,023	77,981	17.1	91,796	17,964	19.6	6,518	1,957	30.0
강서구	529,862	101,259	19.1	128,424	25,884	20.2	13,357	3,440	25.8
구로구	392,356	66,551	17.0	98,074	17,326	17.7	10,534	4,374	41.5
금천구	224,632	65,544	29.2	53,052	15,769	29.7	7,436	3,603	48.5
영등포구	365,603	73,108	20.0	90,362	18,133	20.1	11,920	4,006	33.6
동작구	374,577	84,844	22.7	104,489	30,913	29.6	21,284	11,882	55.8
관악구	496,839	147,464	29.7	161,358	59,320	36.8	51,615	26,491	51.3
서초구	378,320	41,645	11.0	91,222	13,195	14.5	12,522	2,967	23.7
강남구	510,299	69,704	13.7	135,160	24,149	17.9	30,698	6,411	20.9
송파구	621,847	100,862	16.2	150,566	26,537	17.6	16,004	4,045	25.3
강동구	449,091	87,889	19.6	108,229	22,786	21.1	9,982	3,363	33.7
전체	9,344,608	1,871,607	20.0	2,294,494	523,869	22.8	340,817	123,591	36.3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1인 청년의 주거빈곤율이 35%가 넘는 구는 10개이고, 동작구와 관악구는 각각 1인 청년의 주거빈곤율이 50%가 넘는다. 즉, 독립한 1인 청년의 주거빈곤이 저소득층에 국한되지 않고 더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3) 행정동별

주거빈곤율을 행정동별로 살펴보면(표 6, 그림 2), 1인 청년의 경우 관악구 대학동(7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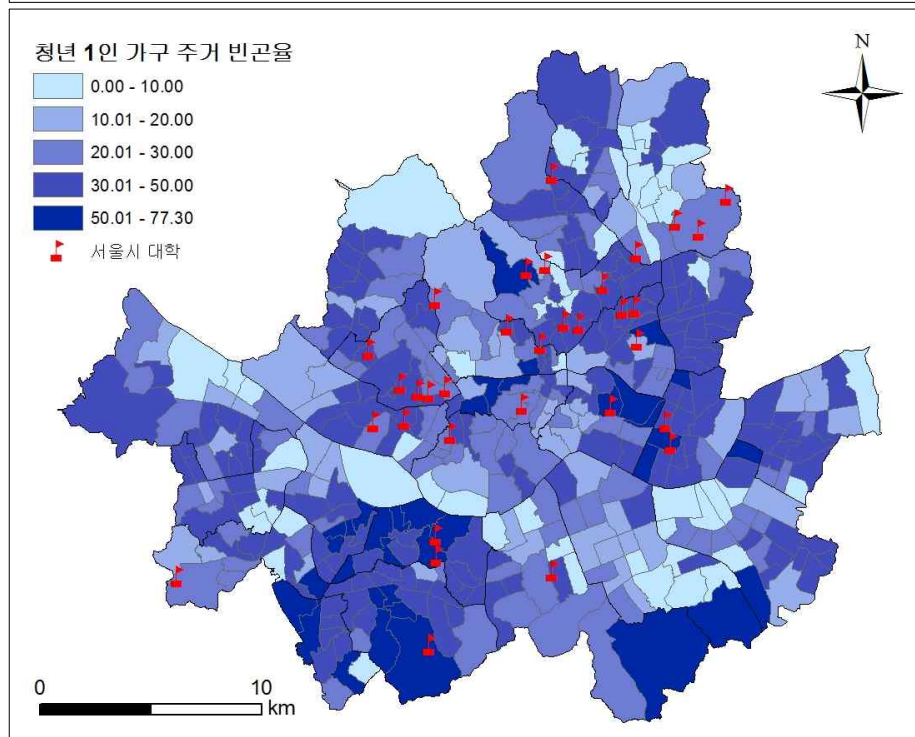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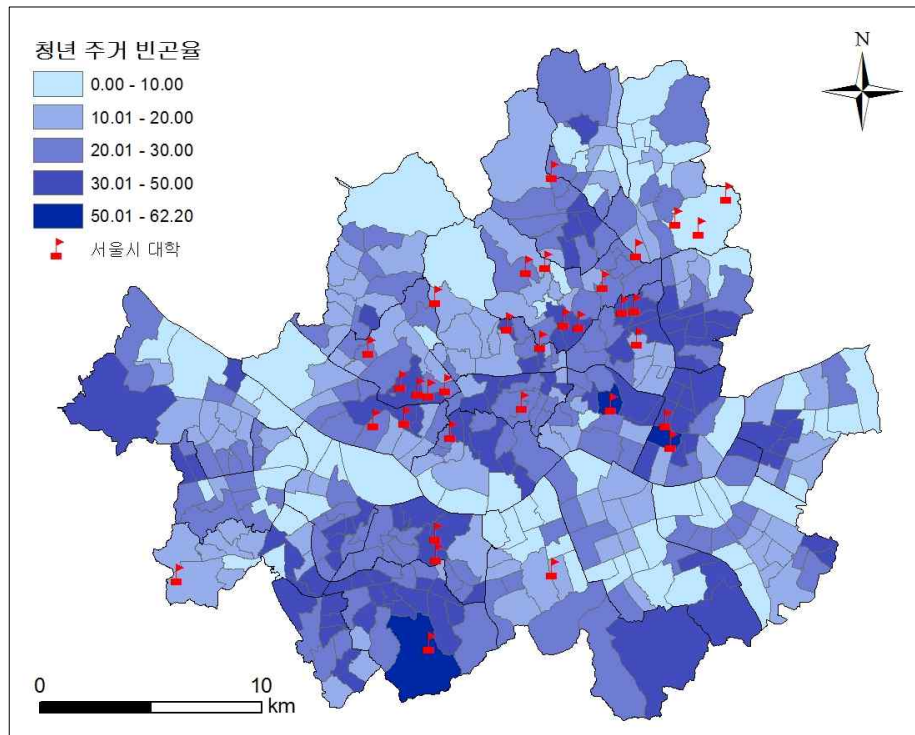
동작구 노량진1동(76.9%), 구로구 구로3동(69.5%)에서 주거빈곤율이 70%에 가깝거나 넘었고, 청년의 경우 관악구 대학동(62.2%), 광진구 화양동(52.3%), 성동구 사근동(51.6%), 동작구 노량진2동(49.7%) 등에서 주거빈곤율이 50% 전후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서울의 청년 주거빈곤을 동단위로 좁혀서 보면 주거빈곤과 대학가의 상관관계가 더욱더 명확해진다. 관악구의 대학동(62.2%), 광진구의 화양동(52.3%), 성동구의 사근동(51.3%)은 청년 주거빈곤율이 50%를 넘어가며 청년 주거빈곤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동이다. 하지만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동별 청년 주거빈곤율을 순차적으로 나열했을 때, 주거빈곤율이 40%가 넘는 동의 개수와 위치다. 서대문구, 동작구, 관악구, 광진구 등은 주거빈곤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 인접한 대학들도 많다는 것이 확인 가능하다. 강남구, 강서구를 제외하고 주거빈곤율이 높은 지역에는 최소 2개 이상의 대학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6> 서울의 청년 주거빈곤율 상위 동(2010년)

(단위: 명, %)

	구명	동명	인구	주거빈곤	비율
청년	관악구	대학동	12,494	7,767	62.2
	광진구	화양동	10,674	5,581	52.3
	성동구	사근동	4,658	2,405	51.6
	동작구	노량진2동	5,327	2,645	49.7
	관악구	서림동	10,578	5,261	49.7
	강남구	세곡동	755	365	48.3
	성동구	용답동	3,533	1,616	45.7
	중구	을지로동	331	149	45.0
	광진구	자양4동	7,252	3,232	44.6
	관악구	신원동	5,996	2,670	44.5
1인 청년	대학동	관악구	8,573	6,623	77.3
	노량진1동	동작구	3,243	2,493	76.9
	세곡동	강남구	30	23	76.7
	노량진2동	동작구	1,773	1,304	73.5
	구로3동	구로구	4,011	2,788	69.5
	을지로동	중구	158	108	68.4
	서림동	관악구	5,824	3,748	64.4
	독산1동	금천구	2,070	1,259	60.8
	신길3동	영등포구	355	206	58.0
	회현동	중구	118	68	57.6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자료 : 인구주택총조사 전수, 원자료, 해당연도.

<그림 2> 청년과 1인 청년의 주거빈곤율

2) 서울 청년가구의 전세가 현황과 변화율

우선 구별로 전세가격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7). 서울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전세 가격이 크게 상승했는데, 상승률이 가장 작은 구는 도봉구(99.1%)이며, 가장 큰 구는 강남구(219.3%)이다. 1인 청년의 전세 가격 상승률은 이와 다소 차이를 보인다. 20~24세 청년의 경우 노원구(81.4%)가 가장 적은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구로구는 2000년에 1,467만원에서 2010년에 6,145만원으로 319%가 올랐다. 20~24세 청년의 경우 전세 가격이 은평구 246.1%, 중구 235%, 도봉구 214.6%가 상승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강남구와 서초구의 전세 가격 상승률보다 높은 비율이다. 이는 25~29세, 30~34세에서도 비슷한 유형을 보이는데, 25~29세의 경우 영등포구가 286.8%, 송파구가 220.2%, 중구가 242.7% 상승했고, 30~34세의 경우 동대문구가 236.8%, 중구가 228.5%, 성동구가 228.4% 상승했다.

전세가 절대액 자체도 소득에 비해 높은 편이다. 전세 가격이 초봉(2010 대졸 초봉 1,739만원)의 150%를 넘는 구가 2000년도에는 12개(종로구, 중구, 용산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였으나, 2010년에는 25개 구 중 강북구를 제외한 24개 구가 초봉(2010 대졸 초봉 3,352만원)의 150%를 넘는다.⁴⁾

소득 대비 전세가를 비교하면, 2000년에 서울 전체 가구의 전세 가격 평균은 4천 271만원으로 당시 초봉의 244.6%이다. 하지만 2010년 전세 가격의 평균은 1억 1,378만원으로 2010년 초봉의 325%나 된다. 2000년보다 2010년의 청년에게 전세집 마련이 더욱 더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4) 취업 전문 포털 사이트 '페이오픈'에 의하면 42만 5천개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2000년 대졸 신입 평균 초봉은 1,739만원이라 발표하였으며, 같은 조사기관은 2010년 대졸 신입 평균 초봉을 3,352만원으로 발표하였다.

<표 7> 서울 1인 청년가구와 전체 가구의 전세 가격 변화(2000~2010년)
(단위: 만원, %)

구분	1인 청년가구									전체 가구
	2000년			2010년			상승률			상승률
	20-24세	25-29세	30-34세	20-24세	25-29세	30-34세	20-24세	25-29세	30-34세	
종로구	2,663	2,959	2,909	5,853	6,553	8,036	119.8	121.5	176.3	133.8
중구	3,173	2,892	3,011	10,630	9,911	9,893	235	242.7	228.5	126.0
용산구	3,482	3,213	3,912	7,760	7,905	11,037	122.9	146	182.1	165.9
성동구	2,232	2,597	2,490	6,040	6,193	8,175	170.6	138.4	228.4	142.1
광진구	2,147	2,220	2,297	5,640	6,041	6,918	162.7	172.1	201.2	159.0
동대문구	2,002	2,217	2,132	5,266	5,102	7,181	163	130.2	236.8	154.7
중랑구	1,621	1,790	2,113	3,558	4,888	5,238	119.6	173.1	147.9	125.0
성북구	2,202	2,285	2,459	5,634	5,774	7,773	155.9	152.7	216.1	165.8
강북구	1,923	1,939	2,131	4,144	4,675	4,183	115.5	141.1	96.3	129.5
도봉구	1,984	2,316	2,710	6,242	5,463	5,540	214.6	135.9	104.5	99.1
노원구	3,192	3,180	3,479	5,789	6,434	6,987	81.4	102.3	100.8	112.6
은평구	1,948	2,121	2,395	6,741	5,911	5,939	246.1	178.7	147.9	153.2
서대문구	2,814	2,795	2,960	6,240	5,913	6,020	121.8	111.6	103.4	112.9
마포구	2,640	2,969	3,087	7,578	8,013	7,923	187	169.8	156.6	156.5
양천구	2,187	2,082	2,752	5,114	5,563	6,424	133.8	167.1	133.4	168.7
강서구	2,098	2,393	2,712	5,625	5,858	6,588	168.1	144.7	142.9	158.3
구로구	1,467	1,964	2,311	6,145	5,413	6,702	319	175.5	190.0	170.5
금천구	1,568	1,714	1,716	4,469	5,109	5,462	185.1	198.1	218.2	125.6
영등포구	1,944	2,160	2,438	6,254	8,354	8,136	221.7	286.8	233.7	172.5
동작구	2,133	2,357	2,592	6,070	5,900	6,819	184.6	150.3	163.0	155.6
관악구	2,396	2,362	2,453	5,243	5,241	5,588	118.8	121.9	127.8	130.1
서초구	4,220	4,069	4,350	9,983	11,627	13,069	136.6	185.7	200.4	204.1
강남구	4,207	4,181	4,503	11,896	10,146	12,735	182.8	142.7	182.8	219.3
송파구	2,531	2,814	3,016	7,775	9,012	9,677	207.2	220.2	220.9	208.5
강동구	1,881	2,200	2,473	5,753	5,833	7,301	205.9	165.1	195.2	141.6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표 8> 서울 1인 청년가구와 전체 가구의 m² 전세 가격 변화(2000~2010년)
(단위: 만원, %, %p)

구분	m ² 당 전세가					m ² 당 전세가 상승률		
	2000년		2010년					
	1인 청년	전체	1인 청년	전체	차이	1인 청년	전체	차이
종로구	103.7	91.8	252.7	196.5	56.2	143.8	113.9	29.9
중구	106.1	98.5	232.3	190.6	41.7	118.9	93.5	25.4
용산구	110.7	97.2	273.5	207.7	65.8	147.2	113.7	33.5
성동구	80.1	92.2	245.3	195.3	50	206.3	111.9	94.4
광진구	92.8	91.2	271.9	220.4	51.5	193.1	141.6	51.5
동대문구	96.5	86.4	226.4	170.1	56.3	134.6	96.8	37.8
중랑구	77.2	75.4	166.7	151.5	15.2	115.8	100.9	14.9
성북구	90.6	80.9	192.0	159.4	32.6	111.9	96.9	15.0
강북구	74.6	75.6	112.8	131.1	-18.3	51.2	73.4	-22.2
도봉구	83.2	80.2	161.2	146.6	14.6	93.8	82.7	11.1
노원구	92.8	88.9	191.7	172.3	19.4	106.5	93.7	12.8
은평구	81.4	74.0	161.6	147.5	14.1	98.6	99.3	-0.7
서대문구	108.9	89.1	254.4	171.5	82.9	133.6	92.5	41.1
마포구	116.1	99.6	261.4	207.3	54.1	125.2	108.1	17.1
양천구	87.7	89.2	171.0	196.1	-25.1	94.9	119.9	-25.0
강서구	81.6	83.2	186.6	167.3	19.3	128.6	101.2	27.4
구로구	83.7	76.5	124.3	163.1	-38.8	48.5	113.2	-64.7
금천구	74.7	74.7	134.2	143.0	-8.8	79.6	91.4	-11.8
영등포구	93.7	89.2	256.8	195.3	61.5	174.1	118.9	55.2
동작구	94.6	88.5	258.0	201.4	56.6	172.8	127.6	45.2
관악구	103.8	90.1	259.2	195.1	64.1	149.7	116.5	33.2
서초구	126.9	120.5	296.4	292.2	4.2	133.5	142.4	-8.9
강남구	144.7	128.8	350.1	314.4	35.7	142	144.1	-2.1
송파구	105.9	99.8	264.4	240.9	23.5	149.6	141.4	8.2
강동구	86.0	91.7	202.8	182.4	20.4	135.9	99	36.9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다음으로 m²당 전세가격의 변화율을 보면(표 8), 25개 구 중에서 7개(강북구, 은평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서초구, 강남구)를 제외한 18개 구에서 전체 인구의 전세가에 비해 1인 청년의 평당 전세가 상승률이 높았다. 1인청년의 평당 전세가 상승률이 높은 구는 성동구(206%), 광진구(193%), 영등포구(174%), 동작구(172%) 등으로 주거빈곤율이 높은 지역에서 평당 전세가 상승률도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대졸 신입사원의 초봉이 91%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하면,⁵⁾ 3개 구(강북구, 구로구, 금천구)를 제외한 22개 구가 이보다 더 높은

전세가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2000년대의 청년보다, 현재의 청년이 주거안정이 더 어려워졌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다.

2010년 평당 전세가의 경우 25개 구 중 4개구(강북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를 제외한 21개 구에서 1인 청년이 전체인구 보다 작게는 m²당 4만원(서초구)에서 많게는 82만원(서대문구) 높은 전세가를 지불하고 있다. 그중 10개구(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서대문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의 경우, m²당 50만원 이상의 비용을 1인 청년이 더 많이 내고 있다. 이는 자산과 소득 약자로서 매매시장이나 부담 가능한 주택 선택에 제약을 받는 청년을 시장에서 배제시켜 결국 사회적 약자가 더 많은 주거비를 부담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세 가격 변화율은 청년층이 전반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청년의 전세 가격 상승률이 서울시 전세 상승률, 같은 기간의 소득 증가율 보다 높음에 따라 청년의 주거부담은 더 증가했고, 다른 연령대가 가지는 주거 부담과의 차이도 더욱 커졌음을 확인하게 된다.

3) 서울의 대학가 주거비용 현황

앞서 서울 청년의 주거빈곤과 대학가의 상관관계를 통해 대학가 인근 청년의 주거빈곤율이 높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서울 1인 청년의 36%가 주거빈곤 상태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대학가의 청년들은 최저 32만원(노원구 공릉동)에서 최고 54만원(중구 장충동)을 주거비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총 18권역의 저가 원룸의 평균 월세는 41만원에 이르는데, 여기에 평균 주거유지비인 8만2천원을 더하면 약 50만원에 이른다. 이 금액은 대학생 월 평균 소득인 79만 7천원(서울연구원, 서울시 거주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능력 분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는 현재 대학가 청년들 대부분이 주거빈곤 상황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득만으로는 부담하기 어려운 주거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5) ‘페이오픈’에 의하면 42만 5천개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2000년 대졸 신입 평균 초봉은 1739만원이라 발표하였으며, 같은 조사기관은 2010년 대졸 신입 평균 초봉을 3,352만원으로 발표

<표 9> 서울소재 40개 대학가 저가 원룸 시세

(단위: 만원)

구	해당 동	포함대학	권역별 저가원룸 평균
중구	묵정동, 장충동, 장충동2가, 장충동3가	동국대	54
용산구	갈월동, 청파동2가, 청파동3가, 효창동	숙명여대	53
서초구	서초동	서울교대	51
마포구	동교동, 상수동, 서교동, 합정동	홍익대	47
종로구	삼선동, 명륜동, 혜화동	성균관대, 한성대	45
서대문구	연희동, 창천동	연세대, 이대, 경기대, 추계예대	45
성북구	하월곡동, 상월곡동	동덕여대	41
광진구	자양동	건국대, 세종대, 한양대	40
마포구	대흥동, 아현동, 염리동	서강대	39
성북구	길음동, 정릉동	국민대, 서경대, 상명대	38
서대문구	남가좌, 북가좌	명지대학교	38
성북구	안암동, 종암동	고려대, 성신대	36
성북구, 노원구	장위동, 월계동	광운대, 외대, 경희	36
도봉구, 강북구	번동, 수유동, 쌍문동, 우이동	덕성여대	36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35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 숭실대	35
구로구	궁동, 오류동, 은수동	성공회대	35
노원구	공릉동	서울여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삼육대	32
서울 주요 대학가 저가 원룸 평균			41

자료: 민달팽이 유니온 2013년도 180개 표본

서울에서 자취하는 청년이 한 달에 주거비로 지출하는 임대료 외 관리비,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의 평균 비용은 8만 2천원으로 집계되었다. 개별 평균을 살펴 보면 관리비 4만5천 4백원, 전기세 1만9천원, 수도세 1만2천원, 가스비 2만6천원, 인터넷 2만1천백원을 지출하고 있다. 물론 냉난방 사용이 달라지는 계절에 따라 지출비용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8만원 이상의 주거유지비를 지출하게 되는 것이다.

<표 10> 주거유지비 평균

(단위: 원)

개별	평균 요금		평균 요금
관리비	45,400	총 유틸리티	82,000
전기	19,000		
수도	12,000		
가스	26,000		
인터넷	21,100		

자료: 민달팽이 유니온. 2013년. 43개 표본

4) 서울의 기숙사 수용률 현황

서울 소재 주요 43개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 평균은 9.6%에 머문다. 이 중 기숙사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학교도 4곳이나 존재하며 절반 이상의 학교가 10%에도 못미치는 수용률을 보이고 있다. 실제 수용률이 15% 이상인 학교는 4곳밖에 되지 않는다. 기숙사는 민간 임대 시장보다 저렴한 가격과 최저주거기준이 보장되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지만 재학생의 35~40%가 통학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온다는 것을 고려하면, 학생들의 주거권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이 자료에는 외국인만 수용하는 외국인 전용 기숙사, 의과대학 학생만 거주할 수 있는 의과대학 기숙사 등 특수 기숙사가 포함되어 있어 일반 대학생이 입주할 수 있는 기숙사의 수용률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최근에는 외부 투자로 지어진 민자기숙사의 비용은 1인실 62만원(연세대), 2인실 39만원(고려대)이고 이는 직영 기숙사(11만원~18만원)에 비해 2~4배 이상 비싸다. 학생들의 주거권 보장이 아닌 이익수단의 목적으로 사용된 기숙사는 대학이 주거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을 보여준다.

<표 11> 서울 소재 주요 33개 대학 기숙사 수용률(대학원생 포함) 및 기숙사비
(단위: 명, %)

학교명	재학생	기숙사 수용인원	기숙사 수용률
서울교육대학교	1,931	671	34.7
서울대학교	27,859	5,762	20.7
건국대학교	18,927	3,595	19.0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0,530	1,658	15.7
연세대학교	25,493	3,303	13.0
서강대학교	10,321	1,222	11.8
삼육대학교	5,825	655	11.2
명지대학교	7,696	856	11.1
경희대학교	15,028	1,587	10.6
서울여자대학교	8,526	858	10.1
국민대학교	16,519	1,640	9.9
숭실대학교	15,893	1,542	9.7
숙명여자대학교	12,121	1,150	9.5
중앙대학교	17,453	1,643	9.4
동국대학교	15,824	1,483	9.4
성균관대학교	13,514	1,243	9.2
고려대학교	25,292	2,325	9.2
덕성여자대학교	6,412	560	8.7
이화여자대학교	19,932	1,643	8.2
한국외국어대학교	10,581	852	8.1
서울시립대학교	10,352	788	7.6
성공회대학교	2,525	164	6.5
한양대학교	20,050	1,273	6.3
홍익대학교	13,691	571	4.2
성신여자대학교	8,632	305	3.5
한성대학교	7,697	243	3.2
상명대학교	7,033	217	3.1
광운대학교	9,612	162	1.7
세종대학교	12,326	176	1.4
서경대학교	6,863	0	0.0
동덕여자대학교	7,790	0	0.0
경기대학교	3,500	0	0.0
추계예술대학교	1,311	0	0.0
총합	397,059	38,147	9.6

자료: 민달팽이 유니온. 정진후 의원실. 2012.

4. 청년 주거빈곤 종식을 위한 정책 제안

1) 재산권과 주거권이 충돌하면 주거권이 우선하는 ‘필요기반 정의’가 필요하다.

최근 서대문구에서 저소득층 대학생 기숙사 건립을 위해 개최한 주민공청회에서 지역 주민이라고 밝힌 한 중년의 남성은 ‘대학생 술 문화로 인한 소음’, ‘연애지향적인 성향으로 기숙사 모텔화’, ‘우범지역화’ 등을 PT로 발제했고, 다른 한 주민은 “내 집이 6억인데, 10억에 사줄 것이 아니면 나는 절대 반대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두 명의 여성이 뒤에서 박수를 쳤고, 결국 공청회는 파행되었다.

자산 가치 증식을 위한 주택소유자들의 무모한 질주는 집이 없는 45%의 국민들의 주거권을 철저히 외면해왔다. 무리하게 빚을 얻어 집을 소유한 10%의 하우스푸어에게도 주거권은 은행에 빼앗길 처지에 놓여져 있다. 지금이라도 이들에게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 가격이 소득이 감당할 수 있도록 내려와야 하지만, 주택소유자들의 주택 상승 요구는 여전하다.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부동산 경기부양 이전에 공공임대주택 등의 정책에 집중해야 하지만, 아직 5%에 그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속도는 느리기만 하다. 이처럼 무제한으로 풀린 재산권은 주거권을 시민에게서 빼앗아 간 것이다.

노동, 건강, 교육, 주거 등은 모두 국민의 삶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다. 우리 헌법은 이를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권으로, 헌법상의 권리로 명문화해놓고 있다. 재산권 마저도 헌법에서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재산권의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 더 이상 반지하 방에서 웅크리고 있는 삶과 7~8년째 아무도 살지 않는 미분양 주택이 공존하는 모순의 시대는 끝내야 한다. 앞으로의 시대는 국민들의 사회적 필요에 기반하여 ‘사회적 필요를 사회적 권리로’ 실현시켜야 하는 그런 시대다.

이제는 재산권이 아닌 사회권으로 해석되는 주거권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 집은 소유의 대상이 하는 거주하는 곳이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재산권을 보장해주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게 해주지만, 공공의 이익과 충돌하면 사적 재산권보다 공공의 기본권을 우선해야 한다. 주택 재산을 늘릴 자유가 존재하지만 주거권과 충돌하면 적절히 양보할 수 있는 사회, 모두의 주거권을 위해 신뢰와 공존이 존재하는 사회, 이것이 ‘사회적 필요를 사회적 권리로’ 만들어 주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사회이다.

2) 제도개선

(1) 청년 주거빈곤 개선을 위해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먼저 청년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대학생보금자리주택」과 「대학생전세임대주택」이, 서울시 차원에서는 「희망하우징(구 유스하우징)」등이 시행되었다. 임대료는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책정과 동일하여 저렴하나, 누적된 수혜자가 대학생보금자리주택 548명, 대학생전세임대주택 1만4천명, 희망하우징 816명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학생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

또한 청년으로 자립하여 이제 막 가정을 꾸리는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으로는 「신혼부부 주택특별 분양지원」,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마련 대출」등의 정책이 존재하고, 기존 공공주택(공공분양, 보금자리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주택 등)의 경우 신혼부부의 특별 신청자격을 명시하여 지원하고 있다. 청년·대학생에 비해 양적으로는 많지만, 저소득층에 국한되어 지원되고 있다.

『주택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대한 법률』에서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은 주거약자로 규정되어 주거지원을 받고 있지만 현재 청년의 주거빈곤에 대한 고려는 없다. 최근에 일부 대학생, 신혼부부 등이 포함되었으나 법 체계 내의 대상이라기보다는 한시적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임대 계약에 있어 필요한 정보에 대한 교육, 홍보가 미비한 상황이다. LH 「전월세지원센터」,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한국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서민들의 활용정도가 미약한 상황이다. 이처럼 양적으로 부족함을 보이는 대학생 주거지원 정책, 일부 저소득층 청년에게만 제공되는 지원 사업으로는 청년 주거빈곤 문제 해결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2) 법률과 정책 제안의 배경

임대수요의 증가와 임대료 상승에 따라 청년층의 주거부담은 점점 상승해왔다. 부모세대의 자산이전을 통해 이제까지는 문제를 봉합하여 왔으나, 신자유주의 흐름에 의해 진행된 자산·소득의 양극화는 중산층을 약화시켰다. 동시에 청년의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은 계속 높아지면서 청년들의 주거자립을 더욱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부모의 자산 사다리를 얻지 못한 다수의 청년들은 주거빈곤 상태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헌법 35조 3항에서는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사회권으로서의 주거권을 국가의 역할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주거복지와 관련된 내용은 『주택법』에 일부 편입되어 있을 뿐 주거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규정하는 법안은 현재 부재하다.

또한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존재하지만 임대차 계약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을 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독일, 프랑스 등의 임차인보호법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행정적, 형사적 처벌 조치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그 조약 내용도 구체적이다. 주거와 마찬가지로 사회권로서의 의미를 지닌 노동에 대해서 명시하는 『근로기준법』의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며, 근로계약에 대한 기준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계약의 기준이라기보다는 계약방안에 대한 포괄적 방향을 언급해 주는 것에 머무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포함되지 않은 많은 부분에 있어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는 거의 부재한 상황이다.

(3) 법률과 정책 제안의 내용

1. 주거권을 사회권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명시해야 한다.

현 『주택법』에 포함된 정부의 주거복지역할을 넘어 사회권으로서의 주거권 확립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규정할 수 있는 주거복지에 대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현 19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주거복지기본법(안)』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

『주택법』, 『주거복지기본법(안)』의 보호대상에 ‘청년’, ‘대학생’을 포함하여 명시하고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수혜대상이 되기 어려웠던 청년 또한 임대주택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지원 기준현실화, 1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 기숙사 의무 수용률 등을 시행하고, 대학 기숙사 설립을 유도하여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계류 중인 『주거복지기본법(안)』에 명시된 주거복지심의위원회 중 1/3 이상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대변할 수 있도록 당사자(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청년 등) 대표가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더불어 현 『주택법』의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법률을 『주거복지기본법(안)』으로 이동하여 주거복지개선 차원에서 최저주거기준을 다루어야 한다. 현재 최저주거기준은 주택에 대한 기준 밖에 없으므로 「준주택의 최저주거기준」 신설, 「지하·옥탑의 최저주거기준」강화를 통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최저주거기준 미달에 대한 정책시행, 평가 등의 적극적 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2. 임대계약에 있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제도가 절실하다.

현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의 『임대계약기준법』이 필요하다. 국민 누구나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관리가 있는 것처럼, 집을 소유하지 못한 임차인도 주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전면 개정한 『주택임대계약기준법』이 필요하다.

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송, 집행개시 과정에 적지 않은 시일이 걸려 주거지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임대계약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울 수 있는 상시적 인력으로 ‘주거감독관’ 도입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

제1장 총칙 : 임대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임차인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임대계약 :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임대계약), 16조(계약기간), 17조(임대조건의 명시), 18조(단기간임차인의 임대조건), 19조(임대조건의 위반), 23조(계약 파기 등의 제한), 24조(임대주택 운영상 이유에 의한 계약파기의 제한), 26조(계약 파기의 예고), 27조(계약파기 등의 서면통지), 28조(부당파기등의 구제신청), 29조(조사 등), 30조(구제명령 등), 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33조(이행강제금), 34조(예고파기의 적용 예외), 35조(보증채권의 우선변제) 등

제3장 임대료/보증금 : 제43조(보증금의 반환), 43조 2(보증금 미반환 임대주 명단 공개), 공정임대료 제도 조항 등

제4장 주거환경 : 제50조(주거환경), 51조(최저주거기준 부분 미달 주거환경),

제5장 최저하 주택 : 제64조(최저하 주택과 임대인허증), 65조(사용금지)

제11장 주거감독관 등 : 제101조(감독기관), 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103조(근로감독관의 의무), 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106조(권한의 위임)

제12장 벌칙 : 조항 위반, 근로감독관 의무 위반, 주거복지위원회의 고발, 과태료 등

※ 별첨 2 : 대학 등록금 문제의 현황과 해결 방안

1. 언제까지 우리는 이러한 뉴스를 부러워하기만 할 것인가.

[`한겨레신문 2003.12.2일 세상 읽기 기사] 대학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주는 나라

‘반값 등록금’ 얘기가 쑥 들어갔다. 복지 공약들이 하나둘 ‘빈 약속’으로 드러나는 가운데, 등록금 공약은 흰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대학생들 둔 집집마다 한숨 소리가 그칠 새가 없다.

‘등록금 1000만원 시대’라 하지만 여기에 주거비·식비·교통비·책값·용돈 등 최소한의 생활비만 합쳐도, 대학생 하나가 1년에 감당해야 할 부담이 2000만원은 족히 넘는다. ‘대학생 2000만원’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알다시피, 독일엔 대학 등록금이 없다. 1946년 당시 22살이던 프랑크푸르트 대학생 카를하인츠 코흐가 수업료는 위법이라고 소송을 제기해 승소함에 따라 헤센 주에서 최초로 수업료가 폐지되었다. 그 후 1970년까지 수업료는 독일 전역에서 차례로 사라졌다. 오늘날 학생이 대학에 내는 돈은 한 푼도 없다. 물론 2000년대 중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바람 속에 몇몇 주에서 소정(1년에 약 75만원)의 등록금을 받은 적이 있지만, 지금은 이마저 모두 폐지되었다.

독일에선 등록금만 없는 것이 아니다. 대학생의 생활비는 국가에서 대준다. 이를 ‘바뉘크’라 한다. ‘모두를 위한 교육’을 공약으로 내건 사민당 빌리 브란트 총리가 1971년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바뉘크 덕분에 오늘날 독일 대학생들은 생활비 걱정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다.

이런 제도는 ‘똑똑한 학생’과 ‘비전을 가진 정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학생들은 1960년대 초 대학 개혁안을 스스로 만들고, ‘학생의 경제적 해방’을 대학 개혁의 3대 목표 중 하나로 삼았다. 생활형편과 학업능력에 따라 장학금을 주는 전통적인 방식은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학생들은 비판했다. 그들이 제시한 대안은 ‘연구보수’였다. 대학생의 본분은 ‘연구’에 있고, 연구는 ‘사회적 노동’이므로, 대학생의 연구 활동에 대한 보수를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다.

한편 브란트 정부는 ‘교양사회’라는 비전 아래 돈이 없어 대학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천명했다. 학생들의 ‘연구보수’ 구상과 브란트의 ‘교양사회’ 비전의 합작품이 바로 ‘바뉘크’다.

우리엔겐 모두 꿈같은 얘기다. 대학 등록금은 -소득 대비- 세계 최고이고, 대학생의 생활비는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다. 부자 부모를 둔 소수를 제외하면, 대

다수의 학생들이 치솟는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에 정상적인 대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밤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수업을 듣는 현성이, 목돈을 벌겠다고 며칠씩 병원 임상실험 침대에 누웠다 뺨한 얼굴로 나타난 용민이, 동생이 대학에 입학해 휴학할 수밖에 없다며 고개를 떨구던 희정이. 이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이 모든 책임은 일차적으로 국가에 있다. 한국은 대학교육에 관한 한 세계에서 가장 무책임한 나라이다. 세계 어디에도 이 나라처럼 대학생 교육비를 거의 전적으로 가정에 전가하는 나라는 없다. 세계 어디에도 대학교육의 80% 이상을 비싼 사립대학에 떠맡기는 나라도 없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떠맡아야 할 대학 교육비를 우리 부모들이 대신 짊어져왔다. 이젠 국가가 국민에게 진 빚을 탕감할 때가 되었다. '대학 등록금'이란 말은,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처럼, 이제 사전에서 사라져야 할 때가 되었다. 대학생 생활비에 대한 지원 또한 소수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이라는 '시혜'가 아니라, 연구라는 '사회적 노동'에 대해 모두에게 지급되는 정당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필자 : 김누리 중앙대 독문과 교수)

※ 기사 참조 :

'C학점' 소득 1분위 대학생도 국가장학금 지원

아시아경제 | 이윤재 | 입력 2014.01.09 15:02

국가장학금의 규모와 대상이 확대된다. 소득이 낮은 가정의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작년보다 커졌다. 셋째아이에 대한 장학금이 새로 생겼고, 지방인재장학금도 신설됐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가장학금에 투입되는 예산은 지난해 2조7750억원에서 3조4575억원으로 확대된다.

구분	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2013년	450	450	270	180	135	112.5	90	67.5	67.5
2014년	450	450	450	337.5	247.5	157.5	112.5	67.5	67.5
증액	-	-	180	157.5	112.5	45	22.5	-	-

소득연계 장학금(I 유형)은 소득 최하위계층을 집중지원하고, 6분위까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 규모를 늘렸다. 소득분위별로 기초 생활 수급대상자부터 2분위까지 450만원을 지원한다. 2분위 대상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지난해 270만원에서 180만원이 늘었다. 특히 이 가운데 기초수급대상자와 1분위에 대해서는 올 2학기부터 C학점(100점 만점에 70점)을 취득해도 한 번에 한해 장학금을 지원키로 했다. 기존 장학금 지원 기준은 80점 이상이다.

3분위는 337만5000원으로 157만5000원이 늘었고, 4분위와 5분위는 각각 247만5000원(전년 대비 112만5000원 증가), 157만5000원(45만원 증가)으로 지난해 보다 지원 규모가 늘었다. 6분위에 지원되는 금액은 112만5000원으로 지난해 보다 22만5000원 늘었고, 7분위와 8분위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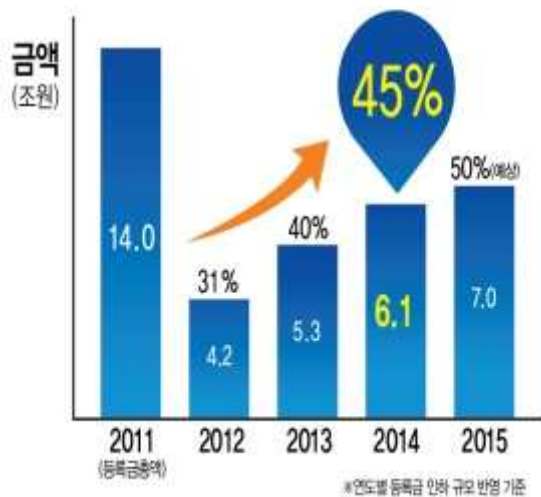
대학자체노력 연계 장학금(II 유형)은 5000억원으로 지난해 7000억원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다만 지방인재장학금은 1000억원이 신설됐다. 신입생 우수 인재 유치, 지방대 육성 등을 위한 방안이다.

셋째 아이 이상의 다자녀 국가장학금도 신설돼 총 1225억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올 3월1일 기준 만 20세 이하(1993년3월1일 이후 출생자)로 소득 8분위 이하 신입생이다. 성적기준은 I 유형과 같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으로,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450만원이 지원된다.

국가장학금은 14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정부는 국가장학금 제도 개편을 통해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2011년 대비 45%까지 줄어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등록금 부담 경감 효과

'14년 정부지원장학금 및 대학자체노력 등으로 45% 경감 추진



2. 현 상황과 문제의식

1) 최근 교육부가 국가장학금 2014년 1학기 운용계획을 밝혔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이대로 1학기에 국가장학금 제도를 적용하게 되면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많은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제도에서 배제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대학생, 학부모, 시민사회 단체들이 국가장학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됐습니다. 지금의 박근혜 정부의 정책으로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가 없거나, 아주 오랜 세월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2유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반값등록금을 구현하든, 등록금액 상한제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서 조기에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든, 반드시 실질적인 의미의 반값등록금을 구현해내야 할 것입니다.

2) 등록금과 관련된 몇 가지 소식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18일 한국장학재단 국정감사를 맞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직접 운용하는 학자금 대출은 연 77만명, 2조

5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김 의원은 대학생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천만원의 빚을 지는 것도 모자라 대출누적액이 점점 고액화 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금액은 2009년 4조4382억원에서 2012년 5조4672억원으로 3년 만에 1조원 이상 증가했다. 매년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들의 '대출 누적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2000만원 이상 빌린 고액 대출자는 7만4438명으로 2009년 3만8315명에 비해 두 배 정도 늘어났다. 5000만원 이상 초고액의 경우도 2009년 119명에서 2010년 413명, 2011년 891명, 2012년 1411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대학생 신용유의자 역시 눈에 띄게 증가했다. 대학생 신용유의자는 2007년 3785명에서 2013년 4만1047명으로 약 11배 급증했다. 김 의원은 "학자금 대출의 고액화 추세가 뚜렷하다"며 "특히 늘어나는 대학생 신용유의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2013년 10월 18일 뉴시스 기사 중)

- **대학생 절반, 학자금 대출로 1학기 등록금 마련.** 대학생들의 새 학기 등록 기간이 다가온 가운데, 등록 예정인 대학생의 절반 이상은 대출로 등록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대표 이정근)은 대학생 471명을 대상으로 '2014년도 1학기 등록 계획'을 조사한 결과, 82.2%가 새 학기 등록을 할 예정이었으며, 이 중 65.1%가 '학자금 대출을 받을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21일 밝혔다. 학자금 대출을 계획 중인 대학생 대부분은 '정부 대출(96.4%)'을 고려하고 있었다. 또 대학생 10명 중 7명(70.1%)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횟수는 평균 4회였으며, 절반 이상인 57.3%는 '지금까지 대출을 받은 학기가 받지 않은 학기보다 더 많다'고 답했다. 이들이 받은 학자금 대출 총액은 평균 1270만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300~600만원 미만(20.9%)', '300만원 미만(13.6%)', '1200~1500만원 미만(12.7%)', '600~900만원 미만(11.8%)', '900~1200만원 미만(11.8%)' 등의 순이었다. 한편 대학생 10명 중 9명(90.4%)은 학비 마련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평소 소비활동을 줄인 것으로 집계됐다.(헤럴드경제 2014. 1.21 기사 중)

- **"새학기 등록금 책정 일방적" 대학생들 반발. 연세대·한국외대·동국대 제도 허점 이용 '등심위 파행' 내달 '서울지역 교육대책위' 구성, 학생들 연대 움직임**

신학기를 맞아 대학마다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올해도 이어지면서 대학과 갈등을 빚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 측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2일 연세대 학생 50여명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측이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 위원들을 무시한 채 등록금 책정안을 통보했다"며 "학생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

되도록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학교 측 위원과 학생 위원이 동수로 구성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다섯 차례 진행된 이 대학 등심위에는 각 처장 등 교직원 위원 5명, 총학생회장 등 학생 위원 5명, 외부 전문가(회계사) 1명이 참석했다.

학생들이 문제 삼는 부분은 외부 전문가의 의결권이다. 학교 측에 의해 선임된 만큼 사실상 6(학교) 대 5(학생) 구도로 등심위가 운영돼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등록금 심의 배제된 외대 학생들 "우리 권리는 죽었다" 22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 본관에서 열린 '외대 학생의 권리' 장례식에서 학생들이 꽃을 놓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 측이 학생 비상대책위원장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등록금심의위원회 참가 자격을 인정하지 않자 학생의 권리가 죽었다며 '장례식 시위'를 벌였다.

|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고려대는 학칙에 '등심위 참여 전문가 1인을 총장이 추천한다'고 규정돼 있어 학생들이 추천한 전문가의 등심위 참여나 총장이 추천한 전문가 의결권 배제를 요구했지만 학교 측이 수용하지 않았다.

한국외국어대는 지난해 11월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되면서 학생회장이 공석이 되자 학교 측은 대표성 문제를 제기하며 학생들이 추천한 위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학생들은 "학생들의 권리가 죽었다"며 이날 대학 본관 앞에서 장례식 퍼포먼스를 보였다. 이화여대는 대학과 학생 간의 갈등으로 학생들이 등심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설령 등심위가 진행되더라도 학교 측이 등록금 인상 근거가 되는 회계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동국대 총학생회는 "등심위가 열리기 전 회계자료를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재작년 자료만 공개했다"며 "학생들에게 아무런 정보도 공개하지 않은 채 2% 인상안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대 움직임도 일고 있다. 이화여대 성희연 총학생회장(23)은 "다음달 초 '서울지역 교육대책위'를 구성해 활동할 예정"이라며 "많은 학생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등심위를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의 개정도 추진된다.

연세대학교 이한솔 총학생회장(24)은 "학생 위원과 학교 측 위원의 동수 구성을 법에 명시해야 등록금 문제 해결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2010년 개정된 고등교육법은 등심위를 교직원, 학생, 외부 전문가 등으로 반드시 구성해야 하며, 학생 위원은 3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심위는 총장에게 등록금 책정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총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경향신문 1.23일 기사)

3. 최근 등록금 문제와 관련된 주요 요구안

1)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관련 공약 및 2013년 초 국정과제발표의 내용대로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에서 성적기준을 반드시 완해야 합니다. 소득 1분위 이하 학생에게만 8학기 중에 단 1회만 c학점 기준으로 예외를 두는 것은 너무나도 미흡한 조치입니다. 엄격한 상대평가제가 실시되는 전국의 학과 최근 대학들이 상대평가제에서 b학점 미만 비율을 25%에서 30%로 상향 강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더 많은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지급에서(현행은 평점 b이상만 자격이 됨) 원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반값등록금과 국가장학금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2) 그 미흡한 조치, 그것마저도 작년 말 국회에 제출한 교과부 계획대로 소득 2분위가 아니라 1분위로 줄어들었고, 또 이왕 진행하기로 한 조치를 올해 1학기부터 해야 함에도, 2학기부터 실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또 교과부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재정지원제한대학이나 경영부실대학의 학생들에게는 국가장학금을 부분적으로, 또는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교육부가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재정지원제한 대학이나 경영부실 대학을 선정하고는, 그 대학의 학생들에게는 국가장학금이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매우 반교육적인 조치라 할 것입니다. 즉시, 재정지원제한 대학이나 경영부실 대학과 관련된 학생들에 대한 불이익조치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대학원생들에게는 국가장학금은 물론이고, 든든학자금(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조차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최소한 대학원생들도 든든학자금은 이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나중에 이자까지 복리로 해서 갚는 것인데, 아예 이용을 못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학원생들 중에도 가난한 학생이 많고, 든든학자금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매우 많습니다.

4) 박근혜 대통령 공약대로 2014년 4조원의 예산 배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중반기 민생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반값등록금 예산을 더욱 늘려 2학기에는 더 많은 대학생-학부모들이 국가장학금 지원을 더 받게 해야 합니다.. 지금도 소득 2분위까지만 450만원이고 다른 소득분위는 반값등록금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450만원 기준도 2008년 1학기부터 지금까지 단 한푼도 오르지 않아 실상은 장학금이 깎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5) 정부와 국회는 국가장학금을 넘어 반값등록금의 제도적 실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야

합니다.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을 구현하기 위한 등록금액상한제를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최소한 국가장학금 유형 2를 이용해서 매년 등록금액 인하를 약속받고, 그를 통해 중기적으로 반값등록금을 구현하는 방안이라도 강구되어야 하고, 이 방안들과 관련된 법률들을 현재 국회에 여러 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즉, 일반 예산으로 매년 유동적인 국가장학금 제도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6)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현재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과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와 같은 정책을 각각의 지방정부가 모두 실시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또 전형료, 입학금 등 근거가 부족하고 턱없이 과도한 비용 등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고등교육제도와 각 대학 운영과 관련해서(특히 개방형 이사제, 등록금심의위 및 대학평의원회 강화 등)도 추가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것입니다. 대학의 공공성·투명성·민주성은 더욱 더 제고되어야 합니다.

4. 1월 23일 서울지역교육대책위, 서울지역 대학 총학생회장단의 공동 기자회견 자료를 통해본 대학생들의 현 시점에서의 요구

등록금고지서에 대학등록금 20%인하 표기하라!

민주적 등심위 정부가 보장하라! 서울지역 대학생 교육대책위(준) 기자회견

1) 정부가 약속했던 것처럼 대학차원의 등록금부담 3조 마련! 등록금 20% 인하하라!

박근혜대통령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2014년까지 반값등록금을 실질적으로 완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전체 대학재정이 14조인 것을 감안하였을 때 등록금으로 7조를 부담하고 정부가 4조, 대학이 3조를 부담하여 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2014년 등록금에 지원하는 재정을 3.5조원 확보하여 이전에 약속했던 재정보다 후퇴시켰으며 대학들 역시 등록금완화를 위한 재정마련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대학에서 3조를 부담시키게하겠다는 것은 이전에 발표했던 감사원의 자료에서 근거한 것입니다. 감사원은 2011년 11월, 35개 주요 대학들이 예산을 '뺑튀기'해서 등록금을 매년 평균 12.7% 부풀려 받았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대학교육연구소도 관련하여 20개 사립대학들이 지출은 부풀리고 등록금 외 수입은 줄이는 방식으로 예산을 짜서 2011년 등록금 총액의 20%에 이르는 차익을 남겼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즉 대학들이 매해 예산만 합

리적으로 짜도 등록금의 13~20%를 인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따라 전체 대학대학재정에서 대학이 3조를 부담하는 것은 대학들이 현재 등록금에서 20%를 인하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2년 대학들은 등록금을 4.3% 인하하였고 2013년엔 0.46% 정도 인하하는데 그쳤습니다. 오히려 대학들은 매년 적립금을 남겨 현재 누적적립금이 11조를 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서울지역 대학들은 2014년 등록금 인상 및 동결을 얘기하고 있으며 등록금을 인하한다하더라도 소폭인하에 그칠 것입니다.

대학생 신용불량자는 6년만에 11배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대학생들의 현실은 어려워지고만 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님께서 약속하셨던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이 지금 당장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서울지역 대학생교육대책위(준)은 박근혜대통령께서 약속했던 것처럼 대학차원의 등록금 부담 3조를 마련하여 대학등록금을 20%인하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생색내기식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아닌, 제대로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라!

2013년 7월,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사립대학들은 예·결산을 할 때 반드시 학생이 30% 이상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뿐 아니라 의결도 거쳐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 연세대 학생들이 낸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등록금인상근거가 되는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한다’는 대법원의 승소판결에 따라 대학본부는 자료일체를 학생들에게 제공해야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학생 30%를 참여시킨다고 해도 교직원, 동문 등의 인원구성에 의해 학생위원 수가 턱없이 작기 때문에 학생위원 모두가 등록금 예산의결을 반대하더라도 등심위에서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또한, 국공립대학은 물론 사립대학의 재정정보는 정보공개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판결과는 무관하게 학교본부는 ‘관련 자료가 없다,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핑계로 학생위원들이 제대로 예결산을 분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동국대의 경우, 학부2, 대학원2, 교직원4, 전문가1로 등심위가 구성되고 등록금책정을 위한 2014년예산안, 2013년 가결산안을 학교에 요청하였지만 학교본부는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고 열람만 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사진촬영도 금지하여 학생들이 자료를 필기해 등심위에 참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화여대의 경우에도, 학교6,학부5,대학원1, 외부감사1로 등심위원이 구성되어 학생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회의구조에 학생들은 등심위 회의에 들어가는 것을 불참선언하였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회의는 진행 중입니다.

여전히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생색내기식으로 운영될 뿐, ‘등심위 권한을 확대해 사립대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고,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법적 취지는 무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학본부와 정부가 책임을 다할 것을 대학생들이 함께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문]

등록금고지서에 대학등록금 20%인하 포기하라!

민주적 등심위 정부가 보장하라!

대학생 신용불량자수가 6년만에 11배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한다. 여전히 등록금은 우리 대학생들의 최대관심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각 대학에서 열리고 있는 등록금심의 위원회를 많은 대학생들이 주목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정부가 4조, 대학에서 3조를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2014년 실질적 반값등록금을 실시하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대학차원에서 3조를 부담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현재의 등록금에서 대학등록금을 20%까지 인하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는 매년 대학들이 예산을 ‘뺑튀기’해서 등록금을 12.7%~20%까지 부풀려 받았다는 감사원과 대학교육연구소에서 발표했던 자료들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2014년 대학 등록금이 책정되는 과정에서 학생등심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는 등록금 0.25% 소폭 인하하였고 연세대는 동결로 확정지어버렸다. 올해도 대학생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약속했던 2014년 실질적 반값등록금이 물 건너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근혜 정부는 대학부담 3조라고 공약에 명시해놓는 것을 넘어, 각 대학들에서 3조를 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등록금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대학생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등록금으로 고통 받는 대학생들의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미 국가장학금만으로 고액등록금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정부는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등록금 문제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등록금이 책정되는 과정에서 여전히 등록금심의

위원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학생 30%를 참여시킨다고 해도 교직원, 동문 등의 인원구성에 의해 학생위원 수는 턱없이 작기 때문에 학생들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화여대의 경우에도 등심위 구성자체가 학생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될 수 없어 학생위원들이 모두 등심위 회의에 불참했지만 대학본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등심위를 학생위원을 배제시킨 채 진행하고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산안을 심사·의결하여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생위원들은 제대로 된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대학에서 예산안을 등심위를 종결하기 바로 직전 회의에서야 꺼내놓았고, 동국대의 경우 학교본부는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고 열람만 하게해 학생들이 자료를 필기해 등심위에 참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여전히 대학본부의 뺑뚱기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한 형식적 기구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키를 잡아줘야한다.

이에, 서울지역대학생교육대책위(준)은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한다.

- 등록금고지서에 대학등록금인하 20%인하 표기하라!
- 정부가 나서서 대학의 3조원부담 대책을 세워라!
- 정부가 나서서 민주적 등심위 보장하라!

2014. 1.23/서울지역대학생교육대책위(준)

※ 별첨 : 1.10일 2014년 국가장학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논평

- 대학생·학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는
교육부의 2014년 국가장학금 지원안
- 성적기준 정책 변화(C학점 경고제) 미흡해
 - 정책 효과 의문인 셋째아이 이상 장학금 정책 재고해야
 - 등록금 부담 경감만이 아니라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는 정책 내놓아야

1. 교육부가 어제(1/10) '2014년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장학금 지급기준액(연간 450만 원) 전액지원 대상 확대(지난 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소득 1분위에서 올해는 2분위까지 대상 확대) △소득 3·4분위 연간 지원액 각각 337.5만 원과 247.5만 원으로 증가 △'C학점 경고제' 시행(2학기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소득 1분위 대학생들은 1회에 한해 C학점을 받아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연령 기준과 소득성적기준을 충족하는 셋째 아이 이상 신입생에게 국가장학금 전액 지원 등이다. 어제 발표된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은 전년도 보다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액수가 증가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한 지점이나 △미흡한 수준의 성적기준 정책 변화 △정책적 효용이 낮다고 평가받는 '셋째아이 이상 장학금' 지원방안 유지 △국가장학금 2유형 배정액 축소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

2. 성적기준 완화 정책이 나온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1분위 학생에 한해 단 1회 적용'하겠다는 것은 아르바이트로 인해 학습시간이 부족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단 한번의 '시혜'에 그치는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지,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다. '성적기준 폐지'까지 언급했던 작년 3월의 교육부 국정계획 실천과제, 소득 2분위까지 C학점경고제를 도입한다고 계획했던 작년 말의 교육부 내부 계획안에 비교해 보면 어제 발표한 'C학점 경고제'는 학생·학부모들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안이다. 더불어 최근 변화된 대학 상황도 반영하지 못하는 안이다.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평가에 학사관리 영역 분야가 들어가는데, A·B 학점 비율이 낮을수록 이 분야의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어 대부분의 대학들이 A·B 학점 비율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정을 모르지 않을 교육부가 성적기준 정책을 바꾸지 않는 것은 암묵적으로 장학금 수혜 대상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저소득층·서민 계층에게만이라도 성적기준을 전면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2013년 든든학자금(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대출잔액 통계에 따르면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대출잔액이 많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마련이 절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의 방증일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2014년도 예산안 분야별 분석 I' 자료에서 셋째아이 이상 장학금 지급의 정책효과나 불명확하다고 평가했다. △사업수혜자가 40~50대에 해당하여 출산이 완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연령대이므로 직접적인 출산 재고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고,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자녀 수가 많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모든 셋째아이 이상에게 동일한 금액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경우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에 장학금이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다는 것이다. 1,225억 원 규모의 '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예산을 저소득층·서민 계층의 성적 기준을 완화하는 데에 사용한다면 국가장학금 본연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좀더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3. 대학이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장학금을 확충해야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2유형 배정액은 작년에 비해 2,000억 원이 삭감된 5,000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만든 정책이었지만 지난 2년 간의 제도 운용 결과 대학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2유형에 따른 2013년 '등록금인하율, 장학금 확충액'은 2012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다. 교육부는 대학 참여가 저조하다고 2유형 예산액을 줄이는 방안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대학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 등록금을 인하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013년 기준 대학생 1인당 4년제 대학 연평균 등록금은 국공립 410만 원, 사립은 736만 원이다. 그리고 전체 대학생의 80% 이상이 사립대학에 재학 중이다. 등록금 부담 경감 완화 정책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등록금 인하 정책이 없다면 국가 재원 투입만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반값등록금본부와 안민석 의원(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국가장학금 2유형의 문제점 개선과 대학 등록금 인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지난 12월 공동으로 발의하였다. 현재 상임위에 회부되어 있는 이 법안에 대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한다.

4. 지난 1월 1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장학금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1,500억이 늘어났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했던 2014년 국가장학금 예산은 4조 원에서는 약 6천5백억 원이 모자라는 액수이다. 독일은 올해 가을부터 대학등록금을 전면 폐지한다. 독일의 몇몇 주가 받아왔던 학기당 500유로(한화 73만 원)의 대학등록금이 내년 9월부터 완전 폐지되는 것이다. 독일과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두 배 차이도 나지 않지만 등록금 수준은 말 그대로 천지차이다. 경제규모가 아니라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사회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등록금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과 교육부의 전향적인 정책 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참조 1 : 연세대2014년총학생회(당선자솔루션선본)/연세대부자학교펀드감시단/참여연대민
생희망본부 12.4일 공동 기자회견 자료

“전국의 대학들, 그동안의 등록금 인상근거와 적립금 관련 내용(적립·사용·투자·손익 현황
등) 학내 구성원들에게 투명하고 세세하게 공개해야”

－ 연세대 등록금 인상근거, 적립금 사용 및 투자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대법 승
소 확정판결 관련 연세대 학생대표와 참여연대 공동 기자회견

※ 2014년 연세대 총학생회장 당선자 이한솔(Solution선본), 또 연세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당선자 송준석(정의12), 부자학교펀드감시단 정준영·황서연 학우, 담당 조형수 변호사 등
참여

※ 향후 대학생단체들과 함께 전국 대학들에게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고, 민달팽이유니
온·참여연대 등은 공동으로 민자기숙사비 책정근거와 운영수익 등에 대해 12.4일 정보공
개청구 진행하고(연세대·고려대·건국대), 비공개시 2차 공익소송 예정

(문의 : 이한솔 2014연세대 총학생회장 당선자 010-3012-3854, 권지웅 민달팽이유니온 대표
010-5255-6422,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부자학교펀드감시단 정준영 학
우 010-9920-6305)

1. 안녕하세요. 귀 언론사의 발전을 빕니다.

2. 지난 11월 28일(목) 대법원은 연세대 김영민 학우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
현욱 변호사/담당 : 조형수 변호사)가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에 대해 원심 승소 판결을 유지하고, 연세대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행정소송은 2009
년 3월, 참여연대와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사립대학의 적립금 사용내역(투자내역 및 손익 현
황 등)과 등록금 인상 근거에 대해, ‘대학생·학부모들의 알권리 실현’과 ‘대학운영의 공공성·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제기했고, 2009년 12월 17일 1심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관련 활동
및 소송 경과는 아래 자세하게 표로 제시돼 있습니다)

3. 연세대 학생들과 참여연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등록금 문제 해결과 대학 운영의 민
주화투명화를 바라는 시민사회, 학생·학부모의 뜻을 수용한 당연한 판결로 생각하며, 특히
대학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주요 정보라 하더라도 고등교육기관의 투명성·공공성에 의거해

학내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도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고등교육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학생 주권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까지를 보장한 매우 뜻 깊은 판례가 형성된 것입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도 패소하고도 끝내 상고를 제기해 무려 5년간 소송을 끌어온 연세대학교 측은 그동안의 비공개, 불투명 행정에 대해 대학생, 학부모들에게 사과하고, 관련 정보를 즉각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4. 이에 당시(2008년부터) 이 활동을 함께 했던 연세대 "부자학교 펀드감시단" 소속 대학생들과(소송 당사자인 김영민 학우는 소송이 길어지면서 현재 군 복무 중임), 또 2014년 연세대 총학생회(솔루션 선본)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2.4(수) 오전 10:30, 연세대 정문 앞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를 짚고, △연세대는 관련 정보를 최대한 빨리 최대한 세세하게 공개할 것과, △또 전국의 사립대학들이 이번 판결과 같이 그동안의 등록금 인상근거, 적립금 관련 주요 정보를 스스로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5. 또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각 대학들이 등록금과 적립금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세부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계기이자, 각 대학들의 적립금 운용과 등록금 책정 과정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국의 대학들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바탕으로 스스로 등록금, 적립금 관련 주요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게 하는 활동을 전국의 대학생 단체들과 함께 전개해나갈 예정이며, 특히 최근에 문제가 크게 되고 있는 대학생 주거권 문제와 민자기숙사 이슈와 관련해 12월 4일 민자기숙사 문제가 심각한 연세대, 고려대, 건국대를 대상으로 민자기숙사비 책정 근거와 수익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비공개가 있을 시 바로 2차 공익소송을 제기할 계획임도 밝힙니다.

6. 또 우리는 정부와 교육부가 국민 세금이 직접 지원되고, 국민들의 피땀인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대학을 감시하는 행정부의 역할로써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립대학은 적립금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있으면서 등록금을 관례적으로 인상해 왔었고, 또 그렇게 과도하게 걷어들이는 등록금이 추가적인 적립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인해 그동안 대학생·학부모들은 엄청난 고통과 부담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1심, 항소심, 대법원이 일관되게 밝히고 있는,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게 원칙이고 사립대도 국가교육의 영역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사회공공기관의 의무에 반해서는 안된다"는 이번 판결의 취지를 비취봤을 때도 앞으로 고등교육기관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은 더욱 더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7. 그러한 고등교육의 공공성에 기반하여 이제는 시급히,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한 ‘진짜 반값등록금’이 국가와 대학 양측의 노력으로 구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국가의 획기적인 반값등록금 예산 증액과(2014년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2.8조에 더해 1.2조의 증액을 공약했지만, 현재 국회에는 0.4조만 증액한 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어 반드시 이를 시정해야 할 것임), 대학 당국의 합리적인 예·결산 책정, 그리고 적립금 및 법인 지원금 등을 활용한 등록금 자체 인하 조치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2014년 연세대 총학생회, 부자학교펀드감시단,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등은 등록금, 적립금, 대학생 주거권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관련 활동을 더욱 더 활발하게 전개해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 부탁드립니다.

※ 참조 : 2009년 3월 4일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당시 보도자료

적립금 자금운영 현황, 등록금 인상률 근거 등 비공개는 위법
등록금 관련 사용내역은 투명하게 밝혀져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는 지난 11월 3일 김영민 학생(연세대학교 재학)과 연세대학교에 적립금 자금운영 현황, 펀드 운용 현황, 등록금 인상근거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하여 부당하다고 판단, 행정소송을 청구하였다.(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세화, 담당변호사 조형수)

연세대학교는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항목의 정보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통보하고 비공개 하였다. 연세대학교가 비공개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2001년부터 현재까지 연세대학교의 적립금 사용현황과 내역, 사용목적, 규칙. (날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할 것)
- 2001년부터 현재까지 학교 예산의 투자내역과 수익률, 사용내역.
- 구체적으로 2003년부터 이화여대, 삼성과 함께 운영한 YES펀드의 현황(투자 내역, 투자 수익)
- 1997년부터 현재까지 연세대학교 자금운용위원회 회의록
- 2001년부터 현재까지 연세대학교에 들어온 기부금의 액수(일반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구분할 것)
- 매년 등록금을 인상하는 근거

또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년 9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연세대학교는 연세춘추를 통해 (10월 13일자) 자금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주요 기능, 자금운영목표와 투자원칙만을 공개하였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던 당사자들에게 공개하였다는 통보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학보에 실어 이것을 전부 공개한 것처럼 생색을 낸 것은 정보공개법을 무시하는 발상이다”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대학교는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곳인 만큼 그 공익적인 목적이 크기에 당연히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7조 3항에는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대학은 공공기관으로서 정보공개 법에 의거하여 등록금의 집행 내역을 모두 학생, 학부모들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을 통해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 사유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정립하고, 대학의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밝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참조 2 : 등록금 문제와 교육 문제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규정들

1. 헌법

제31조

-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 유엔 인권A규약(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⁶⁾ : 1966년 12월 16일 국제연합 제21회 총회에서 채택, 1976년 1월 3일 발효되었다. 한국은 1990년 7월 10일

6) 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안은 B규약이라고 합니다.

발효.

* 제13조

-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교육이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당사국은 나아가서 교육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자유사회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며, 민족간에 있어서나 모든 인종적, 종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한다.
-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 (a) 초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무상 의무교육으로 실시된다.
 - (b) 기술 및 직업 중등교육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중등 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다.
 - (c) 고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능력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개방된다.
 - (d) 기본교육은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초등교육의 전기간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가능한 한 장려되고 강화된다.
 - (e) 모든 단계에 있어서 학교제도의 발전이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적당한 연구·장학제도가 수립되며, 교직원의 물질적 처우는 계속적으로 개선된다.

3.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07.12.21]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11.9.15>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5>

④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제9항의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1.9.15>

⑥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1.9.15>

⑦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3.3.23>

⑨ 정부는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2년마다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⑩ 제1항의 등록금의 정수,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제8항의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 2013.3.23>

[전문개정 2011.7.21]

제12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21]

5. 사립학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양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임원) ①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5인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1964.11.10, 1990.4.7, 1997.1.13, 1999.8.31>

②이사중 1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된다.

③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정수의 4분의 1(단,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를 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④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제26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위원회(이하 "대학평의위원회"라 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위원정수는 5인 이상 홀수로 하고 대학평의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한다. <개정 2007.7.27>

⑤제3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추천하지 못하는 때에는 관할청이 추천한다. <개정 2007.7.27>

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7.7.27>

제15조(이사회) ① 학교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

③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2조의2(적립금)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

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성격에 따라 연구적립금·건축적립금·장학적립금·퇴직적립금 및 기타적립금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그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법인에 투자할 수 있다. <개정 2013.1.23>

1. 적립금의 2분의 1의 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취득
2. 적립금의 10분의 1의 한도에서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특허 등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④ 교육부장관은 해당 대학교육기관과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립금의 적립여부·적립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의 감가상각비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본조신설 2011.7.25]

5.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시행 2013.3.23.] [교육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교육부(대학장학과), 02-2100-626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제10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 2011.12.28>

제2조(등록금심의위원회) ①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정할 때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교직원(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해당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학부모 또는 동문(同門)을 포함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고, 학부모 및 동문 위원의 총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7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학생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8>

⑥ 삭제 <2011.12.28>

[전문개정 2010.12.2]

제2조의2(등록금 인상률의 산정방법) ① 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등록금의 인상률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학부와 대학원은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1.12.28>

② 제1항 외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12.2]

제3조(등록금의 면제·감액)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0.12.2>

1.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② 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③ 국공립 학교는 제2항에 따라 등록금을 감면할 때에는 수업료와 입학금 감면액(「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입학금이 면제되는 액수는 제외한다)이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수업료와 입학금 총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0.12.2>

④휴학자에 대하여는 휴학기간 중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을 면제한다. <개정 2010.12.2>

⑤학교의 수업을 전학기(前學期) 또는 전월(前月)의 전기간(全期間)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을 면제한다. <개정 2010.12.2>

⑥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은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않는다. <개정 2010.12.2>[제목개정 2010.12.2]

7.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3.6.12.] [법률 제11527호, 2012.12.11., 타법개정] 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4, 2011.12.31, 2012.12.11>

1. "정보"란 교육관련기관이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교육관련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시"란 교육관련기관이 그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에 대한 열람·교부 및 청구와 관계없이 미리 정보통신망 등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공개의 한 방법을 말한다.
4. "교육관련기관"이란 학교·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을 말한다.
5.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4조·「고등

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각급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6. "교육행정기관"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7. "교육연구기관"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5항에 따른 기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조사를 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교육관련기관은 그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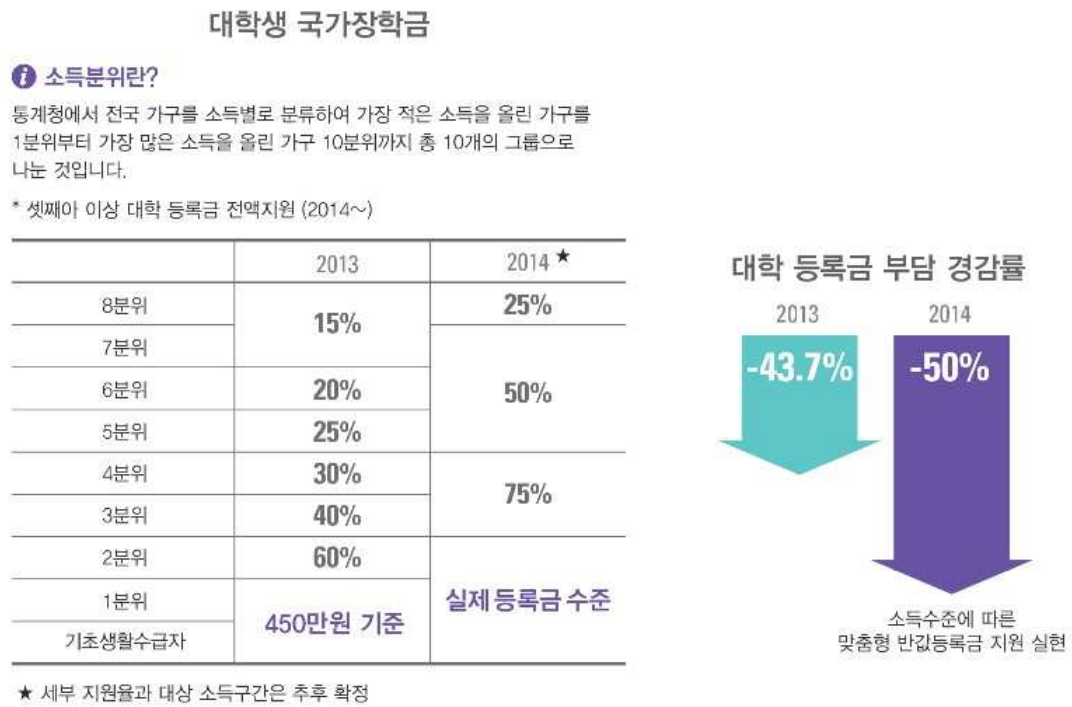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3.3.23>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현황에 관한 사항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7. 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
8.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 8의2.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9.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10. 학교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11.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12.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13.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 ② 교육부장관은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공시한 정보를 학교의 종류별·지역별 등으로 분류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별첨 1: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 보도자료(교육부, 2013. 3. 28)



□ 별첨 2: 2014년 국가장학금 등 예산안 관련 자료(출처 : 교육부, 2013. 11)

< I 유형 지급금액 및 소요예산 >

(단위 : 만원)

연도	성적 기준	구분	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소요재원
2013	현행 (B이상)	지급액	450	450	270	180	135	112.5	90	67.5	67.5	<u>2.14조원</u>
		지급률	(100%)	(100%)	(60%)	(40%)	(30%)	(25%)	(20%)	(15%)	(15%)	
2014안	현행 (B이상)	지급액	450	450	450	270	180	135	90	67.5	67.5	<u>2.66조원</u>
	C경고제 (기초~2분위)	지급률	(100%)	(100%)	(100%)	(60%)	(40%)	(30%)	(20%)	(15%)	(15%)	<u>2.82조원*</u>
증 감			-	-	180	90	45	22.5	-	-	-	

· ‘셋째아이 장학금 지원 및 경영부실대 신입생 미지원 등 절감분을 포함하여 2분위 이하까지 C경고제 적용

* (I 유형) 2.735조원 + 800억원(셋째아이 장학금 및 경영부실대 신입생 미지원 절감분) = 2.815조원

· 소요재원은 '13. 1학기 수혜인원을 활용하여 추산

<참고> '14년 예산 증액 세부산출 내용 및 성적기준 완화 시 소요액 추계

□ '14년 국가장학금 예산 정부안(3.185조원) 기준 I 유형 소요추정액 : 2.66조원

○ 성적기준 : B⁰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계
'14년 지급단가	4.5	4.5	4.5	2.7	1.8	1.35	0.9	0.675	0.675	
'14.1 학기	지급 단가	2.25	2.25	2.25	1.35	0.9	0.675	0.45	0.34	0.34
	수혜 인원	51,771	192,118	196,670	139,601	87,695	77,794	79,211	74,793	84,811
	소요 금액	116,485	432,266	442,508	188,461	78,926	52,511	35,645	25,243	28,624
'14.2 학기	지급 단가	2.25	2.25	2.25	1.35	0.9	0.675	0.45	0.34	0.34
	수혜 인원	45,703	173,797	178,475	126,488	79,536	70,538	71,952	67,959	77,255
	소요 금액	102,832	391,043	401,569	170,759	71,582	47,613	32,378	22,936	26,074
합계		219,317	823,309	844,076	359,220	150,508	100,124	68,023	48,179	54,697
										2,667,453

* '13년 1학기 수혜인원으로 추정하였으며, '12년 1~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인원 감소 반영

- '12년 국가장학금 신청현황 : ('12.1학기) 153만명 → ('12.2학기) 139만명

□ 국가장학금 I 유형 성적기준완화 소득분위별 산출근거(B→C, B→D)

○ '14년 소득분위별 지급률(안)을 적용했을 경우, 성적기준 B유지 시 2.66조원, C로 완화 시 3.25조원(+0.6조원), D로 완화 시 3.56조원(+0.9조원) 소요 예상

< 국가장학금 I 유형 성적기준별 소요예산 현황 >

(단위 : 백만 원)

소득분위	지급율 (안)	기준금액	B학점 기준	C학점 기준	성적 폐지 (D학점 기준)
기초	100%	4.50	219,317	269,200	294,907
1분위	100%	4.50	823,309	1,000,459	1,096,073
2분위	100%	4.50	844,076	1,029,251	1,127,683
3분위	60%	2.70	359,220	439,594	481,635
4분위	40%	1.80	150,508	183,893	201,480
5분위	30%	1.35	100,124	122,073	133,749
6분위	20%	0.90	68,023	82,786	90,704
7분위	15%	0.68	48,179	58,534	64,133
8분위	15%	0.68	54,697	65,902	72,207
합계			2,667,453	3,251,691	3,562,571

※ '14년도 지급율(안) 100%~15%, 기준금액 연간 450만원 기준

□ 별첨 3 : 든든학자금 상환 현황 자료

ICL 상환 현황

(단위 : 명, 억원)

소득분위구분	상환현황		대출잔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분위	113,455	2,456	193,936	9,030
2분위	87,330	1,395	153,642	9,885
3분위	61,155	882	109,011	7,678
4분위	39,094	585	73,622	5,541
5분위	31,932	481	60,201	4,535
6분위	31,511	443	56,094	4,116
7분위	29,917	451	56,205	4,074
8분위	1,335	19	3,081	187
9분위	1,003	20	3,364	215
10분위	853	14	3,520	197

※ 최종 대출학기의 소득분위 기준임 / 기준일 : 2013.10월말

'14년 국가장학금 등 예산안 관련 자료

1. 소득분위 산정방식 개선 자료 및 소득분위 산정방식 제도개선 후(종합소득세 활용) 실적

- ☐ '13.2학기부터 국세청 및 건강보험공단의 협조로 학자금지원관련 소득분위 산정 시,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종합소득 7,200만원 이상 자료를 반영하여 소득분위 산정
- ☐ '13-2학기 학자금지원 신청자 중 급여 외 종합소득 7,200만원 이상 대상자는 1,109명(9분위3명, 10분위1,106명)은 모두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2.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계획

- ☐ 대규모의 재정 투입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국가재정 여건과 세입전망 등을 고려할 때 '단계적 추진'이 불가피함
 -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등 정부재원 장학금* '4조원'을 '15년까지 확보하고,
 - 대학의 자체노력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여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완성 추진

3. '14년 국가장학금 I·II유형 사업비 배분 계획 및 II유형이 감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1 I·II유형 사업비 배분 계획

☐ (I 유형) 2.735조원

- (지원대상) 소득 8분위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하되, 대학 구조개혁 연계 강화를 위해 경영부실대학(9교)의 신입생에 대해서는 지원 배제
- (지원금액) 지원기준 단가는 45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소득분위별 지급률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상향 조정(1인당 22.5만원~180만원까지 증액)

☐ (II 유형) 4,500억원 (대학자체노력 연계지원 등)

II유형 구조 개편(안)

2013년		⇒	2014년(안)	
대학자체노력 연계지원	인센티브		대학자체노력 연계지원 + 버퍼 활용분	지방인재 장학금
6,000억원	1,000억원		3,500억원	1,000억원
7,000억원			4,500억원	

① 자체노력 연계 지원 : 3,500억원(대학자체노력 대응지원 및 I 유형 부족분 대비)

- 대학의 기존 자체노력 인정 및 '14년 추가 자체노력에 대한 인정비율 상향으로 대학의 자체노력 참여유도
- (인정규모) 「'13년 자체노력 지속분」의 50~60%와 「'14년 추가 자체노력분」의 100~120%로 구성하며, 자체노력 인정규모에 대해 매칭으로 지급
 - * '13년 인정규모 = '12년 자체노력 지속분(30%) + '13년 자체노력 추가분(100%)
- II유형과 각종 재정지원사업 평가의 연계를 강화하여 대학의 지속적 자체노력 유도 및 미참여 대학에 대한 패널티 부여
- I 유형 부족분 대비 버퍼 활용분 (200~500억원)

② (가칭)지방인재장학금 : 1,000억원

- 지방대의 자체노력 참여 유인과 지방대 육성 정책과의 연계 및 시너지 효과 제고 등을 위해 지방대학을 위한 별도 장학금 마련·추진
- II유형 참여 지방대학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대학은 우수 인재 유치·양성을 위해 장학금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자율적 활용
 - '14년 신입생부터 1,000억원 규모를 지원하고, '17년 완성을 목표로 지원대상 및 규모를 연차적으로 확대*
 - * ('14) 1,000억원(1학년) → ('15) 2,000억원(1~2학년) → ('16) 3,000억원(1~3학년) → ('17년) 4,000억원(전면시행)

【 지방대 지원 필요 사유 】

- II유형을 활용하여 우수학생의 지방대학 기피로 이어지는 문제점 개선하여 지방우수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완화하고 인재양성 기능 강화 보완
- II유형 참여대학 중 수도권 대학의 평균등록금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자체노력은 지방대학이 수도권 대학에 비해 훨씬 높아 지방대 참여 유인 및 우대 지원 정책 추진 필요

③ 인센티브 지원 시기 조정

- '14년 대학 자체노력이 우수한 대학의 인센티브는 500~1,000억원 규모로 설정하되 계획 대비 결산실적을 반영하여 '15년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

② II유형이 감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 등록금 부담경감을 위해서는 정부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대학의 협조 필수**

○ **대학의 자체노력 유도 및 적정수준의 등록금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제로 **II유형 유지 필요**

○ II유형을 폐지할 경우, 현재의 **대학의 자체노력 유지**가 곤란하며 등록금 인상 가능

※ 대학 자체노력 현황 : ('12년) 10,118억원, ('13년) 1,404억원 등 총 1조 1,522억원

* 국가장학금, 셋째아이 지원, 근로장학금 등 정부지원장학금 예산현황(국가장학금 예산)
: ('13) 29,419억원(27,750억원) → ('14정부안) 35,253억원(31,850억원)

* 별첨 : 박근혜 정부 1년 청년 관련 공약 이행 평가서(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분야	박근혜 후보 공약	세부공약	공약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찬성, 판단유보, 반대, 모니터안함)	공약이행 개별평가 (공약대로 이행완료/ 공약대로 이행 중/ 진행안함/ 폐기 등으로 구분)	공약 이행 평가의 근거 (공약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입법, 예산 등이 반영되고 있는 등에 근거한 평가)	비고- 공약과 공약이행 상의 문제점 요약
교육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1)고교무상교육을단계적으로실시하여,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대금을무상지원 -2014년부터매년25%씩확대하여2017년에전면무상교육 실시(2014년25%,2015년50%,2016년75%,2017년100% 실시) →「교육기본법」개정및관련예산반영 ※사립자율고와특목고의무상교육포함여부는사회적합의가필요하므로추후검토	찬성	진행안함	고교무상교육을 2014년부터 하겠다고 해놓고 일방적으로 2015년부터로 변경함. 2014년 관련 정부 예산을 0원으로 한푼도 배정하지 않음. 대표적인 공약파기 사례로 평가되고 있음.	그런데, 2015년부터 공약을 이행한다고 해도 문제인 것이 정부는 2013년도 계획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서 순차적인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렇게되면 안 그래도 빠듯한 지방교육 예산에서 다른 부분을 줄여서 고교 무상교육을 해야되는 문제가 발생함
교육	2014년까지대학생반값등록금실천 ①소득연계맞춤형국가장학금	2)소득하위80%까지'소득연계맞춤형국가장학금'을지원하여,대학등록금부담을절반으로경감 -소득1-2분위:"전액무상"(100%지원),소득3-4분위:"3/4"(75%지원),소득5-7분위:"반값"(50%지원),소득8분위:"1/4"(25%지원),소득9-10분위:든든학자금(ICL)대출자격부여 -2014년대학등록금실질적반값정책완성 →국가장학금예산추가확보 →든든학자금(ICL)제도개선 →학자금대출이자경감지원을위한예산확보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개정	찬성	변질되어 이행 중	2014년 약속했던 국가장학금 예산 4조원을 맞추려면 2013년 2.8조 예산안에 비해 1조2천억원을 늘려야 했는데, 작년 정기국회에 정부가 낸 예산은 4천억 증액안(셋째아이등록금지원 예산은 제외)에 그침, 국회심의과정에서 5천5백억으로 최종 증액되는 것으로 조정되었지만, 그 역시 공약에 한참 못미침. 또 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서 제시됐던 국가장학금관련 성적 기준 완화를 b이상에서 c이상으로 완화하지 않고, 소득1분위 학생에 한해 8학기 중 단 1회만 c학점인 경우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극히 제한적으로 완화한 것도 공약을 변질시킨 것임	특히, 원래 공약에 보면, 소득 1-2분위 : "전액 무상" (100%지원), 소득 3-4분위 : "3/4" (75%지원), 소득 5-7분위 : "반값" (50%지원), 소득 8분위 : "1/4" (25% 지원) 으로 되어 있는데, 소득 2분위까지 등록금액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았음. 실은 현재 1분위 국가장학금 최대 지급액인 450만원의 100%인 450만원만 지급한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액무상이라고 표현함. 이는 의도적 과장이거나, 공약의 변질 둘 중의 하나에 해당할 것임. 또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소득 8,9,10분위는 icl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고 했지만, 이 역시 이행하지 않고 있음. 현재도 대학생 전원과 학부생 중 소득 8분위 이상은 취업후학자금상환제(든든학자금/icl)을 이용 못하고 있음. 또 국가장학금 유형2를 통해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충을 꾀하겠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유형2를 통한 등록금 인하는 거의 실효성이 없음. 법적, 협약을 통한 강제를 거의못함. 작년, 올

						해 실제 등록금 인하율을 1%안팎에 그치고 있는 것임.
교육	2014년까지대학생반값등록금실천 ②학자금대출이자제도화	3)학자금대출이자실질적제로화추진 -든든학자금(ICL)과일반상환학자금이자율의단계적인하를추진하여,5년내물가상승률반영시실질적제로화추진 -군복무기간중대출이자면제	찬성		일단 군복무기간중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공약은 민주당 장병완 의원 법안이 작년 상반기 통과됨에 따라 작년 5월 10일부터 이자 면제는 확정됨. 이 부분은 공약대로 이행되었다고 평가가 가능할 것이지만, 야당의원 법안이 통과된 것이 그 근거가 되었음.	그러나, 든든학자금(ICL)과 일반상환학자금 이자율의 단계적 인하를 추진하여, 5년내 물가상승률 반영시 실질적 제로화 추진한다는 공약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학자금 대출 이자가 2.9%로 동일해서 단계적으로 인하하지도 않았고, 공무원이나 공기업 등 자녀들처럼 무이자대출을 바라는 학생-학부모들의 요구에도 부응하지 못함.
교육	대학 기 숙사 확 충 및 기 숙 사 비 인하	4)철도부지위에기숙사를건설하여공급하는행복기숙사사업을실시하여,기존사립대학기숙사의1/3가격으로기숙사제공 5)국립대학의임대형민자사업(BTL),사립대학의용자지원,국토부(LH)·서울시의임대주택지원방식등을통해기숙사수용률을현재18.3%에서30.0%로확대 6)사립대기숙사비(민자기숙사의 경우 월28~40만원)20~30%인하유도 -신규설립기숙사의경우건설비일부지원및저리용자지원 →사학진흥기금등대학기숙사건설관련예산확대 →행복기숙사사업은수도권을중심으로실시하고단계적으로전국확대	4)는기숙사확충의취지는찬성이지만안정성,부지확보등의문제로현실성이떨어짐 5)에서민자사업은문제가있음 6)기숙사비인하는찬성		철도 부지위에 기숙사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행복기숙사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해져 폐기됐다고 봐야 하고, 민자기숙사는 턱없이 높은 기숙사비로 원성을 사고 있는 데 그것을 지원한다는 것은 공약 자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임. 또 사립대학 기숙사비를 2-30%인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기숙사비를 그렇게 인하한 대학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역시 공약 미이행 사례로 볼 수 있음.	국정과제에 제시되어 있는 사립대학 공공기숙사 지원은 일부 이루어지고 있지만, 부지 등의 문제로 속도가 더디고, 연합공공기숙사도 이명박 정부때 1곳을 짓기 시작했고, 한국장학재단이 1곳을 지을 계획이라 아직 입주도 못하고 있음. 무엇보다도 공공, 대학직영 기숙사를 많이 지어야 함에도 그런 대책이 부족하고, 특히 심각한 민자기숙사, 사립대학 기숙사비 인하를 위한 대책이 거의 없는 것이 문제임. 공약부터 문제인데다 그마저도 이행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임.
교육	대학 재 정 지 원 대폭 확 대	7)대학에대한정부재정지원규모를GDP대비0.7%에서1%(OECD평균수준)로대폭확대 →고등교육재정추가확보	찬성		고등교육분야 예산이 2013년에 비해 1조원쯤 증가한 것은 긍정적으로 공약이행 평가 가능. 그러나 지방교육세처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아니라면 앞으로도 고등교육 예산의 안정적 확대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	그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같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 이 법은 현재 야당이 제출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국회 교문위에서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음.
민생	320만채 무불이행 자의신용 회복지원 ①국민행	8)18조원규모의'국민행복기금'설립 -금융회사및민간자산관리회사가보유한개인의연체채권을매입하고,신용회복신청자를대상으로채무를조정하여장기분할상환유도 -채무조정시도덕적해이방지를전제로일반채무자는50%,	찬성		원래 공약에는 320만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으나 작년 3월 출범할때는 32만명만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공약 파기에 가까운 공약 축소논란이 있었고, 실제로 국민행복	

	복기금설 립	기초수급자처럼어려운분들은70%까지채무를감면하여상 환부담대폭완화			기금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행복 기금 지원대상) 1/10도 되지 않아 큰 논란이 인 바 있음. 그리고 채 무자 친화적이거나 최소한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서 객관적이어야 할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자 금융기 관의 입장이 과다 반영되어서 여 러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고, 파산 면책된 채권에 대해서도 행복기금 이 추심을 진행해 문제가 되기도 했고, 이에대해 엔지오들이 금감원 에 신고도 진행한 바 있음.	
	321만채 무불이행 자의신용 회복지원 ②프리위 크아웃제 도확대적 용	9)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 워크아웃제도’의 적용대상 을 확대(현행 채무불이행 기간 연속 30일 초과 90일 미만 → 1년 이내 연체일수 총 1개월 이하)하여 다중채 무자의 조기 신용회복을 지원	찬성		전체적으로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이 활성화된 것은 사실이나, 신용 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대상 확대는 공약대로 이행됐다해도 그 내용이 적극적으로 확대됐다고 보 기는 어려움	공약에는 채무불이행 기간 연속 30일 초과 90일 미만 → 1년 이내 연체일수 총 1개월 이하로 대상을 확대한다고 했고, 현재 신복위 프리워크아웃은 현 시점에 서 연체일수가 30일 이하라해도 최근 1년 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연소득 4천만원이하이면 신청가능한 것 으로 공약이 비슷하게 이해됨. 다만 연 소득 4천만원 이하를 조건이 부과되어 있어서 여전히 대사확대에는 한계가 있음
민생	서 민 의 과다채무 해소	10)‘국민행복기금’을활용하여1인당1,000만원한도내에서 금리20%이상의고금리대출을가지고있는다중채무자에대 하여저금리장기상환대출로전환	찬성		캠코의 기존 바뀐드립론과 국민행 복기금을 통해 일부 시행하고 있 음. 하지만 천만원 이하, 연체가 없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등이 공 약부터 부과됨으로서 실제로는 이 용자가 많지 않은 문제가 발생	
민생	개인신용 평 가 의 공정성과 정 확 성 제고	11)금융이용자에대한신용평가결과통보의무화하고,이 의제기경로를제공(항변권)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개정	찬성		공약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음	금융이용자에 대한 신용평가 결과 통보 를 의무화하고 이의제기 경로를 제공하 고 항변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신용정 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처 리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제출된 법안 이 없음.
민생	학자금대 출 부담 경감	12)학자금대출연체채무의경우‘국민행복기금’이일괄매입 하여취업후에채무를상환할수있도록일정기간동안추심을 중단	찬성		국민행복기금 적용 대상자가 공약 의 1/10수준으로 떨어지는 과정 에서 학자금 대출관련 지원자도	해마다 학자금 대출자가 70여만명에 달 하고 그 중에 연체자가 8만명에 달하 는 상황, 또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해

		<p>-채무상환능력에따라최대원금의50%까지감면해주고장기분할상환하도록부담을경감</p> <p>-2010년시행이시작된'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제도(ICL)'이전제도로대출을받은채무자에대해서,ICL대출로전환할수있는선택권부여</p>			<p>그 대상이 대폭 줄어들어 공약 내용은 찬성이나, 효과는 미미해짐. 8만여명 가까운 학자금 대출 연체자가 발생한 상황이고 해마다 그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국민행복기금이 최근까지 지원한 학자금 연체자는 235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p>	<p>신용유의자까지 되는 대학생이 2013년 기준 4만여명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2천여명만 지원하는 것은 공약 후퇴를 넘어, 그 자체로서도 비판받아 마땅한 상황. 학자금 대출 연체자 전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함.</p>
민생	<p>대부업을 금융감독망에 포함 하 여 소 비 자 보호강화</p>	<p>13)대부업을금융감독원의공적감독대상으로편입하고,일정한자본금및인적요건을부과하여무자격업체의난립을방지</p> <p>14)중소대부업체의대형화를유도하여소형업체난립에따른경쟁질서훼손과소비자피해방지</p> <p>15)대부업자율규제기구를지정하고,금융감독원업무를분담하도록하여실효성있는감독체제구축 →「대부업법」개정</p>	<p>13)찬성</p> <p>14)취지에찬성</p> <p>15)반대(자율규제에반대)</p>		<p>대부업을 금융감독원의 공적 감독 대상으로 편입하고, 일정한 자본금 및 인적 요건을 부과하여 무자격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중소 대부업체의 대형화를 유도하여 소형업체 난립에 따른 경쟁질서 훼손과 소비자 피해 방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일반적인 감독은 지자체가 하고, 자산총액이 100억이상이거나 2개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의 경우 등만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범주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공적감독 대상으로 다 편입하겠다는 공약이행은 이루어지지 않음. 금융당국이 임의로만 조사를 할수 있는 것임. 중소기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위한 자본금 요건 강화등은 야당의원들의 법안 제출에도 불구하고 공약이행이 되지 않음. 대부업 감독-감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위해서는 금융당국과 지자체가 협조하고, 전문검사인력 확충도 필요한데, 이 역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p>	<p>대부업자율규제기구를지정하고,금융감독원업무를분담하도록하여실효성있는감독체제구축하겠다는것은대부업자들의자율규제에의존하겠다는것으로공약자체가부당한내용임.다만,작년말여야의원들의공동노력에의한법안통과로대부업금리가34.9%까지떨어진점과, 다만, 대부계약서에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명시하도록 하고, 안전행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 등의 현황 및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하고, 최근 5년 이내에 이자율 제한 위반,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처분 사실을 공개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은 의미가 있음.</p>
민생	<p>통 신 비 부담 낮추기 ① 요금 인하</p>	<p>35)이동통신가입비폐지,소비자선택권강화,서비스경쟁활성화등을통한요금인하유도로통신비용부담대폭경감</p> <p>-모든이통요금제에보이스톡등무선인터넷전화(m-VoIP)허용</p>	<p>찬성</p>		<p>가입비를바로폐지한다고했으나단계적인하로국정과제에서바뀌었고,실제이동통신3사의로비로이공약은변질되었다고봐야함.(지난해이통3</p>	<p>공약과별개로,국정과제에서추가로제시된,기존이동전화보다2~30%싼알뜰폰서비스가활성화될수있도록알뜰폰사업자가이동통신사에제공하는도매대가인하등을</p>

	<p>-이동통신선불요금이용자비중확대 36)요금인가심의과정을투명하게공개 →「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 제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p>		<p>사는40%를인하했으며올해50%를 추가로인하할계획,2015년에는완전 히폐지한다는입장이지만명백한후 퇴),그리고더중요한것은다른직접적 인통신비인하(문자메세지요금인하, 기본요금폐지또는인하,스마트폰등 정액요금제인하)를위한가시적인조 치가이행되지않고있는것임.또요금 인가과정을투명하게공개한다고했 으나전혀공개하지않고있으며(현재 참여연대에서이동통신요금원가공 개소송항소심까지승소했고,요금인 가과정에대한자료공개판결도나옴), 미래부최문기장관은국감에서원가 및인가관련자료를공개하겠다고하 고이를번복한바있음. 12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는 보도자료를 통 해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 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이하 트래픽 관리기준) 을 발표하며, “2014년까지 모든 스 마트폰 요금제에서 무선인터넷 전화(mVoIP)를 허용하겠다고 밝 힘. 그러나 mVoIP 요금제는 '기본 적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 할 사항'이라고 하고 있음. 이는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망에 위해가 되지 않 는 기기 또는 장치를 차단하거나 콘텐츠 등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 에 따라 합법적인 트래픽을 불 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트 래픽 관리기준의 기본 원칙과 배 치됨. 미래부도 언급했듯이, ‘서비 스의 품질과 용량’은 “유선인터 넷에서 속도에 근거한 요금제와 무선인터넷에서 요금제 등에 따라 기본 제공 데이터 용량을 달리하</p>	<p>추진하여이동통신시장의요금경쟁촉진계 획도실제로는이동통신3사의알뜨론도매 대금인하로이어지지않고있음.알뜰폰사업 자들은계속망도매요금인하를호소하고있 는데,이역시이행되지않고있는것임.또,미 래부가올해,맞춤형요금제와데이터사용량 이많지않은가입자를대상으로한2만원대 스마트폰요금제출시를추진하고있는부분 은의미가있음.또미래부는"이통사들과스 마트폰기본료를단계적으로낮추는방안을 논의하고있다"며"1분기안에결과물이나오 도록추진하고있다"고밝힌바있음.</p>
--	---	--	--	---

					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특정한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의 차단, 차별이 요금제의 하나로 해석되어서는 안됨. 미래부는 향후 다른 서비스 등에서 유사한 논란을 반복해선 안될 것이며, 공약대로 이동통신요금인하 등을 통해 통신비 절감 정책을 서둘러 이행해야 할 것임	
민생	통신비 부담 낮추기 ②스마트폰 가격 인하	37) 단말기유통경로다변화와 보급형 스마트폰 생산 및 보급 확대 등으로 스마트폰 가격 인하 유도 38) 스마트폰 유통 시장에서 이용자 간, 지역 간 과도한 차별금지 →「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 제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찬성		현재 초고액의 스마트폰 단말기 비용은 전혀 인하되지 않았고, 그런 이유로 인해 보조금 대란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음. 보조금 불법과 보조금 대란의 주요 원인은 초고액의 스마트폰 단말기 요금이고, 외국보다 2-3배씩 높게 과는 문제점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손질을 보지 않고, 보조금만 단속하겠다는 것임. 그래서 스마트폰 유통 시장에서 이용자 간, 지역 간 과도한 차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제출된 상황(새누리당 조해진의원안)이고, 이를 정부여당이 밀고 있지만, 이 법안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엄격히 규제해 소비자들의 편익을 오히려 침해한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음. 또 알뜰폰 시장이 예전에 비해 활성화되고 있지만, 시장 점유율이 4%대라서 여전히 미미한 상황이지만, 알뜰폰 시장에 대한 지원과 알뜰폰 시장을 통한 저렴한 단말기 유통 활성화도 미미한 상황임. 당연히 중저가 단말기도 활성화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알뜰폰 시장과, 휴대폰 개통 시장에 대기업이 뛰어들어 휴대폰 중소 대리점-판매점과, 알뜰폰 중소 사업자, 통신 소비자 협동조합 등에서 강	

					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민생	통신비부 담낮추기 ③데이터 요금제도 입	39)데이터기반요금제도실현 →「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제정 →「전기통신사업법」개정	찬성		데이터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나 현재 데이터 기반 요금제는 출시되지 않았음. 요전히 소비자들은 음성, 문자, 데이터 등의 요금을 혼합하여 과도하게 지출하고 있음. 특히 스마트폰, 엘티이폰 정액요금제는 통신비 부담 폭증의 주요 원인인데도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와 기본요금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 과감하게 기본요금을 폐지하거나 스마트폰 정액요금제를 대폭 하향 조정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데이터기반요금제로 전환하여 음성, 문자 등에 대한 추가 이용료 부담없이 저렴하고 적절한 요금제로 가야하는데, 이 역시 공약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 음성, 문자 등의 통화료에 집착하는 이통3사와 이를 비호, 묵인하는 통신당국의 소극적인 태도가 문제임.	
노동/ 일자 리	상시·지 속적 업 무 정규 직 고용 관행 정 착	50)상시적이고지속적인업무를담당하는비정규직근로자는실질적인고용안정이이뤄질수있도록함. -공공부문부터상시·지속적인업무에대해서는2015년까지정규직으로전환하도록함. -대기업의정규직전환유도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개정	찬성	변질되어 이행 중	공공부문정규직전환관련기한도사라지고예산도책정되지않음.대기업의전환유도정책으로고용형태공시제도를제시하고올3월부터시행할예정이나,불이행에대한처벌규정이없어,제도의실효성을기대하기어려움.	
노동/ 일자 리	사내하도 급근로자 보호	51)「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법」을제정하여사내하도급근로자가원청업체정규직근로자와동등·유사한업무를할경우차별적처우금지 52)사내하도급계약만료시에사내하도급사업주가교체되더라도기존업무가유지되는경우에는사내하도급근로자의고용보호 53)법원에서불법과건판결을받은사업장을대상으로특별	반대	변질되어 이행 중	공약에서행정명령,특별근로감독등문제해결의지를보였으나,이후공약이축소되고불법과건의해결과관련한근진전없음.현대차,GM대우등사안과관련된주요사업장에대한수사,노동행정지지부진함.삼성AS기사사건에서는불법과건에무혐의결정을	현재 여당과 정부가 추진 중인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은 불법과건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법으로 판단됨. 현대차, GM대우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이나 해결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움.

		근로감독 실시하여 동일한 불법과건 확인 시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하도록 행정명령 →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법」 제정 → 법원에서 불법과건 판결 받은 사업장 특별 근로감독 실시			내려오 하려사 측에 게면죄부를 주고 있음.	
노동/ 일자 리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 적용확 대	54) 월급여 130만원 미만(2013년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국민연금보험료를 100% 정부가 지원하여 사회보험 적용 확대 → 비정규직 사회보험 지원 사업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200여 만명의 보험료 정부 지원	찬성	변질되어 이행 중	초기 100% 지원에서 50% 지원으로 지원폭이 축소되고, 예산도 확인하기 어려움.	
노동/ 일자 리	특수고용 직근로 자 산재 보험 및 고용보 험가입 확대	55) 특수고용직 근로자 현실에 맞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제도를 설계하여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대 56) 특수고용직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 「산재보험법」 개정하여 특수고용직 근로자 적용 대상 포함 → 특수고용직 근로자 현실에 맞는 고용보험 제도 신설	찬성	공약대로 이행 중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억제하는 법안은 의원 입법으로 발의되었으나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대한 법안은 제출된 바 없음. 고용노동부의 2014년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을 적용하되, 적용직종, 적용방식, 보험료 부담주체 등은 노사정 논의를 통해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되어 있음. 현재 노사정 관계가 과행임에 따라, 결정이 난 땅해보임.	노사정 합의, 의견수렴 등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할 문제임.
노동/ 일자 리	최저임 금인상 기준을 마련하 여근로 자 기본 생활보 장①최 저임금 산정기 준개 선	57) 최저임금 결정 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여기에 노동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소득분배 조정분을 더하도록 최저임금 인상 기준 마련 → 「최저임금법」 개정	판단유보	공약대로 이행 중	관련 법을 제출하고, 올해 적용 최저임금 인상폭이 예년에 비해 큰 것은 사실이나, 예년보다 인상폭이 큰 것도 이명박 정부 때 최저임금 인상폭이 현저히 작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함.	경제성장률이 나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임금인상은 명목임금의 상승이지, 실질임금은 변동 없음. 공약상 표현은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최저임금 동결'임.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인상폭과 중장기적인 최저임금 인상 계획이 필요함.
노동/ 일자 리	최저임 금인상 기준을 마련하 여근로 자 기본 생활보 장②근 로감독 강화	58) 최저임금 제도가 노동 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되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반복해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찬성	진행안함	징벌적 배상 제도가 핵심이었으나, 현재 제출된 법안 없음. (민주당 한정애의원실에서 의원 입법 발의함)	

노동/ 일자 리	청년들을 위한 공 공 부 문 일 자 리 확대	59)경찰,소방관,복지분야등일자리대폭확충 60)공공부문에컴퓨터통신보안을위한인력채용기준을제 시하여공공부문통신보안강화및청년층일자리확대 →교육,안전,복지관련공무원단체적증원 →공공부문청년층채용을공공부문평가에반영	찬성	공약대로 이행 중	올해부터 본격 채용될 것이므로, 당장 정책을 평가하기는 어려움. 문제는 일자리의 질이며, 창출된 만큼의 인원이 퇴직할 수도 있음.	방향에는 동의하나, 공약과 국정과제 모두 구체성이 떨어짐. 특히 일자리의 질을 판단하기 어렵고, 정책적으로 추진 하고 있는 시간선택제일자리와 맞물려, 나쁜일자리의 청년할당도 우려됨.
노동/ 일자 리	고용안정 과일자리 지키기① 정년 60 세연장	61)임금피크제와연계하여정년을60세로연장 →60세정년법제화를위한「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 고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	판단유보	공약대로 이행 중	정년은연장되었으나정년연장에따 른임금체계개편을의무화해서노동 조건이악화되는것이우려됨.정년연 장의혜택이전노동자들에게확대되 어야하나,단계적실시에있어대기업 과공공기관등은2016년실시인데,지 자체가2017년시행인점도공공기관 이선도해야할책임을방기하는것으 로보임.	
노동/ 일자 리	고용안정 과일자리 지키기② 경기변동 에대비한 고용안정 및정리해 고요건강 화	62)정리해고전업무재조정,무급휴직,근로시간단축등기업 의해고회피노력의무강화 63)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를도입하여일이많을때초과근 로시간을저축하고,경기불황기에임금으로지급받는방식으 로경기변동에대비한고용안정도모 →「근로기준법」의정리해고제도관련규정개정	62)찬성 63)반대	공약대로 이행 중		회피노력을 강화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 나, 보다 근본적으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강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저축계좌제도 는 정리해고 방지와 관련해 실효성이 의심스럽고, 오히려 장시간 노동을 유도 할 수도 있음. 고용안정이 보장되어야 현재의 노동과 미래의 임금간의 교환이 성립하는데, 한국과 같이 불안한 고용을 전제로는 둘 간의 교환이 불가능함. 근 로시간저축계좌제도는 시행하기 어려움.
노동/ 일자 리	고용안정 과일자리 지키기③ 대규모정 리해고시 고용재난 지역선포	64)대기업또는특정업종에서대규모정리해고발생시‘고용 재난지역’으로선포, 정부에서특별예산지원을통해정리해 고피해최소화 65)‘고용재난지역’선포시기준고용보험및지자체예산과정 부의재정지원을집중적으로투입하여정리해고자전직훈련, 생활비,재취업지원을실시 →고용재난지역선포시에산지원규정등신설	판단유보	공약대로 이행완료		쌍용차정리해고때도평택을고용개발촉진 지구로지정했으나, 별다른효과없었음. 사례에서보듯이지역을단위로한경제적지 원은제도의실효성이의심스러움.정리해고 를억제할수있는제도개선및고용보험강화 등이급선무임.
노동/ 일자 리	근로시간 단축및일 자리나누 기/동반 성장전략 추진	68)대기업과공공부문에서근로시간단축과청년층일자리 창출을연계하는일자리나눔형근로시간단축프로그램운영 69)근로시간단축을위해근로기준법상초과근로시간한도 지키기,휴일근로초과근로시간산입,근로시간특례업종의 축소,장시간근로를강제하는교대제개편등정책추진 →「근로기준법」의초과근로시간규정보완및근로감독강화 →일자리나눔형근로시간단축정책지원	찬성	공약대로 이행 중	방향은 좋으나, 각론에서 제도적 한계, 사측의 회피가능성 등이 있 으며, 이에 대한 보완책이 없음. 특히 중요한 것은 노사정의 합의 인데, 이부분은 해결이 난망해보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노사간의 대 화가 필요하며, 정부는 노사간의 합의를 추진한다고 했으나, 노사정 관계 파행의 책임은 박근혜정부에게 있음.

MEMO	
------	--

MEMO	
------	--